

#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김수암·조정아·이우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통일 종합정보 구축(5/5년차)

#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김수암·조정아·이우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북한·통일 종합정보 구축(5/5년차))

KINU 연구총서 16-23

인 쇄 2017년 11월

발 행 2017년 1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손기웅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8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02-6401-8891)

ISBN 978-89-8479-888-5 93340

남북 통일 정책[南北統一政策]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7031762

가 격 12,000원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발간사 .....	ix
요약 .....	xi
<b>I. 구술 개요 및 해제 .....</b>	<b>1</b>
1. 구술 작업 개요 .....	3
2. 구술 내용 특징 .....	4
3. 일러두기(내용, 형식) .....	21
<b>II.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b>	<b>23</b>
◇ 손재식(孫在植) .....	25
1. 1980년대 초반 시범사업 등 대화제외와 북한의 반응 .....	26
2. 북한의 수해지원 제외와 이산가족 등 교류의 돌파구 마련 ..	31
3. 대북 포용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	34
4.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통일연구원의 역할 .....	39
5.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20개 시범사업의 입안 과정 .....	40
6. 남북적십자 접촉, 남북경제회담 및 체육회담의 전개과정 ..	43
7. 통일의 장애요소로서의 북한 핵문제 .....	49
◇ 이세기 .....	53
1. 통일부 장관 임명 배경 .....	54



##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2. 재임기간 남북관계 .....	56
3.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의 남북 예술공연단 교환공연 .....	57
4. 반동회의 30주년 기념회의 참석 .....	58
5. 북한 손성필과의 접촉과 막후 대화창구 마련 .....	60
6. 중국 오학겸과의 인연 .....	64
7. 88라인과 남북관계 .....	67
8.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태동 .....	68
9. 향후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관련 고언 .....	70
◇ 최영철 .....	75
1.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임명 배경 .....	76
2. 재임기간 정세 및 통일 환경 .....	79
3. 남북관계 발전과 대미 관계 .....	82
4. 북한 김달현 부총리의 방남 .....	83
5. 남북관계에 대한 부처 간 이견 .....	86
6. 이인모 씨 북송문제 .....	87
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훈령조작사건 .....	90
8.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 .....	95
9. 제1차 북핵위기 발생과 남북관계 .....	97
10. 재임기간 통일원의 위상 .....	98
11.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조언 .....	99

# 목차

◇ 한완상 .....	105
1. 시대적 상황 .....	106
2. ‘문민정부’ 출범과 공직 수행 결심 .....	111
3.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	114
4. 국제적 테탕트 흐름과 남북관계 전망 .....	116
5. 이인모 노인 송환 결정 .....	118
6.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파장 .....	128
7. 남북관계 타개의 지렛대 .....	133
8. 정부 내부의 갈등과 강경노선으로의 선회 .....	137
9. 북핵 문제의 본질 .....	144
10. 문명사적 관점에서 본 사드 배치 문제 .....	147
1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핵 해법 .....	151
◇ 김덕 .....	157
1. 1차 북핵 위기 당시의 상황 .....	158
2.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김일성의 사망 .....	162
3. 북폭론과 제네바 합의 .....	167
4. 김일성 사후 북한 정세 전망과 ‘북한 붕괴론’ .....	170
5.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관계 .....	173
6. 북핵 문제의 해법 .....	176



##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 ◇ 이흥구 ..... 181
  - 1. 협치의 모범사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성안을 위한 노력 ..... 183
  - 2.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일원 장관 직책의 원만한 수행 ..... 185
  - 3. 처음 정부에 들어와 모셨던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 188
  - 4. 행정부 내 통일·대북정책의 분업 및 협업 ..... 189
  - 5. 국회에서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통과 당시 분위기 ..... 191
  - 6. 1990년 통일원을 떠나고 ..... 191
  - 7. 2년여 통일원을 떠나 있을 동안의 일들 ..... 193
  - 8. 1차 핵 위기상황 ..... 195
  - 9. 통일원 장관으로 시작하여 주미대사로 끝맺은 공직생활 ..... 200
  - 10. 미국의 중요성을 알아야! ..... 201
  
- ◇ 이동복 ..... 209
  - 1. 남북회담 분야 종사 계기와 남북회담사무국의 구성 ..... 210
  - 2. 남북한 막후 접촉과 이후락 평양 방문의 성사 ..... 212
  - 3. 이후락의 평양 방문과 7·4남북공동성명이 만들어지기까지 ..... 216
  - 4. 미·중 데탕트 시기, 남북한 경제 및 안보 상황 ..... 221
  - 5. 당시 대북정책 결정과정과 중앙정보부의 위상 ..... 225
  - 6. 관련 부처 사이의 관계와 대북정책의 실행 ..... 228
  - 7. 독일 통일의 정치적 교훈과 한국의 대북정책 수행체계 ..... 232
  - 8. 국가심리전 총국장과 남북회담사무국 국장직 수행 ..... 235
  - 9. 중앙정보부 산하 남북회담사무국의 위상과 심리전 업무 ..... 239

## 목차

10. 자유아카데미 학생 모집과 활동 .....	241
11.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작성 .....	242
12. 국가안전기획부 특보로의 복귀 .....	246
13.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이인모 송환 논란 .....	248
14. 남북기본합의서 막전막후와 훈령조작사건 .....	251
15. 대북정책 관련 부처 사이의 관계와 정책 추진 .....	256

통일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구술 채록사업은 「북한·통일종합정보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다양한 유형의 통일 및 북한 연구 자료를 체계화하는 한편 새로운 연구 자료를 발굴·생성하여 <KINU 디지털 통일·북한 연구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아카이브는 문헌, 공간, 시각, 구술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술자료는 질적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콘텐츠로 다양한 컬렉션 형태로 향후 지속적으로 기획·발간될 예정입니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하는 구술 컬렉션의 첫 주제는 ‘통일정책사’입니다.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이란 점에서 ‘구술’을 통해 통일정책사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는 대북·통일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정책 수행 경험을 구술 형태로 채록하여 통일정책사를 생생한 경험담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실 나열 중심의 남북관계사, 통일방안의 연대기적 서술에서 탈피하여 실제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사를 시기별·이슈별로 새롭게 조명하고 그 내용을 연구 자료로 보존하는 데 이 구술 컬렉션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대북·통일정책 수행을 주도했던 고위 관료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것은 대한민국 통일정책사를 자료로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소중한 가치를 갖습니다. 또한 북한 및 통일을 연구하는 학계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연구원의 구술 수집사업에 바쁜 시간을 내어주시고  
공개를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통일연구원장 손기웅

『구술론 본 통일정책사』 구술 컬렉션의 기획 초점은 대북·통일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정책 수행 경험을 구술 형태로 채록하여 통일정책사를 생생한 경험담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일반적 사실 나열의 남북관계사, 통일방안의 연대기적 서술에서 탈피하여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사를 시기별·이슈별로 새롭게 조명하여 정책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내용을 연구 자료로 보존한다는 점에서 이 구술 컬렉션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구술사에서는 통일부가 창립된 1969년부터 1995년 사이 재임한 역대 장관 중 생존해 계신 7명을 1차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인터뷰를 수락하신 6명의 전직 장관과 그 당시 정책 구상·수행에 참여했던 고위관료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술자들의 건강상 문제와 일정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터뷰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책임자 홍민을 포함한 4명의 통일연구원 박사들(김수암, 조정아, 이우태)이 진행하였다.

손재식 전 장관은 1982년 1월부터 1985년 2월까지 제10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1980년대 우월할 국력을 바탕으로 통일방안을 입안하고 20개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경제회담 등 정전협정 체결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 간 적대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회담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경험담은 남북 교류협력 전사(前史)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세기 전 장관은 1985년 2월부터 1985년 7월까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그의 재임기간은 남북 간 정통성 경쟁을 벌이는 시기인 동시에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남북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는 재임기간 정부 대표로서 비동맹국

가 회의인 ‘반동회의’에 참석하여 북한 관계자는 물론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 관계자와의 접촉을 통해 향후 북방외교의 시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재임 당시 경험담은 정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영철 전 부총리는 1992년 6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노태우 정부 마지막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그의 재임기간은 1992년 2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후속조치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인 동시에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던 기간이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던 시기의 남북관계 주무장관으로서 그의 경험담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완상 전 부총리는 1993년 2월부터 12월까지 김영삼 정부의 첫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부총리로 봉직하였으나, 이번에는 주로 김영삼 정부 시기에 초점을 두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의 구술 내용은 문민정부 출범 전후의 상황과 김영삼 정부 초기에 전향적인 통일·대북정책 기조가 형성되고 이후 변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인모 씨 송환 결정 등 주요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과,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보수강경세력의 영향력 하에 김영삼 정부 초기의 정책 방향이 선회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김덕 전 부총리는 1994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임동원 전 장관과 함께 역대 통일부 장관 중 국정원장직을 모두 경험한 역대 두 사람 중 한 명이다. 그의 재임기간은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지만 재임 직전에 국가안전기획부장직을

수행하며 1차 북핵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경험담은 이 시기 정책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흥구 전 장관은 1988년 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제14대 국토통일원 장관, 1994년 4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제20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으로 대변되는 북방정책, 탈냉전에 따른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와 기본합의서의 채택, 그 직후 제1차 북핵 위기와 북미 간 제네바합의 등 남북 당사자 간 회담, 북미 간 회담이 중첩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의 경험담은 이 시기 정책사와 정책결정과정 및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동복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제1특별보좌관은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하며 남북대화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부터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남북회담사무국 공보실장 및 부국장, 국가심리전 총국장,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을 1979년까지 수행한 바 있다. 또, 1980년부터 1982년 사이 기존의 중앙정보부에서 국토통일원으로 이관된 남북회담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증언은 당시 대북정책의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의 기억이란 점에서 이 당시를 조명하는 데 있어 많은 의미를 갖는다.

구술을 통해 통일정책사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기획·연구는 국내외에서 전무한 상황이다. 첨예한 남북한 체제경쟁과 탈냉전, 사회주의권 붕괴 및 전환, 1차 북핵 위기, 김일성의 사망, 북한의 경제난, 2차 북핵 위기, 1, 2차 남북정상회담, 김정일의 사망, 김정은 시대의 개막,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등 격동의 한반도 역사 한복판에서 통일·대북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의 생생한 경험과 기억을 듣고 재구성

하는 작업은 향후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및 통일을 연구하는 학계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구술사, 대북정책, 통일정책, 남북대화, 남북관계

## The Oral History of Unification Policy

*Min, Hong et al.*

The focus of publishing the Oral History of Unification Policy is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vivid experiences of former unification ministers who were in charge of unification policy. The significance of this oral collection lies in the following: 1) it moves away from a factual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a chronologically recorded history of unification measures, 2) it shines a new light on unification policy's history categorized by period and by issue with an experience-centered approach, and 3)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used as reference for other research in the future.

In this oral history, seven former ministers who are still alive were chosen as primary case studies out of all the former ministers who had served between 1969, whe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as established, and 1995. Among them, six former ministers and one high official who have participated in policy design and execution accepted the interview. An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r approximately nine months from June 2016 to March 2017.

The planning and research done to shine a new light on unification policy through oral history is the first attempt of its kin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Listening to and reorganizing former ministers' recounts of their vivid experiences and memories in major events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policy in the middle of the tumultuous history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ill lay the foundation for resolving the Korean Peninsula issue in the future. Major events within this history consist of the following: sharp tensions between the regime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end of the Cold War, the fall and transition of the socialist camp,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death of Kim Il-sung,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first and second Inter-Korean summit meetings, the death of Kim Jong-Il, the opening of the Kim Jong-un era, and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collection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in raising interest and building an understanding of unification and the North Korea issue not only among professional researchers of North Korean and unification study but also ordinary citizens.

**Key words:** oral history, policy toward North Korea, unification policy, South-North dialogue, North-South relations

# 1. 구술 개요 및 해제





## 1. 구술 작업 개요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구술 컬렉션은 대북·통일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관료들의 정책수행 경험을 구술 형태로 채록하여 통일정책사를 생생한 경험담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표가 있는 만큼 대북·통일정책의 실무부처인 ‘통일부’ 전직 장관을 우선 인터뷰 대상으로 설정했다. 2016년 인터뷰 당시 현직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면 역대 통일부 장관은 36대에 걸쳐 총 33명이었다. 이 중 16명의 전직 장관이 이미 작고하셨고 생존해 계신 17명이 인터뷰가 가능한 분들이었다. 17명의 전직 장관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하여 2016년 첫 권에는 1969~1995년까지 재임한 분을, 2권에는 1995~2007년 사이 재임한 분을, 마지막 권에는 2008~2017년 사이 재임한 분을 인터뷰하여 구술을 채록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은 바로 그 첫 권에 해당한다.

통일부가 창립된 1969년부터 1995년 사이 재임한 역대 장관 중 생존해 계신 7명에게 연락을 드렸다. 이 중 한 분이 건강 등 여러 신변상의 사정으로 인해 인터뷰를 고사하여 결국 6명의 전직 장관이 일차 인터뷰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통일부 초기 전직 장관 중 작고하신 분들이 많아 시기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필요했다. 당시 국정원(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청와대 외교·통일 관련 수석 등 정책 구상·수행에 참여했던 고위관료도 인터뷰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대북정책에 관여하였던 고위관료 두 분을 섭외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1명의 고위관료만을 추가적으로 인터뷰하게 되었다. 물론 통일부 전직 장관 중에는 안기부장(현 국정원)을 역임한 분도 있었다.

인터뷰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구술자들의 건강상 문제와 일정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터뷰 일정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7명의 전직 장관 및 고위관료에 대한 인터뷰는 연구

책임자 흥민을 포함한 4명의 통일연구원 박사분들(김수암, 조정아, 이우태)이 진행하였다. 구술 인터뷰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전 구술채록의 의미와 발간 취지를 설명하였고 녹취 및 촬영 동의, 기본 질문지 제공 등을 거쳐 담당 박사, 연구원, 촬영기사 등 3명으로 이루어진 인터뷰 진행조가 자택, 개인 사무실, 제3의 장소 등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짧게는 1회 1시간 30분, 길게는 2~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터뷰 이후 녹취 음성 파일을 토대로 연구원들이 녹취 풀이를 하여 1차 녹취록이 나오면 담당 연구자(인터뷰 진행 박사)가 1차 검독을 한 후 해당 구술자에게 1~10여 회의 녹취록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인터뷰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민감한 발언 부분, 어휘나 맥락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조정·수정·삭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구술사의 방법론 차원에서 본다면 구술 내용 자체를 사후 수정·삭제하는 것은 구술사가 갖는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컬렉션은 고위관료 내부의 정무적 결정과정, 정세 관련 민감한 정책 내용과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발간물에서는 일정하게 구술자(interviewee)의 수정·삭제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검독·수정된 구술 내용은 담당했던 박사들이 각각 구술 내용 중간에 소제목을 달아 독자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2. 구술 내용 특징

### 가. 손재식 (제10대 국토통일원 장관)

- (구술자 재임기간) 손재식 전 장관은 1982년 1월부터 1985년 2월

까지 제10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했다. 그의 재임 기간은 3년 1개월로 비교적 오랜 기간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1980년대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통일방안을 입안하고 20개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경제회담 등 정전협정 체결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 간 적대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회담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경험담은 남북 교류협력 전사(前史)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구술자 개인 이력) 손재식 전 장관은 장관에 부임하기 전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등 지방행정에 대해서도 경륜을 쌓았다. 또한 장관 재임 이후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으로서 학계에서 학자로서 활동하였다. 현재 통일한국포럼 회장으로 통일운동에 몸담고 있다.

- (재임 당시 정세) 그가 장관으로서 대북정책을 수행하기에 앞서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동시에 통일방안에 기반한 북한의 공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라는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20개 시범사업’을 능동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의 수해지원 제안을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경제회담 등의 물꼬를 틔으로써 80년대 후반 북방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구술 내용 중 주목할 부분) 그의 경험담은 1980년대 우리 주도로 남북관계를 풀어보려는 시도 속에서 우리의 정책과 북한의 반응이라는

통일정책사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20개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배경과 북한의 역제의, 그리고 아웅산 테러에 따른 북한의 3자회담과 체육회담 제안 등 1980년대 초반의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어가려 했으며, 이러한 우리의 정책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남한의 수해 발생과 북한의 수해지원 제안 및 이에 대한 국내적 논의 과정을 상세하게 구술함으로써 인도적 문제를 계기로 남북이 서로 만나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전략과 추진과정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손재식 전 장관은 대북정책의 기초로서 봉쇄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한 국내적 논의 구조 속에서 포용정책이 주류를 점하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도 개방, 교류협력, 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용정책의 틀 속에서 추진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포용정책의 기류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나. 이세기 (제11대 국토통일원 장관)

• (구술자 재임기간) 이세기 전 장관은 1985년 2월부터 1985년 7월 까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했다. 그의 재임기간은 남북 간 정통성 경쟁을 벌이는 시기였지만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남북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정부 대표로서 비동맹국가 회의인 ‘반동회의’에 참석하여 북한 관계자는 물론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 관계자와의 접촉을 통해 향후 북방외교의 시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재임 당시 경험담은 정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구술자 개인 이력) 이세기 전 장관은 고려대학교 교수를 시작으로 제11, 12, 14, 15대 국회의원, 통일원 장관, 체육부 장관, 한나라당 대표 등 학계, 관계, 정계의 요직을 두루 지낸 학자이자, 관료 그리고 정치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는 국내의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중국 내 핵심인맥을 구축하여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 (재임 당시 정세) 이세기 전 장관 재임기간의 국제환경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미·소 간의 화해 분위기가 시작되었고 중국은 개혁·개방의 시기로 접어드는 시기였다. 당시 남북관계는 남북 간 정통성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로서 1984년 10월 버마 아웅산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어 있던 시기였다. 남북 간 경색된 관계 속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실질적 성과를 얻고자 북한과의 막후 대화창구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1986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당시 중공의 참가를 제의하는 등 북한 및 중공 등 공산주의 국가와의 접촉을 확대하던 시기였다.

- (구술 내용 중 주목할 부분) 이세기 전 장관의 구술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재임기간 비동맹국가 회의인 '반동회의'에 참석한 부분이다. 반동회의 참석 전 이 전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과의 막후 대화창구 개설에 대한 언질을 받았고 실제로 그는 반동회의에서 북한 측 관계자를 만나 고도의 신경전을 벌여 일정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반동회의에서 중국 측 관계자와의 접촉은 향후 우리 북방외교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 최영철 (제17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구술자 재임기간) 최영철 전 부총리는 1992년 6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노태우 정부 마지막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했다. 그의 재임기간은 1992년 2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후속조치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인 동시에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던 기간이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던 시기의 남북 관계 주무장관으로서 그의 경험담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 (구술자 개인 이력) 최영철 전 부총리는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거쳐 4선 국회의원(제9, 10, 11, 12대)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직선제 개헌 여야 8인 정치회담' 대표를 맡아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체신부,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지낸 후 1994년부터 통일번영연구원 회장을 역임하여 지속적으로 통일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경대학교 총장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재임 당시 정세) 최영철 전 부총리의 재임기간 북한은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수용하였고 미국은 전 세계 전술핵 철수 및 폐기 선언을 하는 등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서 격변의 시기였다. 남북한은 지속적인 남북고위급회담에 이은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결과물을 만들었고 통일의 시대를 열자는 데 일정부분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북한 부총리가 방남(訪南)하여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의 긍정적 신호도 있었지만, 이인모 씨 복송 문제나 북한의 핵 개발 의혹 등 부정적 요소도 상존하고 있었다.

- (구술 내용 중 주목할 부분) 최영철 전 부총리의 구술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재임기간 진행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부분이다.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제6차 회담에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동시에 당시 남북관계의 중요 이슈였던 이인모 씨 북송문제를 다루어야 했기에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다. 또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른바 ‘훈령조작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정권 말 권력누수현상(레임덕)과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사건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라. 한완상 (제18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초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구술자 재임기간) 한완상 전 부총리는 1993년 2월부터 12월까지 김영삼 정부의 첫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한완상 부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신뢰 하에 통일·대북정책 결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인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가 높았고, 이에 부응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어 그간 남북회담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이인모 씨 송환방침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취했으나, 북한의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결정이라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통일·대북정책의 방향 선회가 이루어졌다. 한완상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부총리로 봉직하였으나, 이번에는 주로 김영삼 정부 시기에 초점을 두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구술자 개인 이력) 한완상 전 부총리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해직되었고, 1980년에 복직 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2차 해직되었다. 1984년 다시 복직하여 재직 중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김영삼 정부의 첫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이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상지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1월에 부총리 겸 초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봉직하였다. 퇴임 이후에 한성대학교 총장,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재임 당시 정세) 노태우 정부 후기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었으나,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재개 등의 문제로 인해 북한이 제9차 고위급회담을 거부함으로써 남북대화는 중단되었다. 문민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가 높았고, 이에 부응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2주만에 전격적으로 당시 현안이었던 이인모 씨 송환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나갔다. 그러나 다음날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대북유화기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 내에서도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김영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다소 보수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한편, 미국은 1993년 1월에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한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방식으로 일괄타결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당시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이에 관해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한완상 부총리 퇴임 이후에 북미간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단락된다.

• (구술 내용 중 주목할 부분) 한완상 전 부총리의 구술 내용은 문민 정부 출범 전후의 상황과 김영삼 정부 초기에 전향적인 통일·대북정책 기조가 형성되고 이후 변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인모 씨 송환 결정 등 주요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과,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보수강경세력의 영향력 하에 김영삼 정부 초기의 정책 방향이 선회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취임 초기에 이루어진 이인모 씨 송환 결정 및 발표 과정에 대한 구술은 당시 정책 결정과 실행 이면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재개 결정과 북한 핵문제 대두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고, 국내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이인모 씨 송환 결정을 내리고 통일원이 주도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 관한 구술은 현재 대북인도지원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또한, 한완상 전 부총리의 구술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한미 정부 간의 이견이 존재했던 당시의 상황과 통일·대북정책의 책임자로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는 ‘북미 간 일괄타결’만이 국제적 지원 하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그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한완상 전 부총리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염두에 두고 외교 역량을 발휘하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사드 배치나 국방 자주화와 같은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 마. 김덕 (제21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제20대 국가안전기획부장)

• (구술자 재임기간) 김덕 전 부총리는 1994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했다. 바로 직전인 1993년 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부장으로 재임했다. 임동원 전 장관과 함께 역대 통일부 장관 중 국정원장직을 모두 경험한 역대 두 사람 중 한 명이다. 김영삼 문민정부 총 6명의 통일부 장관 중 4번째로 장관에 등용되었던 그는 재임 기간은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지만 재임 직전에 국가안전기획부장직을 수행하며 1차 북핵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경험담은 이 시기 정책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구술자 개인 이력) 김덕 전 부총리는 전형적인 학자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교수로 재직 중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발탁된 경우이다.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소위 통일·외교 분야의 4인방 - 한승주 외무부 장관,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완상 통일원 부총리, 김덕 통일원 부총리 - 모두가 학자 출신인 점이 독특하다. 이들 4인방은 문민정부 통일·대북정책의 '문민화'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문민정부 첫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발탁했을 때는 내부 개혁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재임 당시 정세) 그가 국정원장과 통일부를 통해 대북정책을 수행했던 시기는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전환과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처음으로 위기로 치닫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냉전의 종식, 이념의 굴레를 넘어선 화해의 분위기가 세계사적 기류인 가운데,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등장하여 안팎으로 남북관계에 거는 기대가 컸던 시기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맹보다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에 대한 강한 포용의 의지와 희망을 드러낸 바 있다. 그에 앞서 노태우 정부가 일궈낸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고무되어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그만의 파격적인 대북정책 성과를 기대했다.

• (구술 내용 중 주목할 부분) 그러나 문민정부 통일·대북정책은 1차 북핵 위기와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기대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마치게 된다. 김덕 전 부총리의 구술은 바로 김영삼 정부가 직면했던 정세와 정책적 대응 과정을 엿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위 1차 북핵 위기 당시 정책 결정 내부 상황에 대한 구술은 흥미로운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기부장이었던 구술자가 북핵 초기부터 ‘비핵화’ 전망이 어둡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부분, 그리고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북한체제가 큰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부분 등은 김영삼 시기를 ‘북한붕괴론’에 경도된 시기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부분이다.

또한 ‘담판의 명수’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운용 스타일에 대한 그의 설명은 대북정책과 대통령 리더십이 갖는 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삼 정부 시기 안기부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핵과 관련한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했으며, 1993년 당시

미국은 이미 북한 핵보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북핵 관련 정책사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내용이다. 이밖에 김일성 사후 한국 정보기관과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교환 부분도 흥미로운 구술 대목이다. 당시 친한파였던 러시아 해외정보부장 프리마코프를 통해 북한정세 관련 한·러가 긴밀한 정보 교환을 한 부분, 정보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는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이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안정을 상당한 기간 동안 가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부분, 김영삼 정부가 김일성 사후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이 러시아의 판단을 크게 참조했다는 부분은 김영삼 정부 시기 북한 정보가 미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도 두터운 정보망을 가동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덕 전 부총리의 구술 내용은 1차 북핵 위기 당시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정책사적 의미가 크다. 특히 그의 구술 내용은 김영삼 정부가 직면했던 정책 환경 및 이슈, 이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및 정세 인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 북한 정세에 대한 당시 인식이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형성돼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김영삼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대북정책을 변경하였다거나 북한붕괴론에 경도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다소 뒤집는 것으로서 의미 있는 구술사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바. 이흥구 (제14대 국토통일원 장관, 제20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구술자 재임기간) 이흥구 전 장관은 1988년 2월부터 1990년 3월 까지 제14대 국토통일원 장관, 1994년 4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제 20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했다. 이흥구 전 장관께서 재임한

기간과 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으로 대변되는 북방정책, 탈냉전에 따른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와 기본합의서의 채택, 그 직후 제1차 북핵 위기와 북미 간 제네바 합의 등 남북 당사자 간 회담, 북미 간 회담이 중첩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의 경험담은 이 시기 정책사와 정책결정과정 및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구술자 개인 이력) 이흥구 전 장관은 정치학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제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제28대 국무총리, 제15대 주영 한국대사, 제17대 주미 한국대사 등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 걸쳐 정부 요직 및 외교관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다양한 직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국정의 운영 속에서 대북통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경험담은 다양한 부처와의 협의 등 통일정책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재임 당시 정세) 그가 국토통일원 장관과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에서 체제전환이 일어나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탈냉전의 역사적 전환의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동서독 통일이 성사되던 시기에 국내적으로 7·7선언을 바탕으로 북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도 국내외적인 부정적 환경으로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껴 수세적·방어적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제1차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해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남북관계는 경색으로 치닫던

상황이었다.

• (구술 내용 중 주목할 부분)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통일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경험담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협치의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통해 공감대를 토대로 대북·통일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당들의 견해를 수렴하며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갔던 정책결정과정은 앞으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협치를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와 정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독일 통일을 목도하면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 아래 통일연구원이 설립되는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역할 분담 속에서 대북·통일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처의 장관들 사이의 개인적 인맥과 소통도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담에서 알려주고 있다. 특히 대북·통일정책의 실천력과 효과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업과 분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담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사. 이동복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제1특별보좌관, 제15대 국회의원)

• (구술자 재임기간) 이동복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제1특별보좌관(이하 특보)은 한국일보사 정치부 및 외신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하며 남북대화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1973년부터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남북회담사무국 공보실장 및 부국장, 국가심리전총국장,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을 1979년까지 수행한 바 있다. 1980년부터 1982년 사이 기존의 중앙정보부에서 국토통일원으로 이관된 남북회담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1982~1988년 삼정정밀공업(주) 대표이사 부사장 근무 이후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및 국가안전기획부장 제1특보로 다시 남북회담 분야로 복귀했다. 1996~2000년에는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 (구술자 개인 이력) 이동복 전 특보는 1970년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남북관계사의 한복판에서 ‘남북대화’ 또는 남북협상가로서 활약을 했다. 물론 한국일보사 정치부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외신부 차장을 거치며 13년간 언론인으로 근무한 것이 그의 첫 직업이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여러 인간적 인연을 통해 그가 남북회담 분야에 발을 첫 디딘 시기는 이후락의 평양방문, ‘7·4남북공동성명’, 그리고 유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시기였다. 그는 서슬퍼런 유신정권이 한창이던 시절 중앙정보부 내 남북회담사무국과 국가심리전총국, 부장 특보 등을 통해 당시 대북정책 결정 및 집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 짧지 않은 6년간 대기업 경영 일선에 나와 있던 그가 남북회담에 다시 복귀했던 1991년은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소위 ‘훈령조작사건’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 (재임 당시 정세) 이동복 전 특보가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며 남북대화 분야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1971년 무렵은 국제정세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소위 ‘핑퐁외교’로 상징되는 미·중 관계 개선이 급진전되면서 데탕트의 바람이 불던 시기였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미·중 사이에 부는 ‘훈풍’이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정세 판단을 요구하던 시기였다. 한편 국내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경쟁 세력을 무력화하고 장기집권의 욕망을 명분화할 정치적 ‘소재’를 필요로 하던 시기였다. 한편 이동복 전 특보는 1979년과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며 몸소 경험을 했다. 한편 1991년 그가 남북회담 분야로 다시 복귀하던 시기는 북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으며, 한편으로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막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강하게 추진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 (구술내용 중 주목할 부분) 이동복 전 특보의 구술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놓고 보면, 우선 1971~1972년 사이 진행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방문과 김일성과의 만남 부분이다. 그리고 ‘7·4남북공동성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부분이다. 이미 다양한 증언을 통해 이 당시의 얘기가 소개된 바 있지만, 이동복의 증언은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의 기억이란 점에서 이 당시를 조명하는데 있어서는 의미가 많다. 특히 남북회담과 ‘7·4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을 두고 중앙정보부 내에서 취했던 다양한 협상 준비와 관련된 증언은 남북회담사를 조명하는 데서 매우 흥미로운 에피소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또한 ‘7·4남북공동성명’의 내용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미친 영향이나 결정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증언 역시 흥미롭다.

다음으로 박정희 정권 집권 중후반기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대북정책

을 주도하며 운용했는가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증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수족에 가까웠던 중앙정보부가 사실상 대북정책 전반 모두를 결정하고 수행 과정 전반을 독식하는 체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전 특보가 이런 체제가 1979년 '10·26'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증언하는 부분과 문민정부 이후 대북정책 결정 및 운용체계의 변화를 그 나름대로 평가하는 구술 부분은 박정희 시기 남북협상가, 국가심리전 책임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라본 대북정책 세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분단관리, 통일정책, 남북대화 등의 영역을 구분하고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업무가 각각 다른 부처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 일관된 지론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지 현재의 대북정책 추진체제와 관련해서 경청해 볼만한 부분이다.

한편 새로운 젊은 세대의 '이데올로기'를 국가가 관리·조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유아카데미'를 창설하게 된 과정을 증언하는 부분, 19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 이후 이 전 특보가 특명을 받고 만들어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만들어진 경위, 장세동 경호실장이 비밀리에 방북하여 김일성과 만남을 가진 부분, 중앙정보부 산하에 있던 남북회담사무국이 신군부 등장 이후 통일부로 이관되고 여기서 남북회담사무국장직을 수행했던 경험, 통일부 장관과의 트리플 일화 등은 개인사 차원의 기억과 구술이지만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조각들로 하나하나가 재조명이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하나 구술 내용 중 흥미를 끄는 대목은 북핵과 관련한 부분이다. 보통 북핵 문제의 시작은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에 찍힌 영변 핵시설의 실체로 불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술을 통해 1984년 중앙정보부에서 영변 핵개발 연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미국 중앙정보부에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다는 것이 증언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SR-72' 정찰 자산을 통한 촬영 및 감청된 내용이 오산기지의 777부대를 통해 가공·정리되어 미국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부 정보국이 내용을 빼돌려 한국의 중앙정보부로 정보를 보내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대북 정보영역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부분이다. 한국 중앙정보부가 CIA에 영변 핵시설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CIA 대북정보 분석체계의 미비와 무관으로 묵살되었고 1989년 프랑스 상업 위성 촬영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이후에야 미국이 부랴부랴 1990년대 초 CIA 내에 북한분석팀을 만들었다는 증언은 북핵 문제 역사를 조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동복 전 특보하면 떠오르는 '훈령조작사건'의 부분이다. 훈령조작사건은 노태우 정부 시기 추진된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협상,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물밑 추진이 오버랩되는 속에서 발생했다. 이 전 특보는 1991~1992년 남북고위급 회담, 남북기본합의서 협상,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을 위한 준비 등 남북한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협상의 장이 펼쳐지던 시기, 막후에서는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송환 카드를 놓고 남북한이 머리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훈령조작'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구술하고 있다. 북방외교의 막전막후가 매우 흥미롭게 인식될 수 있는 구술이라고 할 수 있다.

### 3. 일러두기(내용, 형식)

이 책은 1969년부터 1995년 사이 재임한 역대 통일부 장관 중 생존해 계신 분 중에 인터뷰에 응한 6명과 남북회담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관료 1명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한 구술 내용을 수록하였다. 구술의 특성상 수록 내용은 개별 구술자들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고 있다. 구술사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개인 경험의 서사성(narrativity) 차원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중요시한다. 따라서 일부 보는 관점에 따라 구술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구술사가 갖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의 진위 자체는 향후 더 많은 구술 자료와 사료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1. 가급적 구술자의 구술 내용을 그대로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가독성 차원에서 중복되거나 증언되는 어절은 내용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가필하였다.
2. 일부 구술 내용의 경우 강한 구어체 부분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이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문어체 형태로 가필하였다.
3. 인터뷰 이후, 구술자가 구술 녹취록에서 내용의 비공개와 삭제를 요청한 경우 가급적 구술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제하였다.
4. 구술 내용 중 영어 인명, 기관, 직책, 역사적 사건, 정책명 등은 가급적 공식 이름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수정하여 통일하였다.



## II.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 손재식(孫在植)

### 간략 프로필

1934. 1. 17.	경상남도 합천 출생
195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1976. 10. ~ 1980. 1.	경기도지사
1980. 1. ~ 1981. 4.	부산시장
1982. 1. ~ 1985. 2.	국토통일원 장관



손재식 제10대 전 국토통일원 장관님의 구술은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자택(서울시 마포구 소재)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진행은 김수암 박사가 맡았으며, 구술은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약 한 시간 반의 시간 동안 전반적인 재임 당시의 소회로부터 북쪽이 제의한 수해자원 등 구체적인 사건 및 상황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 1. 1980년대 초반 시범사업 등 대화제의와 북한의 반응

연구자: 저희들이 과제로서 역대 생존해계신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재임하실 때의 남북관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책자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동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전화를 드렸는데 장관님이 순서 상으로는 오늘 처음입니다. 70년대 장관님들은 안계시더라고요.

구술자: 네. 70년대 내 앞의 장관 분들은 다 돌아가셨지요. 내 앞의 이범석 장관님께서서는 아웅산 북한 테러 폭파 사건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이전의 이규호 장관님이 문교부 장관으로 계시다가 작고하신 거 같고. 나보다 앞서 통일부 장관 하시던 분은 다 타계하셨어요.

연구자: 장관님 다음이 이세기 장관님이셨던가요.

구술자: 예. 이세기 장관은 나중에 체육부 장관으로 갔었고. 그렇게 길게는 안했죠. 내가 생존해 있는 장관들 중에 제일 먼저 했고, 다음에 또 제일 오래했고. 두 번씩 한 분들은 있어요. 정세현 장관.

연구자: 정세현 장관님은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양대에 걸쳐서 하셨죠?

구술자: 예. 이흥구 총리도 두 번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후에 재임용된 경우죠.

연구자: 아무래도 장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7·4남북공동성명을 전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나 적십자회담이 열린 다음에 한동안 남북이 단절돼 있다가 전두환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남북관계가 80년대에 상당히 활성화 되잖아요. 그래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도 제의하시고, 물론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소회를 들어보고요. 20개 시범사업도 하고 상당히 회담도 많이 하고, 오래 재임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듣고 싶은 부분은 80년대 장관님이 재임하실 때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배경으로 남북관

계를 끌고 가려 했는지 먼저 장관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쭙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장관님 재임기간 3년 뒤돌아보시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내가 1982년 1월 4일에 통일원 장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임명이 됐죠. 그 전엔 내무부 차관으로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부산시장, 전에는 경기도지사. 그래서 내가 원래 통일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통일에 관심은 많았지만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자문회의가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이 한 만 명 정도 되고, 사무총장으로서의 일을 겸했죠. 그런데 그 일을 맡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일문제는 종합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라든가, 부산시장이라든가 하는 자리에서 종합행정을 맡아서 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용한 것 같습니다. 장관으로 온 당시에는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이 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었어요.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데에 대해서 북한이 또 맹렬하게 비난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경색 상태를 타파해야 되겠다. 남북통일을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라는 것을 천명을 했고, 다음에 내가 이어서 2월 1일에 20개 시범사업을 제의했죠. 그 골자는 남북 간에 대화, 교류, 협력 그리고 화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그쪽에 제의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내용은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기록에 나와 있으니깐. 그 때의 상황에서는 그런 제의를 하는 것은 좀 파격적이었죠. 남북관계가 대단히 악화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

에 악화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감히 제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평화통일을 하려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의를 했는데, 북쪽에서는 우리 제의에 대해서 엉뚱한 역 제의를 해왔어요. 남북 100인 연합회의, 100인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북쪽 대표 50명 뿐만 아니라 우리 쪽 대표 50명까지 자기들이 다 지명을 했어요. 모두 다 친북 인사들, 국가보안법으로 복역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제의를 했죠. 그러니까 매우 상식에 벗어난 일이죠. 정부는 배제하고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만 대거 포함해서 자기들이 주도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는 그런 속셈이었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3월에 또 제의를 했어요. 고위 대표단, 고위 당국자 회의를 하자고 해서 우리 쪽 대표의 명단을 제시하고 북쪽 대표는 그쪽에서 정하라고 제의를 했죠. 그런데도 진전이 잘 안됐어요. 북쪽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진전이 잘 안됐죠. 그 다음해에 내가 우리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는 제의를 그 쪽에 다시 했죠. 그러다가 대통령 일행이 미얀마, 그때는 버마라고 불렀는데, 버마를 방문했을 때 아웅산에서 우리 일행에 대해서 북쪽이 테러 공격을 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죠. 그때 각료들을 비롯해서 비서실장, 경제수석비서관과 주요 민간 인사들이 많이 희생됐죠. 그래서 우리 쪽의 분위기가 응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응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 원수를 타겟(target)으로 하고 또 많은 장관들, 고위 인사들이 희생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다른 나라의 경우 보복공격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시인사과를 하고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북쪽에 촉구를 했죠. 그런데 북쪽에서 또

난데없이 3자회담이란 걸 제의를 했어요.

연구자: 네, 맞습니다.

구술자: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나 빈축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3자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3자회담이라는 것이 북한하고 미국, 거기에 우리나라를 끼워 넣은 것이죠. 북쪽의 속셈은 미국을 상대로 하되, 그러니까 북미회담을 하되 우리는 곁다리로 끼워 넣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3자회담을 제의했죠. 내가 다시 북쪽에 역 제의를 했는데, 3자회담을 할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 분단과 6·25전쟁에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이 다 참여하는 회담을 하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4자회담이 될 수도 있고, 6자회담이 될 수도 있지요.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는 미국과 소련, 6·25전쟁에 끼여든 중국, 그리고 분단 전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한 일본을 포함하면 6자회담이 되지요. 그리고 6·25전쟁에 UN 회원국들이 많이 참여하였지만, 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이 주전 멤버이므로, 4자회담을 할 수도 있지요. 다만 구체적으로 회담방식을 적시는 안하고 한반도 분단과 6·25전쟁에 책임이 있는 관련된 나라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고 역 제의를 했죠. 역 제의를 했는데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북쪽의 3자회담의 구도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불순한 것이기 때문에 역 제의를 했죠. 그런데 몇 달 지났어요. 북한의 테러 공격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난이 계속되고 여기저기서 계속 시인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음 해 봄, 3월인데, 북쪽이 남북체육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해왔어

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체육회담은 과거에 우리가 제의를 한 바도 있고, 계속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통일 과업 추진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받아들인 거죠.

## 2. 북한의 수해지원 제의와 이산가족 등 교류의 돌파구 마련

구술자: 그래서 우리가 수락을 해서 체육회담을 하게 되었는데, 몇 달 동안 회담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으로 나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LA 올림픽이 몇 달 앞만 상태에서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합숙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남북 체육교류를 하자고 했어요. 체육교류를 제의하면서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아웅산 테러 폭파 사건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을 했죠. 그런 기회가 아니면 만날 기회가 따로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남북 체육교류 방안, 또 단일팀 구성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의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지만 진전이 안 되고 올림픽 날짜는 다가오고 사실상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여 체육회담이 중단이 됐죠. 그러다가 같은 해 1984년에 우리나라에 수해가 발생했어요. 7월 장마기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북쪽에서 '우리가 구호물자라든가 복구 물자를 보내주겠다'고 당국 간 대화 채널이 아니라 자기네들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도 더러 있었어요. 정말 구호라든가 복구 지원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선전 차원에서 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보다 못살았지만 그 당시는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도움이 필요 없거니와 거기에는 다 계약이 있다, 음모가 있다고 해서 거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북한의 물자가 오고 가는 하나의 선례를 만들 필요도 있고 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어 그때 국정자문회의라고 하는 원로회의에 의견을 물었더니, 그럼 큰일 난다고, 북쪽 계약에 넘어 가는 것이라고 전부 다 반대해요. 마치 북쪽이 남쪽보다도 훨씬 더 잘산다, 그쪽 처지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선전하기도 하고, 그걸 여러 가지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국회 외무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들었어요. 거기 젊은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견도 듣고, 정부 내에서 상의를 해서 받기로 했어요. 과거에는 다 우리가 묵살했는데, 그때는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북쪽에서는 사실 지원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제의한 게 아니라 선전용으로 한 건데 우리가 받겠다고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 교역을 위해서 나가있는 북한의 선박들을 다 불러들이고, 전국에 있는 제약소에다가 전부 지시를 해서 철야 작업을 해가지고 약을 만들었다고 해요. 각 공장을 풀가동하고 철야 작업을 해서 자기들이 약속한 약품 얼마, 시멘트 얼마, 광목 같은 거 얼마를 제공했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아주 저질이었어요. 약품들도 해방 직후에 우리가 제조한 저질약품 수준이고, 시멘트는 우리 시멘트하고 섞지 않고서는 도저히 교량공사라던가 포장공사에 쓸 수 없었지요. 그래서 주로 마을 골목골목에 하수구를 만든다든지, 소규모 공사에 이용을 하고 우리 시멘트를 많이 섞어서 사용했지요. 그래서 오히려 저쪽의 경제수준이랄까 산업수준이 매우 낙후되어있다는 것을 드러내놓은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우리 정부를

통해서 제공 안하고 자기들이 수해지역에 직접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달식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대개 국가 간에 원조를 할 때에는 정부를 통해서 하거든요. 지원하는 국가의 정부가 받아들이는 국가의 정부한테 전달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필요한 데 배분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들 국기를 달고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달하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국제관례상 받을 정부 기관에 맡기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다 배정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접촉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판문점에서 우리가 받는 걸로 했어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수해지역에 전달하고 배분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단절된 이산가족회담 재개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인도적 견지에서 북쪽에서 구호물자를 보내줬으니까 같은 인도적 정신에 입각해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북쪽에서 명분상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고 다음 해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남북 간에 물자가 북쪽에서 왔지만 서로 물자가 오고가는 상태를 만들자, 그래서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 교류를 하자고 경제회담을 제의했어요. 그래서 남북경제회담이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됐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의를 했는데, 서로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자유무역을 하자라던가 경제 협력을 어떤 식으로 하자던가, 모두 20개 시범사업에 다 나와 있는 취지로 제의를 하고 경제회담을 몇 번 했죠.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또한 남북 간 경색상황을 타파하는 좋은 계기로 적십자 접촉이 이루어지고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되는 상황 속에서 총선이 있었어요. 보통 총선 끝나고 나면 전면 개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던 일을 남겨두고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얼마 안 있다가 민족 통일중앙협의회 의장을 한 3년, 계속 통일문제를 다뤘고 또 평화 통일자문회의 부의장직도 2년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내가 23년간 교수생활을 했어요.

연구자: 네. 평화복지대학원.

구술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으로서 10년, 명예원장으로서 13년가량 했어요. 거기서도 평화문제,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학술회의도 열었어요. 그런데 2년 반 전에 내가 나이도 많아지고 해서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명예원장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어요. 명예원장이지만 전임교수하고 마찬가지로 강의를 했어요. 주로 국제문제, 평화문제에 대해서도 강의했구요. 지금은 통일한국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고, 통일동우회 초대 회장, 2대 회장, 3대 회장을 하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명예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우회 고문 등도 맡고 해서 그 외에도 모두 합해서 9개 공익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이게 내가 통일원에 가서 이제까지 살아온 스토리랄까 경력인데, 구체적인 질문은 받는 대로 내가 답을 하도록 할게요.

### 3. 대북 포용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연구자: 예. 장관님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제 좀 더 역사에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장관님 재임, 그러니까 취임하시기 전부터 시작

되긴 했지만,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대해서 장관님 하신 다음에 대통령께서 국정연설에서 발표는 공식적으로 하셨잖아요. 혹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장관님 전부터 준비되긴 했지만 어떤 배경으로 준비되고 누가 그걸 입안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는 것이 있으신지요?

구술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내가 가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소위 봉쇄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도 일종의 포용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서로 개방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고 대화 접촉을 해야 하는 거니까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 아니라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인 거죠. 햇볕 정책도 포용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포용정책에 대한 생각이 나 구상은 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 3원칙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연구자: 예.

구술자: 그때 전환을 꾀한 거죠. 그리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지시를 받아 김일성을 만나고 7·4남북공동성명을 내놓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죠. 남북조절위원회는 내가 통일원에 있을 때도 남아있었어요. 민관식 씨가 공동위원장으로 있었는데, 7·4남북공동성명으로 싸이 터서 1982년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내놨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와 협력, 화합을 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에서 동수로 대표자를 선임해서, 민족통일협의회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통일헌법안도 그 뒤에 비밀리에 만들어 놓았습

니다. 최근에 와서 몇 년 전부터 통일헌법을 준비한다고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얘길 하는데, 사실 그때에도 헌법학자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헌법학자 중에 지금 살아 있는 분도 있고요. 20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저쪽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받아들이는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는 안까지 다 만들어 놓았어요. 부처별로 스터디를 하고 회의도 해서 안을 다 만들어 냈죠. 그 뒤에 이홍구 통일부 장관 있을 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겁니다. 남북연합을 만들자는 것이 주된 골자로 되어 있는데, 뒤에 역대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해 제의한 것도 바탕은 거기에 있죠. 뿌리는 통일 3원칙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다음에 과감하게 북쪽에 통일정책을 실천에 옮기려고 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그런 정책을 이어갔어요.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 하고 있고 핵실험까지 몇 차례 해서 국제제재를 하고 있는 제재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관계가 단절되어있는 상태죠. 국제제재, 국제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먼저 실현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 동안의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이전 정권의 통일정책을 다 폐기하고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걸 좀 더 보완 발전시키는, 때로는 중점을 어느 한 군데 두는 그런 방식으로 해 왔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초에는 포용정책을 계승을 해서 더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핵무기 개발 문제 때문에 급변된 거죠. 우리 민족의 사화에 관한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비핵화라는 것이 공인된 핵무기 보유국, 그리고 NPT 가입 국가들의 공통된 목표

이지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개발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까지도 앞으로는 핵무기를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사실상 미국, 소련, 중국 등 현재의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전부 폐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우크라이나(Ukraine)는 다 없었고 미·소 양국은 핵무기를 감축한 바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 국면에 있어요.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말하자면 북쪽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겸해서 하느냐 하는 데서 의견이 엇갈려 있는 모양인데, 대화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대화를 재개하게 되면 국제제재를 위한 압박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과거 6자회담처럼 북한에 시간벌이를 해주게 할 가능성이 있죠. 북한이 하도 기만을 많이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어느 정도 성의 있고 강력하게 협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핵문제 해결 후에 모든 걸 진전시켜야 된다, 또 핵무기 폐기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재·압박만 해서는 안 되고 대화도 병행해서 협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북한과 중국에서는 평화회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평화회담 그 자체는 좋은데, 다만 회담 당사자와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걸 북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북미 간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우리나라 포함해서 4자 간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북한이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북한은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것들을 평화협정의 주요조건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평화회담을 하자는 말은 듣기는 좋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회담당사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중국에서는 제재만으로 안 되고 평화회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핵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알다시피 그럴 필요성이 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해요. 아무튼 지금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이라든가 연구자라든가, 그 밖에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한창 활발할 때는 남북 간 북핵회담도 있었고, 기본합의서라는 것도 있었고, 그 때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국가들이 민주화 되어가니까 북한에서 위기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회담에 응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북쪽 총리하고 대표들이 왔을 때 나도 초청 돼서 갔는데 그 때 합의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이상적이죠. 그런데 북쪽에서 비핵화 선언도 다 파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제네바 회담도 어쨌든 폐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말하는 것, 심지어 문서화한 것까지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북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지 말이나 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아마 대북관계에서 철저히 해야 될 것은 행동을 보고 해야 되고, 행동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은 내가 20개 시범사업을 제의할 때도 이런 걸 내포하고 있었지만 형태나 내용은 달라도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균형이 취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공후득'이라는 주장을 한 때 했었죠.

먼저 주고 뒤에 받는다는 건데, 신용이 있는 정상국가 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공후득, 먼저 주고 뒤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한같은 비정상국가와 무슨 합의를 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는 오히려 공신력이 높은 우리나라가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신용을 지키는 나라니까.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동시이행을 해야 해요. 주고받는 것의 동시이행, 민법에 동시이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경희대학교에 있으면서 칼럼을 여러 번 썼는데, 그 때 주장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 동시이행의 원칙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하지 않겠나, 통일연구원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 4.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통일연구원의 역할

연구자: 장관님, 장관님 되신 다음에 이미 되어있긴 했지만 누가 통일방안을 발의했고, 주도적으로 초안을 만들었는지 들은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그때 통일부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실장, 국장, 부장, 연구관, 교수 등이 다 베테랑이었지만 학계의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켰죠. 지금은 더 좋아진 게 통일연구원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위원이나 연구원은 학자죠. 교수나 마찬가지로 교수든 연구원이든 학계를 참여시키면서 당시에 실무경험이 많은 관료들 의견도 많이 듣고, 서로 배합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경희대학교 가기 전에 관계

(官界)에서 물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으로 좀 있었는데,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가진 연구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내무부와 관계가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읽는 거 같으니까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용적인 그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은 게 많이 있고, 또 내가 대학에 가서 23년간 있어보니까 교수들도 이론은 밝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은데,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하고 상호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죠. 나는 이제 실무도 밝고, 대학에도 오래 있었고 그래서 양쪽을 좀 알죠. 통일연구원도 실용화 할 수 있는, 바로 통일정책에 반영될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상당히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구자와 실무자가 지혜를 같이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서로 토론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죠.

## 5.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20개 시범사업의 입안 과정

연구자: 장관님. 20개 시범사업은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들인데,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장관님이 취임한 이후에 시작된 겁니까?

구술자: 그전부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었어요. 마무리는 내가 가서 했고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야 되니까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실천에 옮기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죠. 민족화합민주통일을 논하는 방안에도 대화, 교류·협력, 관계정상화가 전부 언급이 돼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20개 시범사업에 담은 거죠.

연구자: 국토통일원이 20개 시범사업을 주도해서 만들었습니까?

구술자: 우선 실무자 선에서 스타트(start) 되었죠. 대개 ‘하향식 의사결정(top-down decision)’도 있고 ‘상향식 의사결정(bottom-up decision)’도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상향식 의사결정이죠. 밑에서 충분히 실무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스테디를 하고, 자문위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만든 걸 가지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죠. 물론 윗선에서 먼저 지시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서 하는 수도 있고, 또 위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줄거리랄까 기본만 지시하고 밑에서 디테일(detail)하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연구자: 20개 시범사업은 어떤 경우입니까? 위에서 만들라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아래서부터 만들어서 올려서 결재를 받으신 건지요?

구술자: 내가 가서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향식으로 된 게 아니라 상향식으로 된 거죠.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의하자는 지시는 대통령 선에서 했을 거고 내용은 밑에서 다 마련해가지고 결재를 맡았던 것이고요. 20개 시범사업은 한마디로 각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총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통일부에서는 이미 결정된 정부

의 정책이나 방침을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디를 해야죠. 스테디를 하고,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가기 전부터 그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갑자기 한 건 아니죠. 갑자기 한 건 아닌데, 성격상 밑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완성도를 높여 결재를 맡아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회담을 제의하라는 것은 윗선에서 내려온 적도 있고, 밑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배합이 된 거죠. 꼭 누가 혼자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자: 장관님 말씀 중에서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20개 시범사업에 대해서 북쪽이 호응할 경우에 대비해서 각 부처별로 사업 해당부처가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그랬던 과정은 국토통일원이 총괄해서 다 한 건지요?

구술자: 그때 관계부처국장회의라는 게 있었고, 1급 공무원인 남북대화 사무국장이 좌장 역할을 했죠. 그때 송한호 씨가 맡았어요.

연구자: 아, 송한호 차관님이 하셨군요.

구술자: 차관도 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도 하고,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도 한 송한호 씨가 남북대화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관계 부처의 국장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다음에 관계장관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성격상 통일원 장관이 주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당시 경제부총리가 있었고, 안기부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공보부 장관 등 여러 장관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죠. 관계 장관

은 언제든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장관회의를 했어요. 그것의 주재는 총리가 하고 그 전에 관계국장회의에서 그때 참여했던 학자들 중에 뒤에 증용이 된 사람들이 많죠. 통일원에 정책자문위원으로 교수나 연구위원이니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 뒤에 차관, 장관, 총리까지 한 분도 있고요. 지금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하는 정종욱 씨도 자문위원이었고, 그 외에 통일부 전직 자문위원 중에서 관계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세현 장관도 통일연구원 출신이지만 원래는 통일부에 있었는데, 내가 통일원에 있을 때는 연구관이었어요.

## 6. 남북적십자 접촉, 남북경제회담 및 체육회담의 전개과정

연구자: 원래 통일부에 있다가 저희 원장으로 왔다가 차관으로 가시고 나중에 장관 하셨죠. 장관님, 1984년에 북쪽에서 수해물자 제안 했을 때 재밌게 들었는데요. 북쪽에서 구호물자 보내준다고 할 때는 장관님이 한참 재임하실 때인데 적십자 회담을 염두에 두고 받으신 건지요?

구술자: 그 때는 적십자 회담이라고 안하고 적십자 접촉이라고 했어요. 순전히 그 때는 북쪽에서 제공하는 구호물자를 받아들이는 일만 했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 쪽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죠. 그래서 적십자 접촉이 적십자 회담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때는 순전히 수재물자로 북한과 접촉을 했는데, 인도적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인도적 정신에 입각해 이산가족 재회 사업을 재개하고자 했고 북쪽에서 받아들인 거죠.

연구자: 구호물자를 받을 때 장관님께서는 이걸 기회로 해서 구호물  
자 제의를 수용하면서 이미 이산가족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구호물자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이산가족까지 이미  
염두에 두고 수용을 하신 건지요?

구술자: 염두에 두고 했죠. 그것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요. 그 다음에 남북 간에 물자가 오고가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쪽에서 받으면 우리도 줄 수가 있고.  
그쪽은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주겠다는 거 잘 안 받았  
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 놓으면,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줘야 된다, 줘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지요. 남북  
간에 물자가 오고가는 첫 선례가 되어 우리도 고맙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보냈어요. 전자제품 같은 거 보내고 그 뒤에  
많이 줬잖습니까. 북쪽에 많이 줬는데,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찬반 토론에서 원로들은 다 반대를  
하고, 조금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은 받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기관 간에도 의견이 일치가 돼있지 않았었고, 어  
쨌든 상당한 논란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보는 거죠. 혹시 우리 국민들한테 악영향을 줄까봐 우려  
했고요, 반공 시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했으니까요.

연구자: 장관님 재임 중에 남북경제회담은 장관님이 주도적으로 생  
각하셔서 추진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제회담을 해보자고 한 과  
정을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구술자: 경제회담은 통일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죠. 논의가 있었고 관계 부처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통일부에서 통일문제를 주관하지만 관련 부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통일부에서 남북경제회담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결재까지 받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왕 물꼬가 트이게 됐는데,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나 20개 시범사업에 교류·협력, 물자 교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걸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 밖에 상호 자원개발이라든지 물자교류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그 기회에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경제회담을 진행한 거죠.

연구자: 장관님 재임기간 중에 문공부에서 문화교류 제의도 했던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술자: 문화교류도 20개 시범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재임 중에는 체육회담을 제외하고는 문화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접촉은 없었죠. 근데 20개 시범사업에는 다 포함되어 있죠.

연구자: 장관님 재임기간 동안에 국토통일원도 있었고 청와대도 있고, 안기부, 관계 부처가 있었는데 통일문제, 남북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국토통일원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안기부가 많이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국토통일원이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는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구술자: 안기부는 안보, 특히 반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국방부도 물론 당연히 역할을 했고요. 외교부는 국제외교무대에서 외국에 홍보를 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중요 제의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국장회의를 많이 활용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북한 관계 정보는 안기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기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연구자: 아웅산 테러 말씀하셨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를 방문했을 때 아웅산 테러가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장관님은 생각하시는지요?

구술자: 그때에는 뭐 아주 최악의 상태였죠. 그러니까 보복이랄까, 응징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정당화 될 수가 있는 거죠. 국가 원수와 각료들, 그리고 고위인사 일행을 폭사시키려고 한 기도니까요. 북쪽에서는 자작극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북쪽에서는 자작극이라고 완전히 부인을 하지요. KAL기 폭파사건 때에도 자작극이라고 부인했어요. 김현희, 그리고 누구도요.

연구자: 최은희, 신상옥.

구술자: 네. 부부인 감독과 배우를 납치해가지고 갔을 때도 본인들이 자진해서 들어왔다고 주장한다든지, 그 외에도 북쪽의 속성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 시인을 안 하는데, 아주 일관돼 있어요. 천안함 사태도 그렇고, 미안하단 말 안하고,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지요. 고맙단 말도 안 해요. 공식적으로는 ‘미안합니다.’라던가 ‘고맙습니다.’라던가 그런 말 안하고 완전히 부인을 하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꾸며낸 것이다, 자작극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북쪽의 특징이죠. 금강산 관광의 피격사건도 사실 공동조사를 우리 쪽에서 하자고 할 때 공동조사 응해가지고 공동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사해서 잘잘못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든지, 어떻게 하자든지,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든지 하면 금강산 관광은 그대로 지속이 됐을 겁니다. 설사 그게 핵무기 개발의 재원으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재개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죠. 동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동독만 해도 자기들 내부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지독한 강압·감시체제하에 있지 않았고, 공산국가 중 비교적 잘사는 나라가 동독이었어요. 북한은 순수한 공산주의체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제군주체제인데, 공산주의를 이용하는 거죠. 핵무기도 지금 핵보유국이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했는데 그 뒤에 핵무기를 사용한 전례가 없어요. 또 소련이나 중국이나 영국, 불란서(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핵무기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정권의 성격이 좀 특이하고 말하자면 비정상적이고 대단히 위험한 정권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몰라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특히 민주국가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NPT에도 가입되어 있으니까 과히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과격한 집단이나 모험을 하는 집단에

핵무기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죠. 다른 나라에서는 핵무기를 두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죠.

연구자: 장관님, 체육회담이 상당히 여러 번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성과를 못 거두고 결렬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체육회담이 결실을 못 맺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구술자: 그게 의견이 안 맞는 상태에서 씨름하고 있었는데, 올림픽 대회에 참석하려면 엔트리(entry)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엔트리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간상으로 도저히 단일팀을 구성해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시점이 되어 북쪽에서 제의한 거죠. 우리도 도저히 그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때 체육회담을 이용해가지고 첫머리에 아웅산 테러 폭파사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북에 김일성이 있었지만 김정일 작품이라 해서 김정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깐 사람들이 회담을 하다가 박차고 나갔어요. 우리도 회담할 때 우리 대표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메모를 집어넣습니다. 저쪽은 저쪽대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그쪽에서 들어오는 메모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좋게 나가다가도 무슨 메모를 받고 돌변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치고 했어요. 그리고 무슨 메모가 들어오면 허허 웃고 아주 일류배우 이상이에요. 북쪽은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전문화 되어있고, 기술화 되어있어요. '회담꾼' 이라고 하는데, 회담만 했기 때문에 회담의 테크닉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죠. 우리 쪽이 학문의 수준이 더 높아도,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우리 대표도 저쪽에서 으르렁

대고 하면 힘들죠. 우리는 자꾸 로테이션이 되니까요. 북쪽은 장기간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훈련된 사람들이라서 여기서 철저히 준비를 안 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잘하고 저쪽이 잘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요.

## 7. 통일의 장애요소로서의 북한 핵문제

연구자: 마지막으로 장관님 3년간 재임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국토통일원 장관을 하신 장관님 중 한분이시거든요. 장관님 말씀하신 게 저도 감명 있는데, 3년 재임기간이 남북 관계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통일의 장애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지요. 외부적으로는 주변 관계국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점입니다. 미국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하고 중국, 그런 게 또 하나의 장애요소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념과 체제 차이, 즉, 이질화 돼 있는 거죠. 북한이 동독과는 달리 폐쇄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장애요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입니다. 통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화합을 하는 건데, 교류나 협력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교류나 협력을 통해서 북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핵무기 개발에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인도적 지원까지도 북쪽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전용할 수가 있는 것

이고요. 북쪽 입장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배급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현금이 댔든 물자가 댔든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재원을 아껴가지고 핵무기 개발에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한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하는 게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견지에서 상황이 호전된다든가 호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뀐다든가 하는 것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계속 연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준비 작업이죠. 통일준비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통일연구원도 준비하는 거고, 통일부도 준비해야 하고요. 준비를 계속하면서 어떤 모멘텀(momentum, 탄력)이 생기면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되고요. 성급히 해야 될 과제가 비핵화하는 것이니까, 비핵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그중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 영향력)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하나의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영향력 개발을 해야 되고. 다음에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경제 협력 체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상호의존관계를 증대해야겠지요. 중국, 일본에서 FTA(자유무역협정) 같은 거 체결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한·중, 한·일, 중·일 간에 관세 철폐가 되고 커먼 마켓(common market, 공동시장) 같은 거도 만들 수 있고요. 상호 교류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면 동북아에도 EU(유럽연합)라던가 ASEAN(동아시아국가연합)이라던가 그 밖에 국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북한을 개방, 개혁의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북쪽에는

당근도 필요하지만, 압박이 더 잘 듣죠.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중국하고 여러 나라가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대화주의자이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효과가 날 때까지 제재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제제재를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제재가 약했기 때문이죠. 6자회담이 성공 못한 것도 북쪽의 기만책이랄까, 대화하면서 시간을 벌며 내부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해왔고, 제네바 협정도 그렇고요. 경수로 만들어 주면 핵무기 개발 안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거짓말이나 기만책으로 귀결이 됐죠. 좌우간 통일은 안할 수가 없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통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연구를 활발히 해서 묘책을 많이 개발해야 되거든요. 총론보다도 각론을 개발하는 게 어렵거든요. 총론에서 합의가 되도 각론에서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각론이 충분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통일연구원이 할 일은 앞으로도 많이 있다고 보죠. 심지어 통일된 뒤에도 통일연구원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통일, 제도상의 통일보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 뒤에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완전히 동화되고 동질화도 되어야 하니까요.

연구자: 장관님 한 시간 반 이상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각론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술자: 통일연구원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탁월한 아이디어, 묘안도 개발했으면 합니다. 거기 베테랑들이 많으니까 아주 정밀하게

북쪽에서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고,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하고. 다 준비를 해야 되죠. 상황이 벌어진다하면 'best case' 시나리오도 있고, 'worst case' 시나리오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예측도 잘해야 되겠죠. 통일연구원이 생기기 전에는 통일부에서 연구를 했는데 불충분했죠.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돌아가셔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전화로 물어보세요.

#### 구술자 상세 프로필

1934. 1. 17.	경상남도 합천 출생
195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1976. 10. ~ 1980. 1.	경기도지사
1980. 1. ~ 1981. 4.	부산시장
1982. 1. ~ 1985. 2.	국토통일원 장관
1985. 10. ~ 1988. 10.	한국전력공사 이사장
1988. 3. ~ 1991. 3.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1990. 8. ~ 2001. 1.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장
2001. 1. ~ 2013. 8.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명예원장
1994. ~ 현재	국제인권한국연맹 이사
2015. 9. ~ 현재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

# 이세기

## 간략 프로필

- |               |   |
|---------------|---|
| 1936. 12. 3.  | 황해도 개성 출생<br>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졸업<br>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졸업 |
| 1981. ~ 1999. | 제11, 12, 14, 15대 국회의원                             |
| 1985. 2. 18.  | 통일원 장관  |
| 1986. 8. 27.  | 체육부 장관  |



이세기 전 장관님의 구술은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한중 친선협회 사무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진행은 이우태 박사가 맡았으며, 1시간 57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세기 장관님은 11대 국회의원을 마치고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과정, 재임 당시의 소회 등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이야기하셨다.

## 1. 통일부 장관 임명 배경

연구자: 장관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심도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교수로서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 하시다가 제11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셨고, 11대 국회를 마치시고 대북·통일정책 수행의 장으로서, 국토통일원 장관에 임명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 입문하신 과정 안에서 어떻게 대북·통일정책 수행 장관으로서 공직을 택하시게 되셨고 어떤 배경이 있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내가 학생 때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으로서 4·19선언문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4·19 전후 학생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끌어왔는데, 정치인들이 학생들의 주가가 높으니까 학생들을 불러다가 선거운동에 동원했었죠. 학생들이 이렇게 선거운동에 많이 흡수돼가면 곤란하다고 보고 나는 1960년 9월에 남북통일 전국대학생 시국 토론회를 열어서 통일문제를 전면에 끌어올리는 노력을 한 적이 있었죠. 이후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민통학련’과 같은 좀 진보적인 학생 통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도 간접적으로는 그 흐름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5·16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학생 세력은 전부 서리를 맞았죠. 5·16 직후에는 예비 검속을 당해서 나도 한동안 갇혀있었고 감시의 대상이 돼버렸던 거죠. 여하간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끝나고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학교를 떠나서 서울 성동에서 지역구를 갖게 됐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 된 셈이죠. 국회의원 한 3~4년 하고 있는 중에 1985년에 통일부 장관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통일부와의 인연이 생깁니다.

연구자: 그러면 당시 장관님께서는 11대 임기가 끝나고, 12대에 선거가 치러진 직후에 발령이 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대 국회에서 서울 지역에는 당시 민주정의당 소속 후보로는 장관님을 포함해서 단 두 명만이 당선이 되어서 굉장히 전두환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그래서 통일원 장관에 중용이 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원 장관으로서 임명되셨을 때,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한 언질이라든가 장관 임무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었나요?

구술자: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정책 방향이나 미션을 지시받은 것은 없어요. 그냥 그때는 남북관계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이후 경제 개발에 집중을 했고 근대화 작업이라고 하는 목표 하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실적을 올리니까 북한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초조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북한에서는 남한을 경제적으로는 따라잡기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민족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평양 근방에 단군릉을 만들어서 마치 민족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 같이 했었죠. 또, 안중근 의사 유해를 발굴해서 평양과 황해도 고향에 상장을 만들어 놓으면 민족 정통성 경쟁에서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나는 남북관계를 더 이상 긴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북적십자회담과 국회회담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체육회담까지 열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남북 대화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나는 대화를 어떻게든 깨지 아니하고 잘 해나가야겠다고 결심하고 통일부를 맡았던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2. 재임기간 남북관계

연구자: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당시 국제 정세 같은 경우에는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집권을 하고 등장을 한 이후에 미·소 간에 화해의 분위기가 시작이 됐었고, 중국은 개방화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 남북관계를 보면 1984년 10월에 버마 아웅산 사건이 있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장관계였는데, 의외로 전두환 대통령께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하셨었고, 그러면 국제 정세가 당시에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나 통일 환경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6·23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Two Korea론’ 아닙니까? 말하자면 공존공영 정책이죠. 공존공영 정책 속에서 이후락 씨도 북에 갔다 오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키자라는 입장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남북 양쪽이 다 맞아 자연스럽게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예술공연단도 왕래를 하고, 남북대화에 아주 활발한 꽃을 피우던 시대를 맞이해서 당시 나는 그것을 지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 3.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의 남북 예술공연단 교환공연

연구자: 장관님, 예술 공연단 교환방문 말씀이 나와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교환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공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당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측은 자유 왕래를 주장하고, 북측은 반대하고 있었고, 공연단 실황중계 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실황중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북측은 오히려 실황중계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산가

족 교환 방문은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왜 예술공연단이 의제에 들어갔었고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남측은 실황중계를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예술공연단이 남측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은데 예술공연단을 받아들인 배경과 공연 실황중계를 우리가 왜 꺼려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구술자: 당시 북측에서는 남북한 전체 사회단체들을 총 망라한 대규모 교환 행사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은 북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선전을 목표로 한 것이었고, 우리는 정부입장 하나를 가지고 가야되는데, 북쪽에서는 전체 제반 사회단체 대표들이 총 망라해 오면 남측의 한 목소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전략은 북한은 선전논리거든요. 우리는 순수한 예술이지만 북한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 논리가 포함된 거니까 그런 것에 더 집착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선전 논리는 어느 정도 막으면서 남북 교류를 깰 수는 없으니까 북한의 요구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4. 반동회의 30주년 기념회의 참석

연구자: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재임기간 중에 또 가장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많이 받으셨던 내용이 반동회의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1985년 4월 23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동회의의 30주년 기념행사에 한국 대표단의 대표로서 참석하셨었고, 반동회의라는 것이 결국 비동맹 국가들의 회의인데, 한국에는 그리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 한국 측이 어떠한 이유로 대표단을 파견했는지, 또 그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point)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북한 대표단에 대표로 온 손성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접촉하셨고, 환담을 나누셨던 것으로 되어있고, 중국의 오학겸 외교부장과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그 전에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중국 민항기가 춘천에 불시착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민항기 승객들에게 관광도 시키고 선물도 주고 잘 대접해서 중국으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이어서 중국 해군 어뢰정이 선상 반란이 일어나서 서해 군산 앞바다로 들어온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당시 보도는 안 됐었지만 민항기도 망명하는 사람이 협박해서 온 거 아닙니까. 해군어뢰정이 온 것도 청도 앞바다에서 반란분자가 어뢰정을 끌고 넘어 온 겁니다. 이후 선상 반란 주도자들은 대만으로 망명 신청을 했고 어뢰정도 대만에 가져가겠다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했어요. 내 기억에는 당시 한국에 두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강경파 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사람도 배도 모두 대만으로 보내주자 이런 주장이었고 온건한 사람들은 장차 중국하고 문호를 열어야 될 텐데, 배는 여러 가지 해군 비밀사항도 있을 테니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하는 양론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결단했어요. 주도자들은 대만으로 보내더라도 배 자체는 중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옳겠다는 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보냈어요. 그런 후에 1985년 4월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비동맹 회의 30주년 기념회의에 한국이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원경 외교부 장관이 반둥회의에 참

석하기로 예정이 돼있었는데 대통령이 제2차 방미를 해서 이원경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수행단으로 가게 됐어요.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손성필도 온다 하고, 중국에서 오학점도 온다 하니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반둥회의에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게 됐어요. 한국은 30주년 회의 참관자로 처음 참석했던 반둥회의인데, 북한에서는 벌써 참여한지가 오래됐고, 10주년 기념회의 때는 김일성이 김정일을 데리고 참석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거기 가서 알았어요.

연구자: 네.

## 5. 북한 손성필과의 접촉과 막후 대화창구 마련

구술자: 하여튼 나는 30주년 기념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로 가게 됐고, 외교부 차관급 인사가 부대표로 나를 수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둥에 갔는데, 목타르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이 나한테 묻기를 회의장에 북한 대표가 오는데 좌석을 북한 대표와 함께 앉아도 괜찮겠는가, 불편하면 따로 앉으셔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통일부 장관인데 북한 대표로 손성필이 오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따로 앉을 이유가 없겠다고 해서 함께 앉게 됐어요. 하루 전날 저녁에 리셉션(reception)을 하면서 서로 인사 교환하는 자리에서 내가 손성필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월에 대통령한테 연초 업무보고를 하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재밌게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남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반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니까 전부 선전전에 치우치잖아. 그러면 본심을 몰라, 서로 선전하다가 말아. 그러니 이 장관,

막후 대화창구를 한번 만들어봐.” 그냥 그 분이 특별히 무슨 뜻이 있어서 얘기했는지, 일반론적으로 한 얘기인지 하여튼 “막후 대화창구를 만들어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막후 대화창구를 어떻게 만드나’하고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대통령의 지침이니까 나는 늘 막후 대화창구를 어떻게 만드나 고심을 하고 있었던 차에 반동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손성필을 만나게 됐어요. 반동회의 참석하기 이전에 막후 대화창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장세동 안기부장하고 피차 바빠서 전혀 상의를 못하고 손성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연구자: 네.

구술자: 대통령의 지침이었던 남북대화 창구를 만들라는 것이 나한테는 늘 풀어야 될 숙제였는데 ‘내가 과감하게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을 갖고 회의장에서 손성필에게 내가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하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던졌느냐 하면 신문에 백두산 천지에서 이상한 물체가 드러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손성필 보고, “우리는 독도를 잘 지켜내고, 북측에서는 백두산을 잘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손성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백두산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 해서 받은 뺏겼어요.” 옛날에 정계비 세우려 올라가다가 끝까지 안 올라가고 도중에 내려놓고 왔잖아요. 백두산을 조상의 잘못으로 받은 뺏겼다고 실토했어요. 그 다음 날도 같이 앉게 됐고 그리고 끝없이 대화했어요. 비동맹 회의니까 중국이 왕초 아니에요. 중국 오학점 외상이 연설을 하면 그게 제일 하이

라이트예요. 오학겸 연설은 잘 들리지도 않고, 손성필하고 앉아서 계속 환담했어요. 손성필이 양정학교 다녔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서울역 뒤 마포 쪽으로 올라가는 고갯길 넘어 다녔대요. 그때를 상상하면서 그 고갯길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참 궁금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누나인가 누이동생이 독섬 쪽에 살고 있대요. 당시에 독섬은 내 선거구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활발하게 하고, 요새 애들 말 안 듣고, 자기들끼리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 걱정된다는 얘기까지도 많이 하고 나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꽤 친해졌어요. “지금 남북대화를 하고 있는데 선전 논리로 양측에서 자기주장만 하니까 내용에 진전이 없다, 그러니까 막후 대화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덤석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좋죠, 좋죠.” 그러면서 건성건성 대답을 해요. 내가 보기에 그게 좋아서 하겠다는 의지 같지가 않았어요.

연구자: 장관님 마음에 썩 들지 않으셨겠어요.

구술자: 손성필한테 막후 대화창구를 만들자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난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때 인도네시아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이었어요. 수하르토 대통령이 개막식에도 와서 연설을 했지만 끝나고 난 뒤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송별파티를 했어요. 그때도 나는 손성필하고 나란히 앉았어요.

연구자: 꽤 오랜 시간 접촉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네요.

구술자: 친해졌다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피차가 익숙해졌어요. 그래

서 손성필 성격도 내가 짐작을 하게 됐고, 손성필은 손성필대로 내 성격을 짐작했을 거고. 그래서 꽤 대화가 통하는 처지가 됐는데 느닷없이 손성필이 나보고, “이 선생”, “예. 말씀하세요.” “그동안 남북대화, 막후 대화창구 만들자는 얘기 말입니다. 그게 이 선생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전부 합의가 된 얘기입니까?”라고 물어요. 대통령의 지침은 받았지만 그거는 통일부 업무보고 때 일반 지침이지 해석에 따라서는 관계 기관과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연구자: 어떻게 답변 하셨어요?

구술자: 그걸 대통령 지침이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손을 딱 잡고서 “손 선생. 그동안 나하고 3일을 같이 지냈잖소. 그래 나를 몰라보겠소? 그게 무슨 소리요? 합의했냐, 안했냐는 얘기요? 무슨 소리요? 그동안 날 봤으면 나를 알 텐데?” 이렇게 역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하고 통 문지를 앓더라고요.

연구자: 손성필이 그 질문을 한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상부에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정확한 의미전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차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술자: 가서 김일성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확인하고 넘어 갈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나는 돌아와서 즉각 대통령한테 자세

히 보고를 했어요. 이후 노신영 총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장관”, “예”, “통일부 장관 그만해야 되겠어.” “그래요? 그럼 그만 두죠.” “각하께서 다른 자리를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 그렇게 슬쩍 흘리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나는 지금 통일부에서 뿌리박고 실적을 올리고 싶은데, 그만뒀야 되겠어, 다른 자리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총리가 전화를 하니까 내가 섭섭했어요. 대통령께서 손성필 만난 것도 그렇게 좋아하셨고, 오학겸 만나서 얘기한 것도 좋아하셨어요. 참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만두라니까 그만둔다고 했지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국회 원내총무하래요.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내가 오학겸 만나서도 양국 간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실적을 꽤 올렸거든요? 그때 오학겸하고 친해져서 그게 수교로 연결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됐거든요.

## 6. 중국 오학겸과의 인연

연구자: 장관님, 오학겸 외교부장 만나셨을 때 1986년 아시안 게임 참석을 제안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중공은 우리에게 적대국이고 북한과의 동맹관계라고 한국에서는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1986년 아시안 게임 참가를 제의를 하셨을 때는 반동회의 가기 전에 대통령의 지침이 있으셨는지요?

구술자: 오학겸을 만나서 그때는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숫자가 일본이 늘 1등이고 우리는 늘 3등 정도를 했어요. 중국이 2등, 우리가 3등 이렇게 할 때인데 오학겸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면서 “아시

안 게임, 일본하고 붙어서 이길 자신 있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청·일 전쟁이 한국에서 터졌는데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졌다, 희생당한 건 한국이었다. 그때 청·일 전쟁에 당했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졌던 새우가 커서 지금 스포츠 청·일 전쟁에서 심판을 보게 됐습니다. 일본을 이길 자신 있소?” 이렇게 물었더니, “예. 심판만 잘 정확하게 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국 민항기 여객들이 내 선거구에서 먹고 자고한 얘기를 했더니, 오학겸이 내 손을 딱 잡더니. 고맙다고, 그 때 자세히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잘해주셨다고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몇 번씩 해요. 그 후에 수하르토 대통령이 개회식 연설을 하기 위해서 반등까지 왔는데 기차가 좀 연착이 되어서 한 40분쯤 지루하게 기다리게 됐어요. 그 때 대기실에서 나하고 오학겸하고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한국에 삼국지가 있습니까? 있죠, 고등학생들 많이 읽는다고. 그러냐고. 수호지를 아십니까? 물론이죠. 알고말고요. 그랬더니 오학겸이, 한자를 씁니까? 한자를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기초 한자는 다 가르치고 간판도 한자 간판 뭐 많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꼬덕꼬덕 하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북한에서는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학겸 생각에 동맹국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한자를 완전히 깨끗이 청소해버렸는데, 적성국인 한국에서는 삼국지, 수호지도 알고 기초한자도 다 가르친다? 간판도 한자가 많다? 묘한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몇 번 꼬덕꼬덕 해요. 참 묘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중한대사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내가 한국은 벌써 민간 차원에서 귀국과의 협력을 내다보면서 중한 대사전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13만 단어짜리가 제일 큰 건데 한국의 사전은 30만 단어짜리 세계에서 제일 큰 중한사전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학겸이 “옥편입니까, 말 사전입니까?” 말 사전이라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게 한국에서 가능하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기 직전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잘 가라고 그러면서 악수를 청했더니, “어뢰정을 한국이 그렇게 신속하게 보내줄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어뢰정을 보내준 것은 양국의 미래에 좋은 기초가 될 것입니다.”라고 해요. 수교를 나한테 암시해 준거죠. 이후 오학겸과의 대화, 손성필과의 대화를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특별보고를 했어요. 대통령이 보고를 받더니 몇 번을 수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가 다 끝나고 “그 때 통일부 장관 좀 더 했으면 싶었는데요.” 그랬더니 “반동가서 한 거보니까 손성필도 잘 다뤘고 증공에 오학겸도 잘 다뤘는데, 야당이 제일 골치 아프니까 이 장관 같으면 야당을 더 잘 다뤄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원내총무로 보냈다.” 하시더라고요.

연구자: 당시 신민당이죠.

구술자: 맞아요. 그리고 미주리대학(Missouri University)에 장원호 교수라고 고려대 정치과 동기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오학겸 얘기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했더니 “오학겸 아들이 내 제자야.” 그래요. 오학겸 아들이

미주리대학 마스크컴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내 친구의 제자니까 연락 통로가 생겼어요. 이후에 내가 체육부로 가서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오학겸에게 중국의 올림픽 참여에 관한 편지를 써서 오학겸 아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미수교 국가가 돼서 자신은 외상이라 서울올림픽에 참여를 못하지만 중국이 참여하니까 서울올림픽이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연락이 와요. 올림픽이 끝나고 기념주화 한 세트 좋은 거 보내면 서울올림픽 성공 축하한다고 또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수교할 때 막후 대화 창구가 돼 있었어요.

연구자: 중국은 판시(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 7. 88라인과 남북관계

구술자: 손성필이 내가 국회 원내총무로 있을 때 이산가족 교환 방문과 예술단 교환 할 때 북측 단장으로 서울에 왔어요. 판문점에서 손성필이 나는 이세기 장관을 안다고 하면서 만났으면 하는 신호를 언론에 던졌어요. 그래서 그때 ‘막후 대화창구’ 답을 가져왔다는 신호를 보내는구나 생각했죠. 손성필이 떠나기 전날 송별파티 하는 장소에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사람들 많은 송별파티 장소에서 무슨 개별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국회사람이지 통일부 소속도 아니었던 말이죠. 그래서 손성필을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막후 대화창구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못하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들은 거는, 손성필이 “좋다. 막후 대화창구를 갖자.”하는 답을 가져왔고 끊어졌던 막후 대화창구가 연결이 됐어요. 북쪽에는 한시해

가 전화 받는 담당이고, 남쪽에는 박철언이 전화 받는 담당이 됐죠.

연구자: '88라인'이라고.

구술자: 그렇죠. 박철언하고 한시해하고 전화 통화하고, 장세동도 평양 가서 김일성 만나고 왔고. '88라인'을 통해서 허담이 여기 와서 면담도 했고, 정상회담까지 내다보는 준비가 그걸 통해서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상회담까지 내다보면서 '막후 대화창구'를 만들라고 한 건데, 나중에 주변에 반대가 많아서 전두환 대통령도 좀 주저하게 되었고.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서 장세동도 갔다 오고, 허담도 다녀갔고, 다 진행이 됐는데 전화 당번을 박철언 씨가 하면서 소문이 나고 그러다가 청와대로 박철언이 갔거든요? 청와대로 전화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때 박세직 씨가 안기부장이었는데, 박세직 씨와 박철언 씨가 전화를 누가 갖느냐,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 때문에 두 박씨가 싸웠어요. 그러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 8.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태동

연구자: 장관님의 판단으로 남북관계는 일정기간이었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교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술자: 장세동 안기부장이 가서 김일성을 만났잖아요. 박철언 씨도 수행하러 가서 김일성을 만났어요. 88라인, 핫라인(hot line)을 통해서 북쪽에서 허담, 한시해가 왔잖아요. 그리고 허담이 전두

환 대통령 면담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범으로 내놓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이흥구 씨가 통일부 장관 할 때 만들었는데, 이흥구 씨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기 전에, 국회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3당 간의 토론회가 있을 때, 민정당 대표로 내가 발표를 했고 YS(김영삼)당을 대표해서 박관용 씨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DJ(김대중)당을 대표해서 조순승 씨가 발표했어요. 국회에서 통일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했어요. 나는 그때 민정당을 대표해서 통일방안을 만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초가 된 거예요.

연구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자,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상하실 때, 특별히 장관님께서 당시 고려하셨던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셨나요?

구술자: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북한에서 ‘연방제’라고 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항해야 되고 능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북쪽에는 ‘고려연방제’라고 해서 모자 둘을 씌워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로 표현하더라도 그 모자 둘을 만들기가 힘들더군요.

연구자: 2체제 1국가, 2체제라는 것을 깨기 위한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이 고심을 하셨겠네요. 당시 그 방안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안이 됐을 기간에 정부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이견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나요?

구술자: 없었어요. 국회에서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해보자고 해서 세미나를 했고, 열렬히 토론을 했고. 그래서 내가 발표했던 것이 주요 골자가 되가지고 정부, 통일부에서 참고를 했고, 이흥구 씨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지요.

## 9. 향후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관련 고언

연구자: 장관님, 정계에서, 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현재 남북 관계 및 대북정책을 바라보실 때, 중국의 최고 전문가로서 현 시점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주변 환경을 바라보실 때, 참 많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향점이 어느 곳으로 가야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고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주실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 재직시절에 경험을 되살려 보시면 현재 통일부 장관, 또 후임 통일부 장관들이 통일부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지 소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나는 우연히 중국하고 가까워졌고 한·중관계도 좋아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정을 쏟는데, 중국이 도와줘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중국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 하나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중친선협회를 만들고 요새도 중국을 왕래합니다. 나는 통일부 장관은 그때 그만 뒀지만 통일이 되는 거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고, 내가 통일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언제고 중국과의 깊이 있는 대화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중국을 지금까지

쪽 개척해 왔던 거죠. 그리고 대화할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중국도 북한을 버릴 순 없다 하더라도 북한보다도 한국을 더 좋아할 정도까지 왔는데, 요새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중관계가 나빠지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아주 속상하고 곤혹스럽고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통일을 하려면 언제고 중국이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군이 존재하고 있는데 통일이 돼 버리면, 미군이 더 이상 주둔해야 될 논리적 근거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중국 사람도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의 질서로 통일하는 것이 북한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논리적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져야 되니까요. 결국은 사드도 들여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정했으니 들여오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하고 잘 가던 관계에 금이 가니까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걱정스러워요.

연구자: 장관님께서서는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거니와 이전에 북한의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있으셨고, 중국의 역할이 지금 시점 이후에는 소극적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술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죠. 남북관계 여하에 따라서, 미

중관계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독자적인 외교 능력이 없어진 셈이 돼버렸어요. 외교부 장관도 발언권이 없게 됐고, 통일부 장관은 더더욱. 무슨 얘기를 지금 하겠어요. 사드 도입으로 인해서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연구자: 장관님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술자: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지금 어려운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미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러시아 포위하고, 포위 전략이죠. 그리고 미국은 무기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동맹 관계니까 그 관계는 잘 유지하고. 그래도 옛날에 일본한테 당한 거나 중국한테 당한 거나 그래도 미국이 제일 짚잖아요. 미국하고 협력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미국 믿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미국이 통일 시켜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88올림픽 때 금메달 따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정, 기, 흥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에서 4위를 한다고 상상이나 했어요? 또 월드컵 축구에도 세계 4강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국민들이 영차영차 하면서 모으는 힘이 역사를 바꾸더라고요. 국민들의 정, 기, 흥 이것이 한 데 뭉쳐가지고 하나의 에너지로 폭발하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언제쯤 그런 계기가 또 오는가. 올림픽 때 한 번 있었고, 월드컵

4강 때 있었던 기의 결집, 흥과 정과 기가 폭발하는 그 시점이 언제 다시 오겠는가, 그야말로 통일을 계기로 해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통일되는 날이 아닐까요. 북한은 돈이 안 들어 오는데 그래도 지금 버티는 모양이에요. 조금 있으면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금을 내다팔 겁니다. 북한에서 금을 파는 시점이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붕괴의 과정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때 찬스(chance)를 잡아서 통일을 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구자: 장관님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소중한 회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구술자 상세 프로필

1936. 12. 3.	황해도 개성 출생 고려대학교 정경대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졸업
1979. ~ 1981.	고려대학교 교수
1981. ~ 1999.	제11, 12, 14, 15대 국회의원
1981. ~ 1984.	국회 올림픽특별위원회 위원장
1985. 2. 18.	통일원 장관
1986. 8. 27.	체육부 장관
1985. 8. 1.	한나라당 원내대표
1993. ~ 199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1996. ~ 1998.	국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
2002. ~ 현재	현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 회장
현재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 최영철

## 간략 프로필

- |               |                                   |
|---------------|-----------------------------------|
| 1935. 2. 2.   | 전라남도 목포 출생<br>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
| 1973. ~ 1988. | 제9, 10, 11, 12대 국회의원              |
| 1985. ~ 1987. | 국회부의장                             |
| 1988. ~ 1989. | 체신부 장관                            |
| 1989. ~ 1990. | 노동부 장관                            |
| 1992. ~ 1993. |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 2008. ~ 현재.   | 서경대학교 총장                          |



최영철 전 부총리님의 구술은 2016년 8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서경대학교 총장실(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진행은 이우태 박사가 맡았으며, 1시간 26분 동안 이루어졌다. 최영철 전 부총리님의 구술내용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공직을 맡게 된 상황, 재임 당시의 소회 등과 관련된 상세하고 생생한 사건들로 이루어졌다.

## 1.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임명 배경

연구자: 먼저 오늘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사와 관련해서 전직 장관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주요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제9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4선 의원을 역임하셨고, 정부에서는 체신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 공직에도 재직하셨습니다. 1992년 6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노태우 정부 마지막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서 재임을 하셨습니다.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어떻게 공직을 맡게 되셨는지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구술자: 체신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 끝내고 대통령 정치담당 특별 보좌역으로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예요.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인사가 나서 좀 놀랐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노태우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서 행정부의 세 군데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해온 결과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구나. 정권 임기가 다 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삼스럽게 나를 다시 부총리로 기용을 해 주신 것이 만일 내가 세 군데서 잘못했으면 다시 기용을 해주었겠나 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고, 나로서는 아주 흐뭇했습니다. 통일은 우리 국민 모두의 화두요, 소임이고 온 국민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누구든지 부총리는 다 될 수 있고, 나도 그런 자격은 있고. 또 조금 관여들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국회 부의장 일 때, 의장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거의 일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 직무를 제가 대신하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남북 국회의원 회담을 제안해왔어요. 그게 아마 1985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회뿐만이 아니고 각 정당에다가도 편지를 보내서 제안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때는 문제가 된 게 이북에 국회의원이 있느냐 하는 것까지 상당히 남쪽에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의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게 한국의 국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해도 천 명이 더 되는 그런 대표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표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속된 말로 맞대결은 격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가릴 필요 없이 하자고 해서 대표를 선임하고 결국 성사를 시키는 데 관여했어요. 거기서부

터 시작해서 조금씩 통일문제에 접근하게 됐어요. 제가 특보로 온 뒤로 대통령께서 언젠가는 통일관계 일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특보는 정치 담당인데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식 대표는 아니었지만 자꾸 저의 의견을 묻고, 남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쪽에서 대표단이 왔을 때는 각종 행사에 반드시 나를 나오라고 챙겨주시더라고요. 1992년 2월 9일, 남북의 두 영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미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효력 발생 선포식을 하는데 대통령이 올라오라고 하셔서 내가 배석했어요. 그때 대통령, 국회의장 박준규, 회담 대표 정원식 총리, 그리고 부대표 육군 대장 송응섭 씨 등과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중에 부총리가 되어 보니 언젠가는 한 번 나를 끌려고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네요.

연구자: 통일원 장관에 임명되시는 것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국회의원 시절, 부의장 시절부터 부총리님께서 일련의 활동 과정이 노태우 대통령의 의중에 포함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러면 임명 받으실 때 노태우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주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구술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기가 가까워지는데, 여러 방면에서 소리나지 않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잘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남북회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진영 안에서도 강경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다투기도 하는데, 그런 걸 잘 살피서 뒷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남북

관계와 북방정책을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시켜서 이만큼 끌고 왔는데, 그 뒤가 끝까지 당신이 계획했던 대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면에 신경을 써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2. 재임기간 정세 및 통일 환경

연구자: 부총리님 재임기간에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좀 특징적인 측면이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합의서의 내용을 실천에 옮겨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천명하셨고, 또 상대적으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도 신년사에서 ‘남과 북은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해서 남북합의서 이행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나가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공히 남북 간에 어떤 통일의 시대를 열자는 데 일정부분 교집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1992년은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됐던 시점이죠. 그래서 1992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의심받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기폭제로써 핵무기, 핵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총리님께서 판단하실 때, 재임기간 동안 통일 환경을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요?

구술자: 1992년도 신년사에서 남북 영수들이 매우 희망차고 낙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1990년 9월에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의 진척을 보아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니 두 영수로서는 매우 희망에 찬 새해맞이였음이 틀림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나는 쌍수를 들고 기뻐하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과연 이 합의사항이 제대로 실천되겠는가 하고 일말의 걱정도 함께 했었습니다. 특히 비핵화가 이루어지겠는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5선에 도전했다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잠시 민정당(민주정의당)의 국책평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어요. 그 국책평가위원장이라는 것은 민정당 소속으로서, 정부의 장관을 하신 분들 중에 입당한 사람이 정책 위원이고, 자문위원들은 차관으로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입당한 사람들을 관장하고 그 분들 의견을 당에다 반영하고 당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해서 바로 88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올림픽이 개막하기 두 달 전에 7·7선언을 발표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 정책, 공산 진영에 대한 정책은 7·7선언에서 비롯되고, 7·7선언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전환을 했다고 할까요? 참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었습니다. 7·7선언이 발표되니까 민정당 국책평가위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집 전화통이 터질 듯 해서 급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차관 했던 사람들이 200여 명 가까이 대강당에 모였는데, 이걸 완전히 북한에다 나라 팔아먹는 거라고, 아주 대단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한 남북 관계가 아니죠. 북의 남침, 6·25전쟁으로 해서 피아 간에 500만 명 이상이 죽은 그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북에 대한 인식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녹아내려지지 않을 때였단 말이죠. 쌓여있을 때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사회가 보수 세력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때 예요. 그것이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이복을 우리하고 똑같이 하자고 하니, 정말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 무렵에는 공산세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88서울올림픽은 그것을 부채질하는 기여를 했지요. 그렇지만 내가 부총리가 된 그 시점까지도 북에 대해 불신하는 보수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수 세력의 힘이 엄청나게 남아 있었던 말이죠. 더구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임기가 많이 남아서, 한 2~3년만 더 간다 해도 정착이 되겠는데. 그러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정착이 될까 걱정이 컸었습니다. 남북회담 초 정부는 회담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방식에서 핵 문제와 비핵 문제를 둘로 나누어서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그 방침 아래서 회담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핵문제하고 연계 시켜야지, 한 쪽만 잘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냐면서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어서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일단 어려운 건 뒤로 미루고, 쉽게 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핵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단 말이예요. 핵이 전혀 진전이 안 되는데, 비핵 부분은 상당한 수준으로 간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청와대 특보로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나중에 꼭 한번 터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핵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 주인이고, 우리는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핵문제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합의가 없으면 우리 의견이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눈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양해는 받았으니까

일단 별개로 했지만, 미국으로서는 우리 국내 문제보다는 역시 핵문제가 더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잘 해결이 될까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 3. 남북관계 발전과 대미 관계

연구자: 그러면 부총리님,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대로 미국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이 굉장히 앞서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쌀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한국과의 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하겠다는 표시까지 했었는데, 그럼 당시에 미국과의 관계는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가요?

구술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미국은 북한을 우리 쪽보다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가령 핵 사찰 같은 것도 북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핵 사찰이 일반사찰이 있고 특별사찰이 있어요. 일반사찰을 하려면 괜찮지만 특별사찰을 해야, 의심나는 곳을 봐야만 알 텐데 특별사찰은 아예 말도 안 할라고 덤벼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사찰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고, 남북 간에 경제 관계라든지 정치, 화해, 교류협력 분야가 제대로 그나마 갈 수 있었던 것은 핵문제가 잘 될 거라는 전제와 매년 해온 팀스피리트 훈련을 1992년에는 안하기로 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직접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나를 믿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1992년에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했는데, 하나도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때 일반사찰 들어갔

는데 전혀 북쪽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안 해요. 내가 북이라도 그럴 것도 같아요. 북이 핵 없이 큰 소리치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니 까 속에서 열불 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소리들을 해오는데, 그걸 직접 미국이 겪고 있으니, 싫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때 국방장관이 최세창 씨였는데, 내가 부총리 됐을 때 최 장관이 미국가기 전에 직접 만나서 내년 1년만 더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면 우리 임기가 끝나고 1년만 제대로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핵문제와 팀스피리트는 미국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다고 했어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수세력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1992년 도에는 굉장히 잘 갈 것 같았지만 그런 북병들이 있어서 나는 오히려 더 걱정을 했었습니다.

#### 4. 북한 김달현 부총리의 방남

연구자: 당시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를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격동의 시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1992년 북한은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수용했고 또 미국의 전술, 전략을 보면 미국이 전 세계 전술핵 철수 및 전술핵 폐기 선언과 같은 국제 환경을 북한은 맞이하게 됐었고,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개방 및 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1992년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의 경제담당 부총리인 김달현이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김달현이 서울을 방문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고, 구체적인 예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시베리아 가스 송유관 건설 협력 같은 남북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달현은 아무 성과 없이 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당시 남북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도 경제협력은 핵문제와는 별개로 논의하자는 분위기였는데, 김달현이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거절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김달현 부총리가 온 게 내가 부총리가 되고 한 달이 채 못됐을 때 왔습니다. 내가 6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 양반은 7월 달에 왔거든요. 그때 나도 만났는데, 김달현 씨가 온 것은 어떻게 보면 별동대였습니다. 남북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남북회담을 하고 있고, 남북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때, 남북회담이 2월 달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한 다음에 부속합의서를 만들어야 돼요. 부속합의서라는 것은 남북 영수들이 모두 발표한 내용은 뼈대로 있고,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속합의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속합의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늦어져가지고 제대로 속도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져야 거기서 부속 문서를 만든 다음에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위원회에서 합의사항들을 실천에 옮긴단 말이에요.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정부기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가운데 시간은 자꾸 간단 말이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교류분과위원회에서 그 문

제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북에서 보니까 소위 북의 김정우, 김달현과 같은 실용주의 협상파들이 빨리 해야 될 텐데 자꾸 김일성이 위에 앉아서 “이거 되겠어? 되겠어?” 해대는데, 자기들의 마음은 급하단 말이죠.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되는데,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지지부진해서 안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 했죠. 그 무렵 또 김우중 씨가 북에 갔는데, 김우중 씨는 조금 빨리 갔습니다. 김 회장을 만나 본 김일성이 그를 좋게 본 모양입니다. 김우중 씨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김우중 씨가 하자는 얘기 들으니까 남쪽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북한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남포 경공업단지를 김 회장이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남쪽에서 허가가 안 나온단 말이죠. 남쪽에서는 김 회장의 돌출 행동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문선명도 가고 친미파들도 가고, 친북파도 가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가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자칫하면 우리가 당하겠다.’ 생각한 김달현이 쫓아온 겁니다. 쫓아왔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남북회의공동위원, 남북합의서에서 잘 다루고 있는데 김달현 부총리가 들어온 것부터가 맘에 안 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핵발전소 얘기가 나오니까 보수 진영에서 들고 나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핵과 비핵을 분리해서 다루면서 핵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는데, 또 핵발전소 만들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북이 핵을 갖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경제협력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반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일원에서는 그래도 경제협력을 잘 해나가면 북쪽도 핵문제에 대해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우리 쪽이 오히려 마음이 급했어요. 심지어 김달현이 가고 난 다음에도 나는 한 가지만이라도 하자고 주장 했어요. 우선 김우중 씨가 가있으니까 그거 하나

만이라도 허가를 해가지고, 눈으로 보여줘서 할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됐어요. 김우중 씨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허가를 안 해주니 자기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한 얘기가 우리 정부에 들어왔단 말이죠.

연구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김달현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군요.

구술자: 그랬죠. 내가 만났을 때 김달현 씨가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겠다고 하면서 무엇이든 해 줄 수 없냐. 공동위원회에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가지만이라도 해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고, 경제는 경제 부총리가 하고 있는데, 나로서도 노력은 해 보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거절했죠.

## 5. 남북관계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연구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 통일원에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을 들여다보면 사안마다 입장이 다르게 표출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 당시 통일원은 국방부나 안기부와는 달리 온건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고 있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통일원은 대북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또 경제기획원과 조금 거리가 있는 입장을 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은 대북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던 반면 통일원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알려져 있

라고요.

구술자: 그건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그 무렵은 내가 부총리였는데, 나는 경제협력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통일원의 전체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내가 대통령한테도 그런 보고를 했어요.

연구자: 지금 알려진 거하고는 다르게 통일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온건적인 정책과 남북 협력관계를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했던 거군요.

구술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달현, 김정우를 비롯해서 북한 내 실용적인 세력이 키워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북이 강경파 일색이 될 거라고 해서 우려를 했고 경제협력도 우리 쪽에서 찬성했습니다.

## 6. 이인모 씨 북송문제

연구자: 네. 그러면 당시에 김정우나 김달현 같은 북한의 온건파들은 경제협력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되시는 거죠?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부총리님 재임 기간 동안 많이 이슈화 됐던 것이 이인모 씨 북송 문제 건입니다. 굉장히 국내적으로 많이 들끓었던 문제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인모 북송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한국정부의 공식입장과 대통령의 의중이 조금 달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는데요. 실제로 1992년 7월 7일 한국 정부는 국무총리의 대북 서한을 통해서 6·25 이후 납북 인사, 납북 어부, 납북된 KAL기 승무원 등을 포함한 모든 이산가족들이 귀환을 해야 되고, 또 정착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일환으로 이인모 씨를 송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사실상 북송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1992년 9월 14일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이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전략회의를 가졌고 대통령과의 보고자리 이후 부총리님께서도 노태우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면담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이인모의 북송 문제는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지침을 주셨다고 보입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왜 이인모 씨 북송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했으며, 또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입장(stance)이었는데 왜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의중과는 좀 다른 정책적인 입장을 취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정원식 총리가 7월 7일에 성명을 낸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그때는 내가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를 때입니다. 왜 그랬는지 차관과 참모들한테 물어보니 일단 이것저것 많이 달라고 해놓고 양보하는 척 하며 꼭 얻어낼 것을 받아내는 회담기법의 하나였었다고 하더군요. 전에, 어떠한 북한은 대화를 해가면서 이인모 송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집착하면서 이인모를 꼭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 쪽은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에서는 이인모 장기수를 보내 놓으면 북이 그거를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겠는가. 또 남쪽에 있는 이인모하고 비슷한 사람들, 북쪽만 바라보고 있는 장기수들이 고무될

것이라고 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북이 이인모를 탐내니까 남쪽에서도 서서히..., 나만 하더라도 저 늙은 영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 북에 가서 설령 남쪽 욕하고 다닌다고 해도 몇 년을 우려먹겠는가. 길어봐야 1년 정도 우려먹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인모 보내고 납북된 우리 사람들 바꿔치기 하면 손해날 것 없지 않겠느냐고 내가 부총리 되기 전부터 생각해 왔었어요. 내가 부총리가 되자 서둘러 대통령께 어떻게 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끝내고,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데, 이인모를 보내고 그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얻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에게 이인모를 보내는 대신 실향민의 노부모 상봉 정례회를 얻어내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향민들이 고향에 가서 상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북한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워낙 북한은 평양 말고는 완전히 돼지우리예요. 그런 곳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일 그걸 보여주면 체제 자체가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문점에다 면회소 설치하는 문제, 그것만이라도 꾸준히 하면 이산가족 문제 하나라도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방안을 이인모 협상으로 잘 풀자고 건의했는데 대통령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단이 떠나던 전날 대통령께 또 가서 마지막으로 얘기 했어요. 판 거 붙이지 말고 시간도 없고 하니 노부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방문과 판문점 면회소 설치 운영 등 두 가지만 수용되면 이인모를 보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해 허락을 받고 제8차 회담 참석차 북으로 가는 정원식 총리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지요.

연구자: 그러면 부총리님께서 대통령의 의중이 대표단 대표인 정원식 총리에게 전달이 됐던 사항이군요.

구술자: 그럼요. 차 안에서 자세히 말씀 다 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갔어요.

## 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훈령조작사건

연구자: 다음 질문인 훈령조작사건과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훈령조작사건이라고 표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처 간에 이견이 있던 사건이었다, 아니면 대표단 일원 개인의 돌출적 행동이다, 어떤 사람은 정책결정자의 모호한 태도가 문제였다. 또 어떤 이는 정권 말기 권력누수현상(lame duck)이다, 또 어떤 이는 통일정책에 대한 특이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왔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인모 북송 문제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굉장히 주요 의제였었고, 이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 전제조건, 지금 말씀하셨던 동진호 선원 귀환과 판문점 면회소 설치, 또 이산가족의 서울-평양 교환 방문 실현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남한 측 대표가 회담에 임했었는데요. 훈령조작사건이 어떻게 발생이 됐던 것인지 경위와 부총리님은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귀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부총리가 되어서 회담하러 갈 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내가 국무총리께 말씀을 드려서 이인모 송환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이 인모를 보낼 테니 노부모들 면회하고, 면회소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냥 맞바꾸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훈령을 요청하지 말고 거기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임동원 씨가 차관이니까 이번에는 남북 교류 문제 중에서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는 해결하고 오라고 했어요. 나는 회담사무국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삼청동 사무국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회담 소식이 전혀 안 들어와요. 교류, 방문 얘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훈령을 내렸어요. 왜 교섭들을 안 하느냐, 왜 아무것도 안하느냐, 보고가 없느냐,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회담이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순서대로 얘기 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문각으로 마중하러 갔어요. 갈 때는 총리하고 같이 차를 함께 타고 전송하고 들어왔지만 올 때는 총리도 혼자 가고 나는 내 차를 타고 임 차관하고 같이 들어 왔단 말이죠. 들어오면서 왜 전혀 아무런 보고가 없었느냐고, 내가 두 번씩이나 전문을 보냈는데 받았냐고 그랬더니 받은 바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 청훈을, 훈령을 요청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래서 훈령이 무슨 훈령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내 받은 거 없다, 아무것도 받은 거 없다고 했더니 “예? 훈령이 왔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무슨 훈령이 왔냐?” 그랬더니 훈령이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인모 씨하고 맞바꾸기로 면회소 설치하고 노인들 당장 만나게 하고 합의를 하게 될 수 있었는데, 전략회의에서 이동복 씨가 정치분과위원

장이었는데, 이동복 씨는 안기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이동복 씨가 면회소 설치와 노부모 상봉을 이루어 내야 한다면서 회담기법 상 동진호 선원 송환 여부도 넣어 거래(dealing)를 해서 빼는 대신 이인모 고향 방문에다 힘을 실어주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부모 상봉, 면회소 설치 그리고 동진호 선원 귀환 등 세 가지를 합쳐 제안을 해서 두 가지만 얻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임동원 씨는 내가 한 얘기를 알고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더니, 총리가 일단 동진호 선원도 던져 놓고 또 혹시 저쪽에서 받아들일지도 모르니 안 받아주면 맞바꾸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다고 청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훈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왜냐면 내가 총리께 대통령 각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재량껏 두 가지만 되면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이동복 씨가 다시 청훈을 하자는 것을 찬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청훈을 해서 의견을 묻는 것도 좋다고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답전이 왔다는 거예요. 총리가 그거를 받아 보았는데, 이동복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말만 조금 바뀌어서 세 가지를 다 받아주지 않으면 회담을 절대 하지 말고 오라는 식의 훈령이 왔다는 거예요. 총리가 읽어보더니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회담이 결렬된 겁니다. 결렬 됐는데, 그날 밤 김정우가 새벽 1시쯤 임동원 씨를 찾아 왔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남북 간에 고향 방문만 빼고 상봉하고 면회소 설치하는 받을테니, 이인모만 보내달라고 하면서 읍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훈령이 세 가지를 다 받아야만 한다, 안 그러면 깨고 오라고 훈령이 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지를 못했는데 그 문제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모두 합의를 봤어요. 각

분과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설치와 부속문서에 합의를 봤죠. 공동위원회를 전부 설치하기로 해서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9차 전체회의를 12월 2일에 하고, 정치공동분과위원회는 우리도 대표를 선정해서 임명하고 북쪽도 다 대표들을 전부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훈령 관계를 조사했어요. 임동원 차관이 청훈을 했고 훈령도 받았다는데, 나는 하나도 받은 바 없었어요. 회담 중에 본국 정부에다 훈령 요청을 할 때는 부총리인 나, 안기부장, 청와대 비서실 김종휘 수석 세 사람한테 보내면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훈령이 결정되면 안기부를 통해 대표단에 보냅니다. 특히 훈령 같은 것은 암호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신 관계는 안기부가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루트(route)를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임 차관에게 진상을 조사하라 그랬어요. 조사를 해서 나한테 즉각 보고를 하고 안기부에 보내서 암호, 훈령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자세하게 전부 조사하라고 했죠. 동시에 나는 이상연 안기부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기부장과는 청와대에서 쪽 함께 근무해서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청훈 왔어?” 그랬더니 모르고 있어요. 안기부장 이상연 씨가 몰라요. “이렇게 답신이 왔다는데?” 그랬더니 “난 모르는데? 그런 거 안 받았는데?” 그래요. 안기부장도 그때까지는 청훈이 온 것을 모르고 있었습시다. 조사해 보니까 이동복 씨가 청훈을 한 게 기조실장 엄삼탁한테 했고, 세 가지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마라, 결렬시키고 오라는 위조된 훈령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났겠느냐, 결국은 보수진영들의 남북회담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그 쪽 부분만 해줄 수는 없다, 세 번째로는 역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까 그것에 얽힌 거죠. 대통령이 내가 들어갔을 때 임기 8개월 남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 때 이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이미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5월 달에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되자마자 나는 청와대에 대통령하고 함께 대통령 후보문제로 골치 아팠는데, 후보되니까 내치고 일체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됐어요. 그 전부터 이미 김영삼 씨가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떨어져서 그쪽으로 나가는데 견잡을 수 없어요. 정부 핵심 부처 사람들이 모두 김영삼 씨 쪽으로 가면서 선거 전략을 협의 하는데 아마도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회담을 결렬시킨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엉뚱하던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동복과 통화를 했다는 엄삼탁이, 사실 전 정부의 안기부 기조실장을 하면 안기부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 정권에서 병무청장으로 갔다가 살아남더라고요. 또 국무총리만 하더라도 그 양반이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지 않습니까? 낙선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그때 회담에 참석한 사람들 상당수가 이미 보수진영 후보 쪽으로 손을 대고 그 쪽 명령에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사태가 바뀌어져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자: 대통령 말기에 권력누수현상(lame duck) 기간의 상황과 개인의 그런 정치적 입장(stance)에 따라서 혼용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술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께서 대노(大怒)하셨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러시더라도 눈에 안 띄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눈에 띄게 크게 나무라거나 조치를 하면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남북 간 협상에 관계했던 사람들 중에 푸대접을 받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면 같은 것 없이 옆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복 씨 같은 사람도 바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눈에 안 띄게 해주십시오.”라고 건의 했어요.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와 안기부장은 그만두게 했어요. 대통령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동복 씨도 안기부로 수평이동 시켰었지요.

## 8.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

연구자: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 노태우 정부 말기였고 김영삼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된 시기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후보 사이에는 대북정책이나 대북관에 대해서 차이점이나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구술자: 대북관계에서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연구자: 김영삼 당시 후보를 보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혔었는데, 노태우 대통령도 이와 못지않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다고 보입니다. 1993년 1월 초에

부총리님께서 동아일보와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효한 것이고,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하셨고, 또한 1993년 한 달 정도 뒤에 2월 15일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북측에서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남북 간에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구술자: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 내가 부총리 되고는 하다못해, 무슨 기회가 있으면 정상회담이라도 하면 좋을 거다 이런 얘기조차도 없었어요. 내가 8개월 남은 임기에서 들어가서 된다고 해서 정상회담이 될 리도 없고, 그러나 남북고위급회담이 잘 진행됐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김일성, 노태우 두 양반이 같이 만나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다면 안 될 것도 없었을 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안됐는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필요성을 별로 안 느꼈어요. 그때는 양 쪽이 적어도 핵문제를 제외해 놓고는 다 일이 잘 풀려갔으니까요. 그리고 어찌면 그동안 북쪽이 남쪽한테 달려왔습니다. 적어도 핵과 관계없는 부분에서는 따라왔었어요. 초창기에는 북이 좀 콧대 높게 했는데, 바로 동구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한-중 국교가 수립되고 러시아하고 국교 수립되고, 이 과정에서 동구라파 다 무너지고 도미노 현상이 북한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저자세였습니다.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 9. 제1차 북핵위기 발생과 남북관계

연구자: 총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충분한 기회도 있었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진행은 안됐지만, 결국 고위급회담이 굉장히 진행이 잘 된 측면에서 보면 남북 관계에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었다, 부총리님께서서는 남측이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핵 문제가 발생 하면서 관계의 주도권이 북측으로 넘어갔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핵 위기라는 것이 남북관계에 어떻게 작용을 한 것일까요?

구술자: 결국은 핵문제가 남북회담을 깨는 상당한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핵은 우리가 발언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문제라기보다 미국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 나만 해도 또 우리 한국 정부도 핵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 내가 느끼기로는 북이 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갖고 싶지만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핵을 가지려 해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갖게 될 거라고 과소평가 했습니다. 저도 과소평가 했어요.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이 원자폭탄을 가지려면 첫째는 원자폭탄 제조 기술들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원료라는 것은 플루토늄인데, 사용된 핵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플루토늄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았어요. 생산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리 실험실 한 쪽에다가 실험용 플루토늄 조금 생산할 그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기폭제, 폭탄이

터지고 하는 기술이 습득이 되어 있겠는가? 입니다. 네 번째로는 운반 수단이 있어야 돼요. 운반수단이라는 게 미스터리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어야 할 텐데, ICBM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운반해가서 목적인 데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박자가 맞고, 만들어 졌어도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북한에 테스트할만한 데가 어디 있는가. 나는 그때 테스트는 장소로도 지하 생각은 못하고, 다섯 가지가 다 갖추어 지기 위해서 당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말이죠. 두 번째로는 그때 IAEA에서 일반사찰을 한 번 했습니다. 영변에 가서 조사한 결과를 우리 정부에 보내준 내용을 보면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핵시설에 가서 사찰하려면 북한이 내주는 납(Pb)으로 만든 안전복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입지 못하고 미국에서 긴급수송해서 입었을 만큼 안전성이 확보가 안됐고, 1955년에 영국에서 쓰다 버린 5MW짜리 조그만 원자로를 갖다가 실험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가서 보니 아주 형편없는 것이었다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 뒤로 정부 그만 두고 1997년도에 『통일로 막히면 돌아가자』라는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도 북한에 핵은 아직 없다고 썼어요. 그런데 비단 나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핵에 대한 공포심과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비교적 핵에 대해서 국내 온건파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북은 그동안에도 계속 핵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 10. 재임기간 통일원의 위상

연구자: 간단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총리

님 재임 기간 중에 남북관계에서 통일원의 위상은 어땠으며, 남북관계는 어느 부처가 주도를 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이실직고하면 완전히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기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통일원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지요. 내 앞에 최호중 씨가 외무부 장관 하다가 통일원 장관이 됐을 때 부총리로 돼서, 초대 부총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2대 부총리이고요…. 그런데, 통일에 관한 일반 예산은 통일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와 관련되는 예산은 전부 안기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도 기조실에서 관장을 했어요. 동시에 북한에 관한 정보도 모두 안기부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대북정보에 관한 한 안기부의 정보를 통일원에서 무슨 수로 당해냅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90%는 전부 다 안기부 정보에 기초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없는 부처의 힘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위상은 높아서 자리는 위지만 실제 주관한 것은 안기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 시절이나 부총리 시절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 11.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조언

연구자: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부총리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며, 향후 더 발전된 남북관계를 위한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이제 재야에 묻혀서 될 수 있으면 정치 관계에는 관심도 안 갖고, 글도 안 쓰고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결국은 한국 쪽의 핵 정책이 실패한 거죠. 돌이켜 보면 그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루어지고, 비핵화 선언이 발효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속은 거나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달라졌죠. 김영삼 대통령 때 제일 심하게 핵문제 가지고 고민 많이 했고, 그걸 타개해 보려고 김일성 주석하고 회담을 갖기로 했었는데 김일성의 사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그분들 역시 핵문제는 실패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북의 핵개발을 도와준 결과가 났습니다. 내가 김대중 대통령 때는 대통령 통일고문을, 김영삼 대통령 때는 통일고문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통일원 고문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대통령 통일고문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에 감격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고문들에게 대통령이 북한에 다녀오신 얘기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내가 여쭙봤어요. ‘6·15공동선언을 보고 참 수고 많으셨고, 박수를 쳤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디 한군데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위협성과 없어야 한다든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단 한마디 지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문서로 남겼다고 대답해주셨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보니, 문서로 된 게 없는 거 같았어요. 남북 간 대화가 제대로 되어가는 것은 핵에 대한 것을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정책을 별개로 다루었을 때에 회담이 잘 났고 연계해가지고는 잘 안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핵에 대한 유화 정책은 실패한 거란 말이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북이 결국은 원자폭탄 만들었고, 장거리 유도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핵문제에 관한 한 실패를 했다. 실패를 했고 그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대처해야 될 거다. 가령 이번에 사드 문제도 나는 상당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온건파이고, 협상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갔다 놔야 한다, 안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계속 끌려가야 되죠. 원자탄 가지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 가지고 있고 당장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그래도 방위책은 만들어 놓고 튼튼하게 만들어 내려가야지, 마련해 놓고 큰소리 쳐 볼 수 있단 말이죠. 방위책은 철저히 해 놓아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진행 중인데도 대담과 대화는 하는 겁니다. 협상 창구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방위는 철저히 하고 대화의 문은 자꾸 두드리고 대화의 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떤 경우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시켜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부총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정리 잘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술자 상세 프로필

1935. 2. 2. 전라남도 목포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1958. ~ 1962. 한국일보, 민국일보 기자
1962. ~ 1971. 동아일보 기자·정치부장·외신부장
1972. ~ 1973. 정무담당 무임소장관실 정무조정실장  
청와대 정무비서실 특수행정실장으로 파견근무
1972. ~ 1980. 한일친선협회·의원연맹 창립 상임간사
1973. ~ 1988. 국회의원(제9, 10, 11, 12대)
1973. ~ 1976. 유신정우회 정책위원 겸 상공위원장
1974. 국회 인천항 차별선임 철폐 대미교섭단 대표  
제61차 국제의원연맹(IPU) 한국대표
1979. ~ 1980. 민주공화당 원내부총무 겸 원내대변인  
민주공화당 대변인
1980. ~ 1981. 민주정의당 15인 창당 준비위원 및 발기위원
1981. 의료보험제도 연구 미국, 이태리 방문단장
1981. ~ 1983. 국회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1982. 멕시코 콜롬비아 의원 친선사절단장
1982. ~ 1988. WHO 서태평양지구 자문위원
1983. ~ 1985. 민정당 정책위 부의장
1985. IPU(국제의원연맹) WHO(세계보건기구)  
공동주관 보건개발 국제회의 단장, 기조연설.
1985. ~ 1987. 국회 부의장
1985. ~ 1988. 한국·노르웨이 의원친선협회 회장
1985. ~ 1995. 목포 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겸 장학재단 이사장
1986. 과테말라 대통령취임식 대통령특사  
스페인 및 코트디부아르 의원친선 방문단장
1986. ~ 1993.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창회장, 육문회 회장
1987. ~ 1989.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겸 전남지부 위원장

- 1987.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초청으로 미의회 방문  
직선제 개헌 여야8인정치회담 대표
- 1987. ~ 1988. 민정당 국책평가위원장
- 1988. ~ 1989. 체신부 장관
- 1989. ~ 1990. 노동부 장관
- 1989. ~ 1995. 한국서화작가협회 회장
- 1990. ~ 1992. 대통령 정치담당특별보좌역
- 1992. ~ 1993.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1993. ~ 1998. 통일고문회의 고문
- 1998. ~ 2001. 목포해양대학교 객원교수
- 1998. ~ 2003. 대통령 통일고문
- 2001. ~ 2002. 서경대학교 석좌교수
- 1981. ~ 현재. 정진기언론문화재단(매일경제신문) 이사
- 1994. ~ 현재. 통일번영연구원 회장
- 2008. ~ 현재. 서경대학교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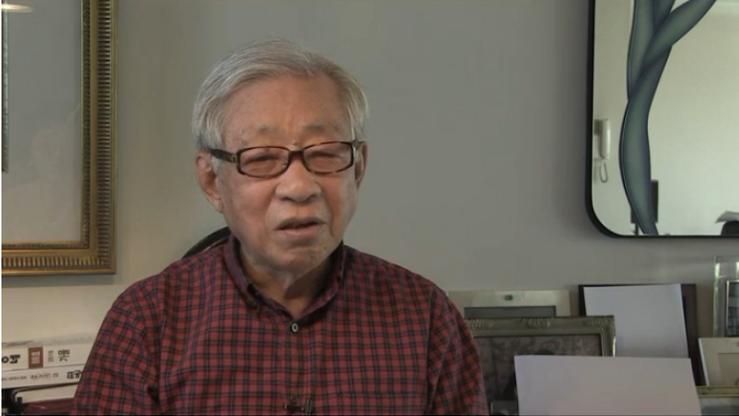


## 한완상

### 간략 프로필

1936. 3. 18.	충청남도 당진 출생
1960.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학과 졸업
1967.	미국 에모리대학교 사회학 박사
1993. 2. ~ 1993. 12.	제18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2001. 1. ~ 2002. 1.	제1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2004. 12. ~ 2007. 12.	제24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 인터뷰 개요



한완상 전 부총리님의 구술은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자택(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조정아 박사의 진행으로 약 1시간 58분 동안 이루어졌다. 한완상 전 부총리님의 구술은 공직을 맡게 된 동기, 재임 당시의 사회, 주요 정책결정과정 및 상황에 관한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

### 1. 시대적 상황

연구자: 오늘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큰 질문을 좀 드리고, 이어 세부적인 주요 사건이나 정책 위주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일 관련 내용을 여쭙기 전에 개인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여쭙보겠습니다. 30년 전이죠. 그 때 부총리님께서서는 시대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저희 젊은이들에게 비춰지셨습니다. 두 번이나 해직을 당하셨고, 여러 차례 체포구금 되셨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러다가

93년에 큰 공직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총리님의 삶을 이렇게 쪽 보면 공직을 맡기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술자: 아, 생각에는 구분이 없어요.

연구자: 예. 아마 하셨던 일은 달라졌어도 생각은 큰 틀에서 그 흐름이 이어졌을 텐데,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공직으로 옮기셨으니까 큰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술자: 공직에서 공직으로 옮겼죠. 서울대학 교수도 공직이니까 공직에서 공직으로 옮겼는데, 제가 서울대학 교수로 있을 때, 민주화 운동과 인권이나 평화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컸죠. 내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3년 하다가 서울대학 교수로 왔을 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아탑이 아니고 전투일선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단 말이죠, 문리대 교수 하면서. 상아탑이 아님을 절박하게 느꼈죠. 그 당시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군부세력과 그것에 대항하는 조직적인 세력으로서 학생세력이 정면충돌하는 지점에 내가 왔구나 하는 그런 긴박한 생각을 갖게 됐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군부세력과 격돌에서 잡혀가고 고생하는 걸 보고, 과연 그 학생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내 생각은 이런 거였죠. 한국의 지배세력이 군부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조직적으로 위축시키는 일을 하는 현실을 봤는데, 군부세력은 따지고 보면 문민독재였던 이승만의 친일권력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느꼈죠. 이승만 문민 권위주의를 지탱해 준 세력이 친일세력이기 때문이지요. 그 친일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소위 민주주의를 끌고 가려니까 힘이 들었죠. 이승만 문민 권위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데올로기(ideology)적인 프레임(frame)이 반공이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친일과 반공이 악수하게 되면서 지배세력은 민주세력을 탄압해왔죠. 그런데 그때 대학은 이러한 친일·반공 권력에 조직적으로 맞서는 유일한 조직적 대항 세력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정면충돌하는 국면에 제가 모교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 인권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학생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느끼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꼭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더라고요. 북은 강경 군부세력이고 남쪽은 냉전 강경 보수세력이지요. ‘민주주의, 인권, 정의, 이런 가치들을 이룩하려면 남북관계가 착실히 개선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체험적으로 절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철이라든지 유인태라든지 그런 제자들이 민청학련사건의 주동자로 낙인 찍혀 처벌을 받더라고요. 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는 별로 없었고, 가끔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했죠.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비판적 기독교 교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조직의 총무가 되어 집단적으로 유신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지속적 비판행위로 인해 1985년 2월에 서울대에서 해직 당

했지요. 그 후에 복직되었으나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휘말려 고생하다가 석방된 후 망명도 가게 되었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격랑 속에서도 내 신념은 변하지 않았고, 1984년에 3년의 미국 망명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지요. 그때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군부하고 학생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어 휴교 조치에서 자유로운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70년대 중반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시위가 일어나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니까 유신정부에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동승동에서 관악으로 옮겼죠. 그때 저는 관악 이전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싸워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1970년대에 정치권에는 그래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정치지도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었지요.

DJ하고 YS가 바로 그분들이죠. YS는 서울대 문리대 선배라서 친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YS와 DJ를 어떻게든 돕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들도 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시민의 항거로 6·29선언이 나오게 되었죠.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을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두 김 씨가 분열됐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상처가 컸지요. 그래서 그때 YS한테는 DJ가 나이가 몇 살 위냐고 물어보니까 세 살 위라고 해서 형님한테 양보하시라고 권고했죠. 그러니까 YS는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이 있다고 대답하셨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미 합의를 했고 선거 전전날 쯤 후보가 될 줄 알았죠. 또, 동교동 쪽에는 경상도 군벌

지배 때문에 DJ가 곧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배해 온 경상도 군부가 DJ집권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반대할 테니 YS가 일단 집권해서 군부 통치를 청산한 후에 DJ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먼저 군부 통치부터 끝내자고 했어요. 동교동 쪽에서는 그 때 4자필승론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넷이 나오면 호남후보자인 DJ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죠. 두 김 씨가 다 나오면 민주진영은 둘로 쪼개지고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밖에 없다고 했지요.

6·29선언에서 김대중 씨를 정치사면, 복권 조치하여 대통령 출마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양김의 분열을 예상하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나 했는데, 결국 분열이 되었고 분열의 결과 두 김 씨 모두 낙선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YS한테는 정치를 그만두시라고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YS는 “한 박사, 내 강원도 가서 좀 자숙하겠다.”고, 저의 『민중과 지식인』 책을 가지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어 YS와는 인간적으로 가까웠습니다. YS는 잘못했을 때 자숙하고 돌아오는 성찰적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정치에 복귀했는데, 뜻밖에 3당 합당을 해서 저를 또 한 차례 실망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당사로 찾아가 왜 3당 합당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1992년이 되니까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5월에 YS가 저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좋은 정책도 개발해서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일 YS가 당선되면 제가

교육 정책 분야나 청와대 특정 정책 수석자리에서 일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통일 부총리를 제의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2. ‘문민정부’ 출범과 공직 수행 결심

구술자: 1992년 12월에 YS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당선 후 2월 초에 저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신라호텔에서 만나 갑작스럽게 제안하셨죠. “한 박사, 나 좀 도와주세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돼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자리를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적성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비서실장직을 선호하겠지만 저는 털컱 겁이 났어요. “아이고 총재님, 저는 그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5년간 즐기치게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개혁을 추진하려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저는 그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양하고, 대신 세 분을 추천했어요. 그러자 그 세 사람을 다 고려해 봤는데, 한 박사가 도와 줘야겠다고 하셨어요. 당시 안기부장을 했던 서동권 씨가 안기부장 직을 그만두면서 비서실장으로 추천한 세 사람 중 한 명이 저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을 장악하고 탱크처럼 밀고 가려면 최병렬 씨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했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유화적으로 나가려면 이홍구 씨를 임명하라고 조언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서 개혁을 즐기치게 하려면 한 교수를 임명하라고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YS도 깊이 생각해 보니 그 생각이 맞는다고 판단하셨대요. “그러니까 한 박사가 내가 5년 내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2월 2일  
 이예요. 그리고 나서, 한 보름 지나고 2월 17일 새벽에 YS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한 박사, 내가 지금 조깅 나가기 전인데,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 팀 구성이 발표되는데 거기에 한 박사가  
 빠졌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뜻밖에 섭섭하더라고요. YS 말  
 씬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 “한 박사가 경제학을 했으면  
 경제 부총리를 해야 되는데, 한 박사는 평소에 평화,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맡아야지.”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통일 부총리가  
 되는 것을 그때 이미 알았어요. 대개 다른 모든 각료들은 하루  
 전날이나 통지를 받았을 겁니다. YS는 인사를 절대로 일찍 발표  
 하지 않습니다. 미리 발표하면 언론에서 온갖 흠을 집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2월 17일에 통일원을 맡으라는 명을 미  
 리 받은 셈이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대선 기간에 일어났던 남북 간 주요 사건  
 을 찾아봤습니다. 10월 8일에 팀스피리트를 재개한다는 방침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결정됐다는 기사를 다시 보았지요. 당  
 시 그간 팀스피리트를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우리 대  
 한민국에 대한 불신을 잠시 거두고 남북고위급회담을 무려 여덟  
 차례나 할 만큼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8일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가 결정되어 남북 간에 험악한 기류가 발생  
 할 것 같았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결정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George H. W. Bush) 때 내린 것일 터인데, 그의 전권  
 대사로 한국에 왔던 그렉(Donald Gregg)이 중단 결정에 기여한  
 셈이죠. 그렉은 부시가 부통령일 때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했잖아  
 요. 그 때 부시는 매우 평화지향적이었어요.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와 같이 탈냉전선언을 하고, 세계적인 데탕트(détente) 무드를 확산시켰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 해 12월에 몰타에서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세계적인 탈냉전 선언을 했을 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가 냉전 동토로 남아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서울대학 교수로 있을 때지요. ‘한반도의 냉전 해체가 안 되면 세계적인 탈냉전은 절대로 완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미완의 과제다.’라는 확신이 그 때 있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내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기독교 평화운동을 하는 분들과 같이 구동독 지역의 라이프치히(Leipzig)를 방문했습니다. 동독 민주화의 중심적 역할을 한 교회에 가서 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동서독의 통일이 주는 충격적 환희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제 우리도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인데, 그 해 12월에 몰타(Malt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고르바초프와 부시의 선언을 듣고 저는 ‘한반도에 저런 선언의 효력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한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당황했죠. 199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보면 항상 YS가 DJ보다 앞서 갔어요. YS가 당선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지요. 한편, ‘YS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군사훈련 재개 결정이 하나의 시련이 되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 3.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구술자: 노태우 대통령은 군 장성 출신 대통령이지만 노 대통령 기간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이 확실했어요. 고르바초프와 부시가 전 세계적으로 데탕트의 큰 흐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에 그 흐름을 가져오게 하는 일에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박수쳤어요. 1988년 7월 7일에 7·7선언이 나오잖아요. 특히 저는 7·7선언이 한국 분단사 혹은 한반도평화사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7·7선언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이른바 북방정책을 시도했지요. 획기적 발상이죠. 특히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이른바 교차승인 정책을 내놓았죠. 교차승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동구권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교를 정상화 한 동구권 나라가 바로 헝가리, 폴란드, 체코였죠. 올림픽이 1988년 9월 중순이었으니까 7·7선언은 그 두 달 전이었습니다. 동구권과의 외교관계는 순항할 것 같았지요.

서울올림픽 4년 전의 LA올림픽은 소련이 보이콧(boycott)했지만, 서울올림픽은 정말 매우 성공한 평화 스포츠 잔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이 7·7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데탕트 분위기를 한반도로 가져오고, 소련만 아니라 동구권이 우리 올림픽에 참여하는 효과를 봤어요. 저는 그 때 한국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었는데, 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받아서 참관했습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이때 북방정책의 효

과가 바로 이런 잔치로 나타난다고 보고, 이런 평화가 한반도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운동을 한 양 김은 후보단일화에 실패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기에 이 올림픽잔치를 세계 평화잔치로 만드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대통령이 되어 오히려 7·7선언을 하고 88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 데탕트 효과를 국제적인 올림픽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니 그것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 해에 방송위원으로서 헝가리 방문시찰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 방송위원들은 모두 한 마디로 한국의 발전상을 올림픽 이전에는 몰랐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헝가리 올림픽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온 국민이 막 성원을 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자신들과 경합하면서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지요. 더군다나 올림픽 방송을 시작할 때, 한강과 올림픽 경기장이 영상으로 나오는데 동양에 일본 말고 저런 선진국이 또 있었나 하는 걸 처음으로 깨우쳤다는 거예요. 한국이 선진국가라는 점을 각인시켜준 계기였대요. 그때 제가 평화가 주는 국제적인 효과를 느꼈습니다. 나중에 통일원 맡을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을 텐데도, 평화의 효과를 가슴에 깊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보다 더 좋은,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여하튼 노태우 대통령은 7·7선언이라는 남북 관계 개선에 괄목할만한 정책적 조치를 취했는데, 좀 슬픈 것은 아무도 지금 그 공적을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연구자: 실제로 남북관계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보다는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 말기 때 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선언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구술자: 그럼요. 남북관계는 김영삼 대통령보다 훨씬 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발상의 전환에 있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게 참신했고 평화 지향적이었죠. 그분들은 민간인으로서 평화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군인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더 놀랍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인색한 평가를 받는지 안타깝지요.

#### 4. 국제적 데탕트 흐름과 남북관계 전망

연구자: 그런데 그렇게 화해 분위기에서 흘러가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갑자기 확 얼어붙는, NPT 탈퇴라는 조건 속에서 남북관계가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통일부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부총리를 맡으셨는데요, 그때 가지셨던 남북관계나 통일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나 방향성, 원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술자: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 직책을 맡고 나서 전임자 최영철 부총리나 그의 동역자들로부터 “이런 것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려다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때는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인수인계를 받는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맨땅

에 헤딩하듯이 갑자기 여러 통일 정책들과 맞부딪힌 셈이죠. 그때 ‘1992년 10월 한미안보연례회의 때 팀스피리트 재개 결정이 앞으로 굉장히 큰 장애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학자로 있을 때 남북 간 적대적 공생관계가 작동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한미군사훈련 재개가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더욱 격동시키는 계기가 되면 큰일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마 남북관계가 별안간 악화되겠는가.’라는 다소 낙관적인 생각도 했었지요. 그러면서도 만약의 경우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 이후 미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결과, 10년 후인 1979년에 미중은 국교정상화가 되고, 꼭 10년 후인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몰타 선언이 곧 나왔잖아요? 몰타 선언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해, 1990년에 우리는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소련과 국교정상화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냉전의 힘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북한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우리의 우방이 되고, 꼭 2년 후 1992년에는 6·25전쟁 때 한반도에서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웠던, ‘중공’이라고 하는 주적과도 우리가 국교정상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내가 그때 학자로서나 지식인으로서 느낀 것이 있었죠. 그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데탕트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한반도 안으로 끌어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내부에서 냉전 세력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데탕트의 흐름을 끌어오면 국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국제적, 역사적 흐름은 나를 도와 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소 불안했

습니다. YS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YS 자신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냉전 청산에 관해서는 아직도 그분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제가 또한 알고 있었기에 다소 불안했습니다. YS는 어머니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트라우마(trauma) 같은 아픔이 남아있기에 냉전적 인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자: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 5. 이인모 노인 송환 결정

구술자: 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은 확실하지만 평화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1993년 2월 26일 통일 부총리로 정식 임명된 후 일주일쯤 지난 3월 2일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아침에 단독으로 조찬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내가 좀 당황한 게, 아직 총리도 대통령을 독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총리가 되어서 먼저 만나면 괜히 오해받지 않겠냐는 염려가 있었어요. 다음날 청와대에서 큰 테이블에 둘이 마주보며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새 정부 명칭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부총리, 신문을 보면 우리 새로운 정부를 비꼬면서 ‘6.5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7공화국이면 7공화국이지. 6.5공화국은 뭘니까!” 라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어요. 자존심이 남들보다 강하신 분이래 이런 얘기를 불편해하셨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것이었죠. 저를 독대하자고 했을 때는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실 줄 알

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첫마디가 새 정부 명칭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잘됐네요. 이제 숫자 떼어버리시죠. ‘6.5공화국’, ‘7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 떼면 우에 되노?” 그래서 “김영삼 정부죠.” 이때 대통령께서는 “아이고, 내 이름 붙여 쓰면 건방지다 안할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듯했죠.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미국 보십시오. 트루먼(Harry S. Truman)이 대통령 되면 ‘트루먼 행정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되면 ‘아이젠하워 행정부’, 케네디(John F. Kennedy)면 ‘케네디 행정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김영삼 정부죠.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숫자를 붙인 것은 군사권위주의 정부의 호칭이니까 이걸 털어내야 됩니다. 군사정부가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뜻도 있으니까 숫자 붙이는 것을 끝내야 됩니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 앞에 숫자 붙이는 것은 끝나고 말았지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남북관계 현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인모 노인을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대담하게 북쪽의 가족 품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죠. 부임한지 며칠 안됐지만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안기부에서 이 문제를 제일 반대하는 것을 확인했죠. 안기부의 반대 논리가 저의 책 『한반도는 아프다』에 적혀있어요. 제가 보니까 반대논리 네 가지가 한편 타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 쪽에서는 반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인모 노인을 보내는 게 새로운 남북관계를 과감하게 펼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대북관계를 새롭게 펼쳐나가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문제는 안 풀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시 북한에서는 함경도의 수재가 심각했어요. 이것을 도와야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북의 핵개발 의혹 문제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제가 독대 때 대통령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관계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적 정의로는 개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간 남북관계를 펼쳐 왔습니다만, 그 결과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을 주로 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치면 그쪽도 우리 눈을 치고, 또 우리가 그쪽 이빨을 빼면 그쪽도 내 이빨을 쳐서 서로 병신 만드는 일을 해온 셈이죠. 남북관계가 이때까지는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에 따라서 보복적 정의를 실천했는데, 이제 이런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적인 교회 장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원수사랑 정신이 바로 인도주의인데 ‘당신이 내 이빨을 때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안겠다.’ 하는 이런 대범한 생각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도 얼마나 더 잘사는지 아십니까? GDP(국내총생산)로 봐서 얼마나 더 잘사는지 아십니까?” 하니깐 가만히 계세요. 그때 제가 열네 배 우리가 더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대북정책을 펼쳐보자고 했지요. 지금은 한 40배 가까이 돼요. GDP 총량으로 말하면 우리가 북한의 40배가 됩니다.

연구자: 한국은행 발표가 그 정도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구술자: 그럼요. 그때는 남북한 간 GDP 차이가 열네 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북한보다도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열네 배 더 잘삽니다. 우리가 열네 배 더 잘사는데 우리보다 열네 배 더 못사는 동생 같은 북한에 대해서 이를 때리면 이를 때리고, 눈을 때리면 눈을 때리는 정책을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비슷하면 내가 그 보복적 정의의 정책을 인정하겠는데, 우리가 열네 배 더 잘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쉽게 이야기했어요. “유도 6단이 유도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한 대 얻어맞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꼭 힘으로 집어던져야 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인도주의적으로 부드럽게 상대방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대북정책도 인도주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게 주례할 때 제가 늘 하던 이야기예요. “사랑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는데, ‘때문에’ 사랑이 있고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껴안겠다, 이거 아니고는 남북에 평화가 안 옵니다.” 한 번도 정책 당국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 인도주의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한번 예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해는 하신 것 같았어요. 그제 내가 대통령과 대북관계에서 기본 철학의 기둥을 하나 세운 거죠.

그게 3월 2일이예요. 일주일쯤 지나서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언론사 사장과 편집국장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연구자: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요?

구술자: 상당히 높은 게 아니라 단군 이래 최고로 높았어요. 해방 이후 어떤 정치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YS 초기 한때는 지지율이 94%였어요.

연구자: 아, 상당히 높았군요.

구술자: 90%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30%, 35% 그러잖아요? 그런데 90% 이상 넘어가니까 언론들도 놀랬죠. 놀래가지고, 청와대 만찬 초대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아양 떨었겠죠. “각하, 단군 이래 최고의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칭찬했지요. 그러니까 YS가 또 포퓰리스트(Populist)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인기 앞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오늘 여러분한테 내가 특종을 하나 줍니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폭탄선언을 하셨습니다.

연구자: 아, 그래서 이인모 씨?

구술자: 이인모 씨를 가족 품으로 보낸다는 것을 그 만찬 좌석에서 던졌단 말이죠.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관용 씨였는데, 그는

전에 당내에서 통일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걸 아는데.’ 이인모 씨를 보낸다는 것은 수구냉전세력으로서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 그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여 나를 찾은 거예요. “사건 터졌는데 이거 수습해야 될 것 아니오?” 수습은 주무장관인 내가 해야 되니까요. 그날 저는 최형우 씨하고 김덕룡 씨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9시 반쯤 됐는데, 박관용 씨가 큰일 났다고 혈떡거리며 왔더라고요. 다른 두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에서 이인모 씨 북송 건을 특종으로 쫓았는데, 일단 수습하려고 엠바고(embargo, 한시적 보도금지 약속)를 걸었다고 했어요. 엠바고를 걸었지만 수습은 주무장관인 한 부총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밥맛이 싹 달아나고 큰일 났구나 싶었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죠. 그때 국가안보전략회의는 제가 의장이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참여한 분들이 무슨 긴급한 위기 상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관용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 거죠. 조금 있다가 박관용 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눈짓으로 ‘관계 장관들 다 모였으니 이야기하시오.’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요. 박관용 씨가 저보고 얘기를 하라는 눈치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야기했죠. “오늘 이인모 노인 북송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아니, 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하기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죠. 그래서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수습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저도 예기치 못했던 일인데 대통령께서 이미 이렇게 쏟아냈으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죠. 엠바고를 걸었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에 한국일보 주필이었던 오인환 공보처 장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잠을 깨워서 미안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엠바고를 걸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종의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까 통일원에서 이인모 노인 복숭에 대한 발표 문안을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조치했지요. 즉시 차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게 아마 3월 11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인모 노인을 보내는 것은 제가 이전에 대통령과 독대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조치로서 ‘불구하고’의 정신으로, 인도주의 정신으로 대북관계를 펼친다면 첫 번째 조치가 이인모 노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같은 국제인권단체가 이인모 씨를 가장 부당하게 인권유린을 당하는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으니까 그를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인모 씨가 전향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족 품으로 보냄으로써 새로 출범하는 문민정부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지요.

연구자: 그 말씀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으셨던 거죠?

구술자: 그랬으니까 일주일 후에 만찬에서 그게 터져 나온 거죠. 김 영삼 대통령은 야당 때부터 깜짝 발표하는 데는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국가의 일과 개인의 일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내가 조만간 여러분에게 특종감을 줄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저한테 “지난번에 나하고 독대할 때 이야기한 것을 정식으로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기안해서 올리시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순서를 밟아서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지도가 90%를 상회하는 인기 있는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아무리 냉전수구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으시고 불쑥 이인모 북송 결정을 언론에 던졌지요. 제가 그걸 수습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일종의 부담스러운 위기가 되었지요.

연구자: 그 이전에 남북관계를 주로 안기부가 주도했다면 이인모 노인 송환 과정은 통일부에서 주도를 하셨잖아요?

연구자: 초기에는 안기부가 관례대로 주도하려 했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상황관리를 하겠다고 했지요. 이인모 씨가 판문점에서 북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모든 상황은 제가 중심을 잡고 관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북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충격인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총리회담을 여덟 번 하는 과정에서 북쪽은 김일성의 특명을 받고 이인모 씨를 북송해달라고 우리 쪽에다가 끈질기게 제의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받아줬잖아요. 조건 세 가지를 붙여가지고 안 받아줬어요. 그 내용은 다 아시니까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총리회담도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이 요구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인모 씨를 선제적으로 보내줬으니 북한 당국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절차를 제대로 안 밟은 것이 좀 불편했죠. 불편한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절차를 안 밟고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언론에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는 말을 못하니까 국회에 가서 이세기, 안무혁, 박정수 등등 냉전 용사 같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그때 국회 회의록 보면 다 알게 되지요. 신문사 기자회견 할 때에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꼭 이인모 노인을 왜 보내느냐고 힐난하듯 다그쳤지요. 그들은 바게닝 칩(bargaining chip)으로 쓰면 얻을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냈느냐고 심한 질책을 했어요.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같은 보수적인 대통령도 에티오피아(Ethiopia)에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아낌없이 했죠. 적성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는 당시 미국 내 의견에 대해서 레이건은 굶주린 어린아이의 정치를 모른다고 소신 있게 대응했지요. 인도주의 지원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조치는 ‘불구하고’의 조치, 그 자체가 생명력을 지니는 값진 조치이지요. 여하튼 국회에 가서 저는 많이 시달렸습니다. 다른 한편, 이인모 씨가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민주세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인모 씨에게 강연시키려 하고, 또 온갖 환송회를 열려고 했지요. 이것을 관리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이인모 씨가 강연하다가 혹시 실언을 하게 되면 북송 자체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했지요. 하기가 이런 모든 관리를 전에는 모두 안기부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기부가 하겠다고 하기에 “내가 직접 관리한다. 모니터도 다 내가 하겠다.”고 했지요. 그래

서 제가 보고 상황을 매일 다 챙겼습니다.

연구자: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워서였겠지요?

구술자: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상하게도 보수적인 언론들은 그 내용을 다 알더라고요. ‘한 아무개가 대통령을 독대해서 뭐라고 말했을 것이다.’, ‘YS가 갑자기 그렇게 나온 건 아닐 것이다.’, ‘방식은 그렇지만 한 아무개가 뒤에서 다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도 그렇게 집요하게 시달리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단독으로 했다는 말은 절대로 안했어요. 왜냐하면 잘 되면 대통령한테 공이 가야 되니까. 하여튼 이 씨 복송과정에서 매일 보고를 받았는데, 재미있는 보고도 있었어요. 이인모 씨가 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 각계각층에서 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선물 아이템(item)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것까지 저한테 보고가 다 들어온 거죠. 어떤 여성단체는 뭘 보냈다, 뭘 보냈다, 아이템이 쪽 나오는데, 제가 보니 흐뭇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도 일단 가족 품에 돌려보내기로 했으니 이 씨를 빨리 보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3월 20일 즈음 팀스피리트가 재개되거든요. 저는 가능한 한 팀스피리트 전에 보내고 싶었어요. 원래는 3월 중으로 보내라 하는 게 대통령의 뜻인데, 팀스피리트가 3월 19일인지 20일인지, 하여튼 그 때인데, 그보다도 먼저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1992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팀스피리트를 이듬해 3월 20일 경에 재개한다고 결정한

것이 북한 당국에게 준 충격을 어떡하든지 완화시켜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인모 노인 송환을 가급적 빨리 시작하려 했지요. 비록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결정은 노태우 정부 때 나온 것임을 은근히 지적하고, 새로운 정부는 파격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연구자: 네. 이인모 노인이 3월 19일에 송환되었죠.

구술자: 네. 이인모 노인이 송환된 날도 제가 통일원 부총리실 텔레비전 모니터에서 이인모 노인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 딸이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하는 걸 다 봤어요. 이인모 노인을 실은 북한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화면에서 모니터했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상황 끝났습니다.”라고 직접 전화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섭섭한 게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전후사정을 아시니까 “한 부총리 수고 했데이.” 이렇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 6.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파장

연구자: 3월 12일에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경이 좀 복잡하시지 않았을까요?

구술자: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 전날인 3월 11일에 이인모 노인을 보내기로 발표를 했으면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해야 마땅한데 말입니다. 다음날 24시간도 안 되어서 북한 당국이 NPT

탈퇴를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한 대 크게 얻어맞았다고 생각했지요. 그 아픔, 당황스러움을 지금 생각하면은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벼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NPT 탈퇴 발표가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김일성을 만나고 온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북한 당국이 YS의 대통령 취임사에 굉장히 고무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김일성 주석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습니다.”라는 김 대통령의 선언에 매우 고무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침 제가 취임사 작성팀장을 맡았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 매우 흐뭇했습니다.

그해 1월 달, 그러니까 취임 전에 “한 박사, 내 취임사 멋있는 것 하나 만들어주시오.”라고 YS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 팀을 만들었는데,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취임사, FDR(Franklin Delano Roosevelt,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 등 여러 역사적 취임사들을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특히 제가 취임사에 담으려고 했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글로벌 데탕트를 어떻게 우리 한반도로 끌어들이느냐. 그걸 얘기하려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통일 부분에 대해 쓸 때는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의 어드레시(Addressee, 수신인)를 김 주석으로 분명히 밝혔지요. 즉, 취임사의 주요 청중으로 김일성 주석을 딱 지목했습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김일성 주석에게 주는 메시지였지요. 철학 있는 평화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김 주석의 동맹국이지만 그들이 우리 남한보다 더 나올 수 없다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 후 국회에서는 이 선언에 대한 해석을 거꾸로 해서 한 아무개가 통일원을 맡더니 완전히 이상한 발상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보다도 북한이 더 낫단 말이냐.”라는 힐난과 비난을 받았지요. 제가 점잖게 간접 화법으로 피해갔지만, 취임사를 보면 어드레시, 즉 김 주석에게 말한 것이지요. 민족보다도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동맹국은 없다는 김 대통령의 메시지였지요. ‘국제정치에서 동맹국은 항상 변수지만 민족은 상수다.’라는 자명한 진리를 천명한 것이죠. 어제의 동맹국이 오늘의 적성국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제의 적성국이 오늘의 동맹국이 될 수 있잖아요. 1993년 2월 취임사니까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이미 우리하고 한 해 전에 수교를 했고, 소련이 3년 전에 수교를 했잖아요. 그 메시지가 김일성 주석의 가슴을 얼마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족 당사자의 원칙에서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는가,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민족 현안들을 다 풀어보자, 한라산에서나 백두산에서, 그리고 여름에 해도 좋고 겨울에 따뜻한 한라산에서 해도 좋다는 식으로 제안했죠. 원래 제가 처음 초고를 잡을 때에는 ‘남녘의 노인들이 대동강에서 함께 노를 저을 수 있고, 북녘의 노인들이 한강에 와서 배를 함께 저을 수 있는’ 그런 꿈을 제시하기도 했지요. 그건 빠졌지만요.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다는 메시지는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북쪽에 상당한 울림을 준 모양입니다. 그 울림 때문에 저는 남쪽에서 소위 친북 좌파로 오해받게 되고 시달리게 되기도 했지요.

연구자: 그렇게 낙인이 찍히셨군요.

구술자: 그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 할 때도 찍혔지만 그때 본격적으로 찍힌 거죠. 지금도요 가끔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 강연을 하면, 그때 왜 이인모 노인을 보냈느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비망록인 『한반도는 아프다』라는 책에서도 깊이 이야기 못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김일성 주석이 북한의 강경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은 신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강경 군부가 팀스피리트 재개 결정에 대해서 저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느냐. 반발은 하더라도 김일성 주석이 YS 취임사를 보고 감동했다면 NPT 탈퇴 결정은 일단 유보하고 취임사의 비전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지켜봐야 하고, 또 이인모 씨를 돌려보냈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군부를 설득시키고 달랬어야 하는데, 김 주석이 그렇게 못하는구나.’라고 저는 판단했지요. 다시 말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바로 팀스피리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인모 노인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건 평양당국이 즐기치게 바라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반도의 새로운 데탕트, 화해의 물결이 거세게 올라오는데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강경군부를 타이려 것으로 알았던 말이죠. 그런데 이인모 노인을 보낸 지 스물네 시간도 안돼서 NPT 탈퇴를 결정했다는 것은 ‘북쪽 군부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결정 이후부터 NPT 탈퇴를 이미 결정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결정되었어도 김일성의 말 한마디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권력은 이미 김정일한테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추리

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아직 정권 이양을 받지 않았는데, 군부는 이미 아들 손에 들어갔구나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이인모 노인을 보낸 게 아무 효과가 없구나 하는 처절한 허무감이 들었지요. 저는 이인모 노인 복송의 효과가 팀스피리트 재개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문민정부의 대북정책에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른 말로 말하면, 북한의 상황판단이 왜 저렇게 성급하고 잘못되었나. 어떻게 보면 절망감이 저를 엄습했지요. 그러면서 남북 간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좋아할 세력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으스스했어요. 그런데다가 국회 상임위원회의나 본회의에 가서 제가 여러 번 당했으니까 괴로웠습니다. 그때 마침 또 핵무장론도 나와서 저를 당혹시켰지요. 핵 민족주의자들이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핵 없는 통일이 핵 있는 통일보다 더 튼실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비꼬면서 이렇게 말한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서울대학 교수하다가 통일부총리가 된 꿈만 가진 이상주의자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비꼬기도 했지요.

그 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격차가 있을 때 그 격차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을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을 포기하면 현실을 따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현실을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방법은 쉽고 둘째 방법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운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환상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 7. 남북관계 타개의 지렛대

연구자: 그때 남북관계나 국내적인 정세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잖아요? 그 속에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지렛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구술자: 현실적인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저와의 신뢰라고 생각한 거죠. 가장 큰 신뢰는 대선 과정과 그 이전부터 이어진 YS와 저와의 관계입니다. 87년 말에 YS와 DJ가 서로 양보를 안 한 결과, 낙선해서 군부가 재집권했을 때 저한테 심한 비판도 받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평화, 인권이라는 큰 가치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만한 동지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인식에는 역사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1970년 후반에 이철승 씨와 YS가 당내 경선을 할 때 이철승 씨는 ‘왕 사쿠라’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낮에는 야당 총재고, 밤에는 여당하고 협상을 했지요. 이철승 씨가 LA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강연에서 유신체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조선일보의 ‘일사일언’ 칼럼을 일정 기간 쓰기로 했어요. 그날 ‘일사일언’ 원고를 쓰고 보내려 했는데,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어제 LA에서 이철승 야당 총재가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걸 보니까 혈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래서 칼럼 쓴 것을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썼어요. 그 글 제목이 〈야당 당수냐, 여당 선전부장이나〉였어요. 그게 다음 날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민당에서 난리가 난거죠. 난리가 나서 제일 득을 본 분이 바로 YS예요. YS는 그때 이철승 씨와의 경합에서 패배했던 때였지요. 힘이 줄어들었을 때인데, 저의 칼럼 하나 때문에 선명야당투쟁위원회가 생겼어요. 그 칼럼 때문에 선명야당투쟁위원회가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킨 셈이죠. YS는 여기서 굉장히 힘을 얻은 거죠.

이철승 씨 비서실장 하던 국회의원 정 아무개 씨가 그날 저녁에 캉캉 같은 사람 둘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밤늦게 전화를 걸어서 “한 교수, 당신 말이야, 당신 딸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지 알아.”라고 하면서 협박했어요. 제가 그때 참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때 박한상 의원이 야당의 인권위원장이었어요. 우리 집에까지 와서 “한 교수님, 그 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온갖 위협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테러하면 맞으세요.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주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몹시 화가 났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두들겨 맞고 병원에 입원하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당정치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면서도 YS와 저와의 신뢰 관계가 두터워졌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레버리지(leverage)가 있다면 그분과의 신뢰 관계보다 더 큰 레버리지가 어디 있겠어요?

연구자: 국내적으로는 그렇고, 북한을 움직여야 되는데,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술자: 그러니까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88년도에 7·7선언까지 하고 올림픽으로 통합적인 동서화합의 마당을 우리가 마련해줬습니다. 또 하나 좋은 자산이 있었다면, 한미관계이죠. 그렉 대사는 대사가 되기 전에 미국 CIA 책임자로 있었지만 부시 아버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부시와 사상의 동지가 된 그런 관계였어요. 그렉이 우리나라에 전권대사로 왔고, 굉장히 큰 의욕을 가지고 부시, 고르바초프의 탈냉전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을 했던 말이죠. 북방정책 같은 것이 나온 게 우리 자체의, 노태우 대통령의 역량도 있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이 있었다고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 협조해야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으로 갈 수 있지 서로 삐끗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좋은 한미관계라는 자산이 있는데, 1992년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다시 뒤집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미국의 이 결정은 북한을 평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게 한 심각한 장애요소였습니다.

2013년에 그렉 대사가 방한하여 서울에서 세미나에 참여해서 발표할 때 제가 사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 제일 고무적인 결정 가운데 하나가 한미 정부가 1992년 1월에 팀스피리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발표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적극 나오도록 유도했고, 그게 됐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 같은 역사에 남는 좋은 문건들이 나왔다고 했지요. 그런데 매우 아쉽게

도 갑자기 다음 해인 1992년 10월 초에 팀스피리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그렉 대사가 나한테 귓속말로 “그 말이야, 딕 체니(Dick Cheney)가 그렇게 결정한 거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머리 속에서 번개처럼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간의 의문의 구름이 말끔히 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냉전수구세력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특히 안기부 쪽에 많이 남아 있어서 이들이 일방적으로 장난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미국이 오케이 안하면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딕 체니가 했다고 하니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딕 체니가 그때 어떤 직책이었는데 아세요? 딕 체니는 부시 아버지가 대통령 할 때는 국방장관이었어요. 미국 네오콘(Neocons, 신보수주의)의 수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들 부시가 대통령을 할 때는 부통령을 했던 말이죠. 미국을 우경화로 몰고 가고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hegemony) 장악과 유지를 위해서 군사복합체의 이익에 봉사했지요. 미국이 세계적인 군사 패권 국가로 계속 남아 있기를 선호하는 보수정치 세력의 지도자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라크(Iraq) 전쟁을 일으키는데 앞장섰지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가 부하를 잘못 관리했구나.’하는 생각이 언뜻 든 거죠. 그 세력하고 우리의 국내 냉전세력하고는 맞았던 거죠. 그날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그렉 대사는 자기가 한국에 전권대사로 왔는데, 딕 체니가 팀스피리트 중단 결정을 뒤집으면서 자기한테는 한마디의 협의도 없었다고 했어요. 팀스피리트를 재개한다는 결정을 주한 미 대사인 자기에게 전혀 귀뜸도 하지 않았대요. 다소 분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김종휘

선생한테 물었어요. 팀스피리트 재개 결정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물으니깐 김종휘 선생은 “그게 우리의 정책적 선택의 하나였다.” 라고 했습니다. 팀스피리트를 1992년 1월 달에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우리 정부 내에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 상당히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노태우 대통령도 장군 출신이지만 냉전 세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미국에서는 부시가 고르바초프와 세계적인 탈냉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의 반평화적 결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죠.

## 8. 정부 내부의 갈등과 강경노선으로의 선회

연구자: 문민정부 안에서도 냉전 세력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구술자: 맞아요.

연구자: 취임 100일 되던 때 핵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시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구술자: 하기가 YS나 DJ나 노무현 대통령 모두 다소 진보적 정치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7·7선언을 하셨던 군인출신 노태우 대통령보다 훨씬 더 평화 지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했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팀스피리트 재개에 적극 나섰던 수구냉전 세력을 관리하지 못했던 한국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두 부시 대통령들도 네오콘(Neocons)들의 그런 정책 선택을 관리하지 못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거죠. 두 나라의

냉전 수구 세력들 간의 커넥션(connection)은 그때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북 간 관계개선이 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최악의 남북관계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연구자: 그때 당시에 부총리님께서는 기존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새롭게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 분위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술자: 이런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 자신이 내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보수화 되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안보수석으로 있던 정 박사(정종욱)가 서울 대학 교수로 있다가 거기로 갔잖아요. 대통령 취임 전후에 핵문제 같은 것은 조금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가 혼나기도 했었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제가 있던 1993년 한 해 동안 내내 정 박사는 매우 조심했고, 소심해졌지요. 권력의 핵심 속에 있던 냉전 강경세력의 눈치를 보았다고 할까요.

연구자: 그런데 핵문제도 내내 갔잖아요. NPT 탈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갈등도 있었고. 부총리님께서는 일관되게 일괄타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입장을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부 내 인사들은 그런 입장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한미

간에 갈등이 생겨났던 걸로 보이거든요?

구술자: 언제 그게 부각됐는가 하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기 전인 6월 초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나와서 신뢰 관계는 삐걱대기는 했지만 기본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때 청와대 비서실 대변인이 이경재 씨였거든요. 이경재 씨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언은 발표되기 전에 나한테 보내달라 그랬는데 늘 협조를 잘해줬어요. 그런데 6월 달에 기자회견에 ‘핵 가진 자와는 악수도 안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바람결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대변인에게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남북관계가 공식적으로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표현은 삭제하든지 고치라고 했어요. 북한이 그래도 100일까지는 YS를 본격적으로 헐뜯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강경발언을 우리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되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제가 세 번 전화했어요. 근데 결국은 못 뺐죠. 회고록을 보면 이 대변인이 이 표현을 썼다는 말도 있어요.

연구자: 아, 대변인이요?

구술자: 대변인이 그걸 이야기한 걸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아니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때까지는 자기는 빼려고 노력했는데 안됐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쓰기로 결심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 데는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잘 하고 상당히 부드럽게 대해주면서도 우리한테는 왜 그렇게 안하나 하는 질투

비슷한 느낌이 청와대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일괄타결을 하려고 하는 김새가 벌써 5월 달부터 있었어요. 타노프(Peter Tarnoff) 국무성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일어서면서 뜬금없이 지나가는 말로 “일괄타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을 때 한 시간 동안 한 이야기보다도 마지막 일어서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새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그러나 저는 웃으면서 “우리도 고려해볼만 하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고요. 그러나 저는 속으로 북한과 미국의 협상과 대화가 잘되려면 일괄타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죠. 줄 건 화끈하게 다 주고 받을 건 화끈하게 다 받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NPT 탈퇴 이후에 YS의 대북정책은 비록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형식은 아니었지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방식이었어요. 말 잘 들으면 당근을 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질을 하고.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고 하는 논리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과 첫 독대에서 이야기할 때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쓴다면 화끈하게 쓰자, 다 올려놓고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제가 현실적으로 한 것이죠. 한반도 탈냉전을 위한 김영삼 독트린을 구상할 때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게 체제의 안전을 화끈하게 보장하는데, 보장한다는 말을 물론 문서로 해야 되겠지만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지로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보장하는 방식은 우선 4자회담 같은 걸 통해서 전쟁을 직접 치룬 실제 파트너들인 4자(남·북·미·중)가 모여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천하

고, 그 과정에서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닉슨이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1969년에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는데, 놀랍게도 보수 라인 이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갔지요. 우리의 경우 민주화를 이끈 YS정부가 주도적으로 북미 간 국교정상화를 시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했죠. 그 노력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당장 북한의 어려운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나선다면 북한도 핵 문제에 대해서 IAEA가 제기하는 사찰이라든지, 핵 투명성을 보장하는 일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2005년 9·19선언에 이와 같은 일괄타결의 의지가 잘 요약되어 있잖아요? 제가 현직으로 있을 때 바로 9·19선언 정도의 일괄타결을 바란 거죠. 그걸 바랐는데, 1993년 10월에 청와대에서 안보회의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언론에 많이 시달렸을 때인데, 오늘은 내가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지요. 안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외무장관, 안기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어요.

내가 그날 작심하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한 가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발언, 상대방을 격노시키는 발언은 대통령께서 직접 하지 마십시오. 인기 없는 유화발언은 나 같은 사람한테 시키시고, 강경발언은 국방장관한테 시키든지 안기부장을 시키십시오. 그분들의 입으로 그게 나가는 게 좋지, 대통령이 직접 인기 없는 강경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요. “강경발언 하고 나서 사태가 전연 반대로 전개될 때 수습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께서는 한 발짝 뒤에 계시다가 어려울 때 나서야지 사태

가 수습되지요.” 라고 했어요. 그 두 번째로 바로 일괄타결의 시급성을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제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워싱턴에서는 이미 일괄타결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10월 달인데, 5월 말에 타노프가 다녀갈 때 나한테 일괄타결 문제를 슬쩍 던졌잖아요? 공교롭게도 주한 미 대사 레이니(James T. Laney)가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지요. 그 분의 생각도 저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레이니는 자신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준 선교사라고 생각했어요. 레이니는 일찍 1960년에 한국에 감리교 선교사로 왔어요. 한국에 와서 진보적인 기독교 학생 운동을 통합시킨 사람이거든요. 기독교 윤리학자니까 민주주의, 평화, 인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인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대통령께서도 제가 곧 대사로 오는 레이니하고 친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제가 북미 간 일괄타결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일괄타결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제안했는데, 놀랍게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다른 참석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모두가 내 말을 찬성하는 것인지 부인하는 것인지 나도 가늠 못할 정도로 애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대통령도 마지막에 “정 수석,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해매더니, 가까스로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괄타결은 시기상조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대통령도 “시기상조야.” 하고 그날 안보회의를 끝냈어요. 그게 1993년 10월 17일인지, 18일인지 그런데요, 꼭 1년 후에 제네바 합의(1994년 10월 21일)가 일괄타결이 됐어요.

결국 이걸 회고해보면 1년을 허송세월 한 것 같았어요. 그때

만일 대통령이 “한 부총리 말이 맞네. 미국이 일괄타결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지 몰라도 미국하고 공동 보조를 취해서 한반도 평화로 나갈 수 있도록 일괄타결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판단하셨더라면 일 년 앞당겨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나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요. 그때 만약 YS가 자기 후임자인 DJ와 노무현 대통령처럼 북미관계가 좋아져야만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는 진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더라면 제 이야기를 탁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YS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제로섬(Zero-Sum) 관계라고 확신했어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죠.

연구자: 경쟁구도로 생각하셨구나.

구술자: 그렇죠. 이울배반으로 본거죠. 물과 기름으로 본 거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냉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남북관계가 좋아지려면 북미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또 북한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을 왜 서울하고 대화해야 되느냐? 워싱턴(Washington)은 서울의 주인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인하고 대화해야지 왜 힘없는 밑의 사람과 대화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미국에 가서, ‘북한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남북관계를 가깝게 하는 비결입니다.’라고 당당히 우리가 이야기해야죠. DJ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끈질기게 했어요. YS는 그걸 못한 거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못했어요. 아예 할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 9. 북핵 문제의 본질

연구자: 지금 핵문제 관련된 상황이 그때하고 다른 점도 물론 있지만 상당히 비슷한 구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기술력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때 상황과 현 상황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술자: 본질적으로 같은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북한은 핵 개발을 하려하고 성능 좋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던지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실하게 얻어야 돼요. 사실 김일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1993년에 부총리로 취임했는데, 벌써 그 전 해부터 김일성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핵 가질 필요도 없고, 핵 가질 능력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 설령 우리가 핵탄두를 열댓 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천 개 갖고 있는 미국에게 어떻게 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김일성 주석 자신이 근본적으로 찬성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유지로 김정일한테도 내려오고, 지금 김정은한테도 내려왔다고 봐야죠. 저는 그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왜 김정은은 할아버지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 개발을 하느냐?

우리 민족은 6·25전쟁을 통해서 3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북한이 미 공군기의 공습으로 파괴된 것과 남쪽이 파괴된 것을 우리가 같은 선에 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1955년

3월에 서울대학에 입학했는데 1954년에 환도를 했던 말이죠. 저는 서울이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서울대 문리대에 가니까 벽돌 건물 여러 곳에 총 맞은 흔적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6·25때 평양은 말 그대로 초토화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 특히 공군의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북한의 나이 많은 세대는 몸으로 다 기억하고 있죠. 후세도 윗세대에게 들어서 알게든요. 일 년에 한 두 번씩 핵을 장착한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군사훈련을 우리는 도상훈련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실제로 당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F-35라든지 B-2라든지 B-50이라든지 폭격기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판문점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어요. 미루나 무 도끼 사건이 있을 때, 미국이 B-2인가 폭격기를 괌(Guam)에서 한반도로 출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김일성이 대변에 사과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공군의 위력을 잘 압니다.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공군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미국이 군사력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또 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벌어지는 한미군사훈련을 정말 신경쓰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모든 북미대화의 기본은 북한체제의 보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죠. 한 마디로 주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월남과 협상할 때도, '우리는 당신네들 체제를 붕괴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미얀마에 대해서도 그랬고, 중국은 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게는 체제를 보장해줬는데, 북한에 대해서만은 말로는 우리는 당신을 괴멸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군사

훈련은 계속하니까. 북한에서는 체제 안전이 매우 중요하지요. 팀스피리트 같은 거, 지금은 키 리졸브(Key Resolve)지요. 군사 훈련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각료들이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민주정부이지요. 그런데 아무도 말 못한 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북한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자고 그럴 때, 체제 보장과 수교와 그에 따른 경제, 에너지 문제 해결을 모두 내어놓고 일괄타결하자고 하면 북한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그걸 못하느냐? 한국에서 수구냉전 인사가 대통령이 될 때는 미국보다 더 강하게 북한을 옥죄는 쪽을 선호 하니까 미국이 동맹국의 요구를 무시 못 하는 것이죠. 전작권(전 시작전통제권) 환수 보세요. 미국은 환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가져가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가 가져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각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말을 못하느냐고요. “대통령님, 군사 주권 없는 나라가 무슨 주권 국가입니까? 미국이 아무리 우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군사 주권을 미국한테 맡길 순 없잖 습니까?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국가문제입니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핵문제가 한반도의 칠천오백만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군사주권을 가진 나라로 먼저 우뚝 서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북한 은요, 우리가 군사 주권을 안 가진 나라라고 생각해서 더욱 더 무시합니다. 우리가 무시당하게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일개 지식인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각료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1993년 10월에 저는 “일괄타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말이죠. 결국 기회를 잃은 후에야 미국의 아젠다(agenda)에 따라갔잖아요.

## 10. 문명사적 관점에서 본 사드 배치 문제

구술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드 문제는 미국이 좀 정직해야 돼요. 사드 겁나는 거는 사드 미사일이 겁나는 게 아니라, X밴드 레이더(X-Band radar)가 중국 전역과 러시아 연해주 쪽을 다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고 그건 오로지 북한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믿겠습니까? 미사일이야 북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기가 미사일도 고고도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은 한반도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레이더는 더 더욱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레이더가 지금 그렇게 두 강력한 대륙세력을 불안케 한다면 꼭 우리 한국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오키나와(Okinawa)에 군사 기지가 있고, 괌에 설치해도 되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 합니까? 더구나 공해선상에서 미국이 잠수함으로 북한 핵을 억지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사드 배치는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그게 자주외교죠. 우리 정부가 미국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그건 외교가 아니죠. 핵무기를 한국도 갖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오히려 더 불편하잖아요. 핵 민족주의 나오니까 확장 억제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미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럭 미

대사는 저에게 본인이 대사로 있을 때 전술 핵무기를 모두 한반도에서 철수했다고 자랑했어요.

연구자: 네. 노태우 대통령 때죠.

구술자: 그죠? 그 보수적인 노태우 대통령 때 그거 했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오히려 그걸 다시 가져오자고 소리치고 싶은 것 아닌가요?

연구자: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핵문제 해결 해법이 NPT 탈퇴 직후의 해법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구술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NPT 탈퇴도 중대한 국제적인 문제였지만, 사드는 더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NPT 탈퇴 문제가 소위 유럽의 큰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아시아의 제1대륙세력인 중국, 이 두 대륙 세력이 힘을 합쳐서 해양세력인 미국, 일본과 대결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서세동점, 곧 서구 제국주의가 동쪽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동점 동진해왔던 지난 이삼백 년간 서세동점의 흐름이 딱 끝나는 지점이에요. 이제 중국이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태평양을 같이 공동 관리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국면입니다. 두 거대 대륙세력과 두 거대 해양세력 간의 충돌을 격발시키는 계기가 바로 사드 배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구자: 그 핵심에 한반도가 있는 거죠.

구술자: 그렇죠. 핵심이에요. 사드는 한반도가 두 대륙세력과 두 해양세력의 열강들을 한반도에서 맞부딪히게 격발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지요. 이걸 문명사적으로 크게 봐야 돼요. NPT 문제를 보면 NPT에 가입 안 하고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사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브렉시트(Brexit)가 되고,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체제가 약화되니까 제일 기분 좋은 게 푸틴(Vladimir Putin) 아니에요? 푸틴이 왜 크리미아(Crimean Pen)를 합병했습니까? 합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체코하고 폴란드에 미국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사드 같은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푸틴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긴장이 생겼는데, 그래서 유럽연합(EU)으로 부터 경제적인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 러시아의 유가가 폭락하니까 경제적으로 위기도 오고 이런 게 참 어려웠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으로써 NATO 체제를 약화시킨 게 역설적으로 푸틴을 살려준 거예요. 미국이 NATO를 통해서 MD시스템을 가지고 러시아를 옥죄던 게 약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에게 요구한 것이죠. 러시아가 MD시스템 때문에 미국에게 당할 때 중국은 구경만 하고 있었지만, 성주에 사드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중국이 이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푸틴이 위로하러 베이징에 왔잖아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뻔하잖아요. ‘우리 대륙세력은 해양세력에 의해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시달렸다.’ 러시아는 1905년 노일전쟁에서 저서 힘을 못 쓰고, 중국은 중국대로 1895년 청일전쟁 지고, 그 과정에서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고, 그런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 러시아와 중국도 힘이 이만큼

커졌으니까 힘을 합쳐서 미국과 일본을 감당하자.'라고 할 때 사드 배치가 한국에서 이뤄지면 결국 두 세력을 격돌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현 한국 정부에는 문명사적 흐름에 대한 인식이 요만큼도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2016년에 1993년을 회고하는 아픔이 나한테는 커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사드 배치를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연구자: 저도 한반도 중심으로 생각을 했지 큰 맥락에서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부분이 있군요.

구술자: 한반도 맥락이 큰 맥락의 중심입니다. 옛날은 극동이라 그래서 'Far East', 지구의 동쪽 구석에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 소위 극동, 동아시아가 세계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어요. 동아시아를 보세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 있죠? 아시아 인구가 세계 인구의 한 60% 되잖아요? G1이 미국이죠? G2가 중국이죠? G3가 일본이죠? G1, 2, 3가 다 동북아시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극동이 아니고 이제 문명의 중심부죠. 게다가 우리가 이제는 지난 날 노일전쟁, 청일전쟁 때 같이 강대국 고래 사이에 끼어있는 새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돌고래쯤 됐다고요. 돌고래가 되어서 우리가 큰 고래들 간의 긴장과 갈등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고, 또 조정해야 하는데, 사드 배치를 국민들과 의논도 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독단으로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바람에 우리의 소중한 조정 능력을 어리석게도 소실시켜 버렸다고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 1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핵 해법

연구자: 말씀을 듣고 보니, 북핵 문제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게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평화의 방향을 좌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연속선상인데요, 현재 국면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총리님께서 기존에 경험하셨던 남북관계가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2016년 대한민국은 1894년, 1895년, 1904년, 1905년의 조선이 아닙니다. 그때는 새우였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고래 가운데 몸은 작지만은 가장 영리한 돌고래 정도가 되어서 큰 고래 싸움을 어느 정도 조정,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군사 갈등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 있는 것 같아요. 남중국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곧 군사합동훈련을 그쪽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는 오기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냉전시대 대결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써야하는데, 오바마도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 하니깐 이런 것이 세계 평화와 번

영,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죠. 여하튼 미국이 해양세력으로서 대륙세력인 중국과 대국적 평화관계를 맺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죠.

두 번째 그 맥락 속에서 미국의 새 정부는 지난날 미안마하고 월남을 안았듯이 북한을 껴안고, 적어도 이란(Iran)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이란 방식보다도 더 낮게 해야죠. 북한을 미국 당신네들의 우방으로 격상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면 서도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미국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로섬으로 가지 않고 양립가능한 관계로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최근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하는 일이겠지만, 국제회의의 나가는 데마다 일본보다 더 강하게 북한을 옥죄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해양세력과 두 대륙세력 간의 화해를 주선하는 외교를 강력하게 펼쳐야 해요.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외교, 그러면 남북관계는 거의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1993년 내가 부총리 직책을 받으면서 가진 꿈이었지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었고, 국제관계가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 꿈이 더 강해졌어요.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연구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쭙보겠습니다. 북한 핵 해법과 관련해 부총리님께서서는 아까 이란식의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북한은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을 안가진다는 게 이미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해법이 가능하지 않다.’

고 일각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술자: 그건 이렇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이 미국과의 핵전쟁에서 이기려고 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북한도 잘 알아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핵을 열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천 개 갖고 있는 미국을 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지로 살아있다고 보죠. 이 점을 감안해서 말한다면, 북한은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게 중국적으로 자기 체제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예요. 김일성의 유명한 말이 있죠? 북한 주민들이 이밥에 고깃국,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 사는 거, 그 꿈이에요. 그 꿈을 이뤄주는 거예요. 소박한 꿈이에요. 북한사람들이 핵을 쬐어지고 그런 김일성의 꿈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핵은 뭐냐? 그 꿈을 이루는데 가장 강력하게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걸 그들은 절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을 안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계속 짓밟고 무시하더라 이거지요. 뉴욕타임스(New-York Times) 같은 데서 이야기하잖아요. 김정온이 미친 게 아니고 'He's very rational, 합리적이다.' 그 계산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외쳐도 안 되니까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건드려야만 미국이 비로소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나온다는 것이죠. 성가시게 해서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해서 일괄타결로 가자는 전술이죠. 그 전술을 반공주의자는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연구자: 그러니까 북한 의도의 이면을 보고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구술자: 그 이면은 아까 말한 일괄타결적인 이면인데, 조 박사, 북한에  
가봤죠? 시골에 가봤어요?

연구자: 시골은 못 가봤습니다.

구술자: 평양은 갔다 왔죠? 북한 현실을 보면, 사회 인프라 같은 것을  
보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해서  
몇 달도 안가서 엄청난 패배를 맞볼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  
사회 구조, 모든 인프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사일 쓰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 같죠? 지금 함경도에 수해가 나서 500명이 죽었  
어요. 저걸 자기들이 관리 못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있는  
판 아니에요? 왜 그 현실을 모릅니까? 북한 당국의 일괄타결에  
대한 정책적인 선호, 그것은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  
다도 그 정책의 이면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이 참으로 비참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왜 우리 냉전세력은 보지 못하는  
지 답답해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고 믿는 친일 냉전세력이 아직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 현실이지요.

연구자: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부총리님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 구술자 상세 프로필

1936. 3. 18. 충청남도 당진 출생
1960. 서울대학교 문리대 사회학과 졸업
1967. 미국 에모리대학교 사회학 박사
1967. ~ 1969. 미국 테네시주립공과대 조교수
1969. ~ 1970. 미국 이스트캐롤라이나(East Carolina)대 사회학과 조교수
1970. ~ 1976.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
1971. ~ 1974. 문교부 재외국민교육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1976. 2. 유신체제 하에서 서울대학교 교수 1차 해직
1976. ~ 1980.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총무
1977. ~ 1980. 아시아교회협의회(CCA) 국제문제위원
1980. 3. 서울대학교 부교수 복직
1980. 10.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연루, 서울대학교 교수 2차 해직
1981. 10 ~ 1984. 9. 미국 에모리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연합장로교 본부 사회정의 자문
1984. 1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복직
1988. ~ 1990. 한국방송위원회 위원 및 상임위원,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회장
1991. ~ 1992. 한국사회학회 회장
1984. ~ 1993.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993. 2. ~ 1993. 12. 제18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1994. 3. ~ 1994. 9.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1994. 9. ~ 1998. 9.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998. ~ 제4대 한민족아리랑연합회 이사장
1999. 10. ~ 2001. 1. 제3대 상지대학교 총장
2001. 1. ~ 2002. 1. 제1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2002. 8. ~ 2004. 12. 한성대학교 총장
2004. 12. ~ 2007. 12. 제24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2012. 5. 담쟁이포럼 이사장
2013. 7. ~ 2014. 11. 경기도교육연구원 초대 이사장



# 김덕

## 간략 프로필

1935. 5. 25.	경상북도 구미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졸업
1993. 2. ~ 1994. 12.	제20대 국가안전기획부장
1994. 12. ~ 1995. 2.	제21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1996. 5. ~ 2000. 5.	제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전국)



김덕 전 장관님의 구술은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자택(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진행은 홍민 박사가 맡았으며, 구술은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김덕 전 장관님의 구술은 1시간 8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공직을 맡게 된 동기 및 배경에서부터 재임 당시의 소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및 상황의 상세하고 생생한 서술로 이루어졌다.

## 1. 1차 북핵 위기 당시의 상황

연구자: 선생님, 1993년부터 정부에서 통일문제를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김영삼 정부 시절은 대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밖으로는 냉전이 종식돼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반면에 한반도 내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

가 구상하고 있었던 대북정책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그때 기초를 말씀드린다면 냉전 종식 이후에 새로운 면모의 문민정부로 출범한 것이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안으로 민주화, 문민화 개혁을 추진하고 대북관계에서 화해, 협력에 역점을 둔 것은 따라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취임사에서 동맹보다 민족을 앞세운 감상적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으로 극도의 고립감에 빠져있던 북한에 대한 강한 포용의 의지와 희망을 드러낸 김영삼 정부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이뤄낸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을 정책 기초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직후 맞닥뜨린 북핵 위기의 충격은 그러한 장밋빛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핵 위기의 충격은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핵통제공동위원회의 몇 차례 거듭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유산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미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부터 핵 위기는 예고되고 있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었고 특히 대북 정책에서 화해를 추구하려던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고 봅니다.

연구자: 아무래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1차 북핵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최대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의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상용이다’, ‘순수한 에너지용이다’, 또는

‘무기체계를 갖추기 위한 목적이다’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 핵개발 의도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지만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어떤 수준에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한마디로 클린턴 행정부와 김영삼 정부 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정보 교환은 아주 긴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제력 경쟁에서 남북 간에 균형이 바뀌기 시작한 1960년대, 70년대부터였고 그 동기를 따져보면 재래식 군사력 개발에서 남북 간에 균형이 바뀌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북한이 초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따라서 핵과 같은 비대칭 전략무기의 개발을 통해서 남북 간 군사력 불균형을 일거에 바꿔놓려고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평양 북쪽 영변에서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발견됐고, 그것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기에 적절한 흑연 감속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흑연 감속로의 가동을 탐지한 이후,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 사이에는 북핵을 둘러싼 긴밀한 정보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얼마 안돼서 미국 CIA에서는 고위 핵 실무단이 내한해서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김 대통령에 대한 특별 핵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가동실태와 핵무기 생산능력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북이 1985년 NPT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온 북한의 위험한 핵 개발 실태를 충분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미 울쉬(R. James Woolsey Jr.) CIA 부장이 1993

년 저의 초청으로 방한을 했을 때 얘기한 것이 ‘초보급의 핵탄을 한 개 내지 두 개 북한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51%,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49%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국무성과 CIA 사이에는 북핵에 대한 평가가 달랐습니다만 저희들은 CIA의 견해가 정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미 간에는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서 아주 긴밀한 정보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미국 이외에 북한 핵능력과 관련해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서로 정보를 참조했던 국가가 있는지, 혹시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 정보 참조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시오.

구술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냉전시대 때 북한의 후견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후견국이었던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소총에서부터 핵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기술적 의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고 특히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무기와 기술의 북한 유입이 컸으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러시아 해외정보부장은 한·소 수교에 앞장섰던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였습니다. 따라서 한·러 간에 모든 북한 정보에 관한 협력이 긴밀했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해외정보부는 북한의 군사정보에 관한 한 매우 신중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김일성의 사망

연구자: 다음 질문은 남북대화 또는 남북관계와 핵문제의 연계 문제입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라는 말로 남북문제와 핵문제를 강하게 연계시키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도 있었죠. 그런데 이후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정상회담까지 합의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당시에 남북 간에 사전 접촉이라든가 대화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없는지 혹시 이런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구술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김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반 개만 가지고 있어도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강한 태도였습니다. 따라서 핵문제를 남북관계에 강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김영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미 밝힌 셈이지만은 노태우 정권 말기에 이루어진 남북 접근과 화해의 황금기가 너무도 빨리 허무하게 무너지고, 출범 초에 충격적 위기를 맞이한 김영삼 대통령으로서 그런 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992년 김용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켄터(Arnold Kanter, 미 국무부 차관)회담이 있고난 다음에는 북한이 남북 간 핵문제를 둘러싼 접촉을 원하지 않았고 미국과 직접 접촉을 원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김 대통령의 태도가 더 경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북한 간의 북핵 문제 논의가 가져올 결과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1996

년 4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 대통령께서 4자회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997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라는 단일 의제 채택으로 성사되기에 이릅니다. 물론 김영삼 정부에서는 핵문제에만 매달려 있던 것도 아니고 식량지원도 했고, 공식·비공식적으로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전환기적 상황에서 출발한 문민정부는 안으로는 안보문화와 민주문화의 갈등, 그리고 밖으로는 북의 집요한 핵 협박 때문에 화해 추진에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연구자: 당시에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부처 간의 문제들이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도 대북·통일정책 관련 부처들 간에 정책 조율문제가 관심사인데,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한승주 외무부장관,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완상 통일원 부총리 그리고 선생님까지 소위 교수 출신 4인방이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외교·안보 및 통일정책을 주도하셨는데, 당시에 일각에서는 외교부 따로 성명 발표하고, 통일부 따로 성명 발표하는 등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일부에서는 안보정책조정 회의를 통해서 결국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북정책 관련된 부처 간의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구술자: 전환기에 아무래도 정부 운영에서 부처 간 보조가 맞지 않는 경우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민정부도 전환기에 나온 정부이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약간 과장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민화 초기에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요구되던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르던 것도 일반이 알 수 있도록 정책결정 과정이 그만큼 투명했습니다. 이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다만 학계 출신 장관들 간에 의견 충돌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다 양식이 있는 분들이고,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올 때 절충점을 찾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밖으로 알려진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일반이 염려하던 그런 수준의 혼란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초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가령 북핵 문제를 가지고 군의 수뇌들과 제가 전략회의를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고위전략회의를 통한 조정을 했고, 나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좀 더 정돈이 되었는데, 정부 부처 간에 조정을 위한 조정회의가 생겨서 훨씬 그 점에서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 다음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1994년 7월에 원래 예정되어있던 남북정상회담 부분입니다. 1994년 1월까지만 해도 김영삼 대통령은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없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6월부터는 입장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수용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강경했던 입장에서 전격적인 수용 입장으로 전환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핵문제하고 정상 회담을 연계시킨 것은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성의를 끌어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핵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태도가 카터 방북 이후에 돌연히 변했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역사적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돌파구를 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국내정치에서 담판의 명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 김 주석과 만나서도 그런 능력으로 남북문제를 크게 담판해서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겠다는 야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태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처음부터 정상회담에 대한 집념은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연구자: 이렇게 추진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는 불발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1994년 7월 9일 정오 뉴스를 통해서 사망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당시 안기부장으로 계셨고, 일각에서는 안기부가 과연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한마디 말씀으로 그때 과학정보국에서 수집한 정보자료가

틀림없이 아직도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학정보국이 수집한 기밀자료 같은 것은 함부로 공개하거나 얘기하는 것이 금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기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돌발사태가 생길 경우 보고 채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생각하기는 그런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기부장이 대통령을 정식으로 만나서 보고를 드릴 텐데 의전비서관실에서 기록으로 보면 그런 일로 대통령을 만나 빈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잘못 와전이 돼서 한때 왜 안기부가 몰랐느냐, 알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분명히 말 하건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냐 하면 7월 7일 한밤중 그리고 7월 8일 새벽에 걸쳐 당시 김일성 주석이 묵고 있던 묘향산 특각에서 긴급한 사태가 일어나서 평양으로부터 의료진을 실은 헬리콥터가 묘향산 특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때 일기불순으로 착륙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김일성 주석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했다가는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게 뻔하고 그래서 7월 8일 아침에 제가 대통령께 전화로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새벽 2시에 죽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단정은 못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신변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저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은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7월 9일 12시 방송에서 발표되기까지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아주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김 주석의 사망을 속으로는 짐작하고 계셨을 걸로 압니다만 오전 10시에 12시 방송이 예고되고 12시에 나왔

을 때, 일각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란 걸 보니까 사전에 아무런 보고도 못 들으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상대인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김 대통령께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제스처였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실제로 뉴스를 듣고 김영삼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제스처를 취했는지 안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배경을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3. 북폭론과 제네바 합의

연구자: 예. 그 이후에 북한 핵문제가 더욱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폭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죠. 그 해 10월에 제네바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됩니다. 당시 제네바 합의를 두고 한국이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제네바 합의 과정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로 미국과 협의나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좋은 질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네바 합의를 앞둔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은 알려진 대로 없지 않았습니니다. 미국은 NPT 체제의 유지가 1차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북한과 접촉해서 문제의 해결을 조속히 종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우리는 비확산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여야 위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과 이 문제를 직접 담판하고 해결해서 완전한 핵 폐기로 가야 되겠다는

데에서 한·미 간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직접 접촉 및 협상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외무부를 통한 한미 협의는 있었겠지만 결국 제네바 합의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소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항의조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예로 1994년 10월 중순에 뉴욕타임스와 가진 회견에서 미북 간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직접협상 분위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미 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은 당시 한승주 외무부 장관과 레이니(Laney) 주한 미 대사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김영삼 대통령의 태도가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김일성 사망 이전에 이미 갈루치(Robert L. Gallucci)가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 협상 결과에 대해서 낙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리더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일단 결심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상당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서구협상의 논리에서 북과의 협상을 예측하는 것은 순진하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때 갈루치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7·4남북공동성명’의 운명을 보고, 남북기본합의서도 ‘7·4남북공동성명’의 재판이 됐고, 가장 선진적인 내용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은 국제적인 어떤 비핵화 선언보다도 앞서가는 내용의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갈루치가 기억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구자: 말씀하신 것처럼 제네바 합의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미국의 경우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해야한다는 ‘외과수술식 정밀타격(Surgical Strike)’ 논의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이 오히려 이것을 막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북핵 문제가 심각하게 번지자 미국 내에서는 선제타격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994년 5월 초 영변 핵시설의 수상한 연료 재처리 이후에 그런 여론은 고개를 들었죠. 그때의 실례를 보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과 CBS 공동조사에서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지지하는 여론이 51%였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고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제타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논의된 것은 알려진 바로는 1994년 5월 18일 펜타곤 군사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얼하게 이 문제를 다뤘던 것으로 아는데, 아주 신속하게 5월 19일 회의 결과가 백악관에 보고가 됩니다. 백악관에서는 외교 고위 자문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그 결과로 5월 20일에 북한과의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교섭으로 태도를 바꿔서 발표가 됩니다. 그때 한국문제에 정통했던 전문가들이나 언론도 5월 20일에 외교적 교섭으로 돌아서고 난 다음 뒤늦게 펜타곤 군사회의 성격을 알고는 놀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이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등장하고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제타격

에 대한 지지여론이 미국에서 고조되기 시작할 시점부터 김영삼 대통령은 신경과민적으로 전면전의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반대 태도를 견지해왔고 그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급속히 외교적 교섭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돼서 북한 핵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할 경우 클린턴 행정부가 시도하고 있던 모든 주요한 국내 정책과제를 다루지 못하게 된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가 말했듯이, 특히 그때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가 야심적으로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를 살리자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미국 정부로서도 선제타격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령 선제타격을 하면 전면전이 일어나고 전면전이 시작되면 개전 90일간 한국군 수십만 명, 미군 수만 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보고가 클린턴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기도 힘들고, 그 이전에 클린턴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모든 국내정책과제를 포기해야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도 타격에 선뜻 나설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깊게 본 것은 만약 영변 핵시설을 선제타격 하려면 우선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민간인 및 군속이 소개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것이 소개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 4. 김일성 사후 북한 정세 전망과 ‘북한 붕괴론’

연구자: 김일성 사망 이후 향후 북한 정세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3개월 안에 붕괴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북한 붕괴론’이 유행했는데요, 당시 안기부에서는 북한 향후 정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그 당시에 미국 정부에 북한 조기 붕괴를 둘러싼 희망적 견해가 꽤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에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 저는 원래 여러 가지 특강에서 강조하던 것이 북한은 내일 붕괴할 수도 있고, 수십 년 후까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얘기 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해외정보부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993년 프리마코프 러시아 해외정보부장이 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 해외정보부와 한국 안기부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핫라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의 채널을 만들자고 해서 우리는 어떤 주요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과 러시아 정보기관 사이에 심도 있게 직접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 측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사망 직후에 김영삼 대통령께 제가 가서, 프리마코프 부장과의 면담에서 논의된 직접 협의 문제를 상기(想起)시켜드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즉각 안기부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프리마코프의 견해와 러시아 해외정보부의 한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해외 정보담당 차장을 대통령 특명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때 파견한 정보차장을 상대로 프리마코프가 한국 정세에 밝은 여러 전문가들을 총동원하고, 대좌해서 자세한 브리핑도 해주고, 북한 장래에 대한 견해를 말해줬습니다. 당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보지만 북한 체제는 김일성 사후에도 상당히 오

랫동안 견재할 거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판단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북한 정세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적 경쟁에서 우리가 주요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찬스라고 봐서 북한 비동맹 외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와의 수교를 교섭했어요. 그때 파견한 사람이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 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차장을 비밀리에 카이로에 파견했고 그때 실제로 있던 오마르 술레이만(Omar Suleiman)을 비밀초청해서 1994년 가을 즈음에 김영삼 대통령, 술레이만 부장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앉은 자리에서 한국이집트 간 수교가 가능하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결국 1995년 한국이집트 수교가 성립 됐죠. 이것을 일반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2011년 2월 중동혁명이 있었을 때, 과거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근무하시다가 주이집트 대사를 지내신 임성준 씨께서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의 수교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김덕 부장의 비밀 초청으로 술레이만이 와서 이 문제를 결정지었다고 회견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자: 북한 향후정세에 대해서 객관적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김영삼 정부라고 하면 북한의 조기붕괴를 상당히 원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구술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활달하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인민을 압제하는 북한 체제가 붕괴되고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는가하는 희망도 가지고 계셨으리라 봅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북정책에 관한 안팎으로 불리한 전환기적 상황에 처한 정부라고 할 수 있고, 국내적인 문민화,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념적 분열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안기부에 출근할 때는 문 앞에 ‘안기부 철폐’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단체가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 남쪽의 사정이 복잡해지고 이념적 분열이 격화되고 하면 북쪽은 더 남한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을 꺼리는 현상이 쪽 역사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영삼 정부는 대북관계에 관한 한 상당히 불운한 정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이든(Robert Anthony Eden)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나세르(Nasser)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 조치가 뒤따랐고 그 충격으로 이든 정부가 좌초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떠올렸습니다.

## 5.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관계

연구자: 안기부장 직을 수행하시다가 1994년 12월에 개각을 하면서 통일원 부총리를 역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총리로 옮기신 이후에 1995년 2월 3일에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핵문제가 제네바 합의로 풀리긴 했지만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된 배경과 북한이 거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제가 제의를 할 때부터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고 계속 북한과의 길을 트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원 장관에 부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이제 우리는 통일문제를 신화의 차원에서 현실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대결과 화해의 연속적인 상쇄과정과 같은 과거와 발자취를 탈피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의 착실한 성과가 축적되기 보다는 항상 제자리걸음 내지 후퇴의 길을 걸어온 것이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작은 보폭으로나마 노력을 밀고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보전진 일보후퇴가 아니라 반보라도 전진하는 남북관계를 실현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 제의를 하게 된 배경은 물론 정상회담도 좋고 더 큰 '7.4남북공동성명' 같은 것도 파격적이고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뒤에 무엇이 왔습니까? 한국에서는 남북관계에서 굽직한 만남의 성과가 문서로 거창하게 종결이 씌워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감격적인 순간을 연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환멸입니다. 김 대통령이 원하는 정상회담을 한들, 하나의 축제일 수는 있지만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서 얼마나 견실한 성과를 내겠는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남북접촉 형식 가운데 가장 견실하고 실질적인 것으로 남북 정부 고위당국자 간 정례적 회담을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고위 당국자의 정례회담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제의를 한 거고 예상대로 북쪽은 당시 대미 직접협상에만 관심 있고 김영삼 정부는 상대도 안하려고 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유산이 됐습니다만, 제가 통일원 장관직에 오래 있었다면 그것을 관철시켰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연구자: 선생님께서는 통일부 장관, 안기부장직 두 정부기관의 수장을 역임하신 흔치않은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더 이 두 기관이 갖는 의미와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향후에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국정원과 통일부가 어떤 관계와 정책 조율을 통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린다면 제일 첫째로 강조할 것은 북한 정보에 대한 안기부의 독점적 태도를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기부장으로 있을 당시 제일 강조한 것이 통일원과의 긴밀한 정보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 안기부장으로 발탁한 김영삼 대통령의 첫째 동기가 과거와는 달리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장성 출신이나 법조계 출신 아닌 학자 출신을 뽑아서 안기부가 과거에 가진 강성적인 이미지를 청산해보자 하는 의도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안기부장직을 맡으라고 요청하셨을 때 “학계에 있던 생원이 어떻게 그런 호랑이 굴에 들어갑니까”라고 했더니, 안기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당신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서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웃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는 안기부 독주 현상을 빨리 청산하고 통일원이 역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통일원의 대북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공급하는 배후지원 역할을 안기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복안이었습니다. 다행히 문민 정부의 초대 통일원 장관으로 오신 분이 한완상 박사였는데 그 분하고는 학계에서부터 친숙했고, 상당히 가슴을 열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협력이 아주 원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안기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간지에서 ‘문민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어느 정부 부처가 제일 많이 변했는가’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안기부가 제일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 나왔고, 1993년 11월 1일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는 제 사진과 함께 한국 정보기관의 변화에 대한 기사를 한 페이지 실었습니다. 그 기사 말미에서 뉴스위크 기자가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 인물인 이철 의원과 가졌던 인터뷰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안기부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철 의원이 안기부의 개혁이 아주 인상적이라는 코멘트를 해줘서 지금도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6. 북핵 문제의 해법

연구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핵 문제는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올해 들어서는 4차, 5차 핵실험으로 하루가 다르게 핵무기 고도화와 그 위협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향후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구술자: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은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기 힘듭니다

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은 오히려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죠. 더 고도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 하는데 성공하고 있을뿐더러, 핵탄두 운반수단의 사정거리 장거리화에서 상당히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에서도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핵탄두의 고도화와 소형화, 그리고 운반수단의 장거리화라는 사태 진전이 한미 양국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 위협인식에 접근하는 데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동대응하려는 태세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북한에 대한 UN 제재에 첨가해서 한미 양국의 개별 제재가 날로 강화되는 데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 언동에서 나타나듯, 서울뿐만 아니라 워싱턴에 대해서도 불바다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미 양국의 제재 앞에 직면하여 상당히 북한이 초조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이 설정해놓은 레드라인을 예사로 넘어오고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한 족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통한 위협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이 여태까지 행사해 온 ‘효과적인 협박전략 (effective strategy of blackmail)’ 같은 얘기를 새삼 미국학자들은 합니다. 그런 북한의 전략이 이제는 통용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상당히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양국은 이런 제재 강화를 계속해나감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되 우선 우리가 중간 목표로서 달성할 것은 관리 가능한 핵동결을 실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압박의

수단만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주는 배려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만약 미국의 요구에 따라 러시아가 쿠바로 실어 나르려고 했던 미사일이나 핵을 러시아로 회항하지 않으면 3차전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강경한 압박을 앞세운 다음 퇴로(escape route)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것은 터키에 있는 미국 미사일 부대의 철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가 체면을 잃지 않고 미국과의 데탕트에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도 그런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연 퇴로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핵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고립된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깨고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체제가 변해야 핵 문제도 해결하고 한반도의 신뢰 있는 평화를 성취하는 데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강조해야 할 것은 첫째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갈등은 단순한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처방의 차이를 넘어서, 근본적인 대북 인식이나 이념적 정서의 괴리현상을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해소가 안 됩니다. 한국의 국내문제가 심각해질 때는 북한이 으레 개입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족적이 화해와 대결의 연속적 상쇄현상을 되풀이하고 있는 악순환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이 착실하게 축적되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내 정치 세력 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의 수렴을 통한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서독의 경우만 해도 철학과

정책을 달리했던 기민당 정부와 사민당 정부가 나중에는 이념적 환상을 넘어 서독 사회의 정치적 성숙성으로 혼연 일체가 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결국 콜(Helmut Kohl) 수상의 기민당 정부에 와서 독일 통일로 귀착되기에 이릅니다. 이미 그때 러시아에 가서 콜 수상이 독일 통일 문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게 된 데에는 기민당만이 아니라 사민당의 모스크바와의 관계 진전 실적이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독 양당 사이에 통일을 향한 일종의 상호보완적 협업 체제가 계속 되어온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치세력 간의 분열과 간극의 해소를 통한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결국 북핵 문제와 앞으로의 통일 문제 해결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선생님, 장시간 많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를 슬기롭게 돌파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해주신 북핵 해법에 대한 말씀은 지금 현 정부, 이후 정부도 참조를 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구술자 상세 프로필

1935. 5. 25. 경상북도 구미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졸업
1967. ~ 1993.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982. ~ 1992. 통일원 자문위원
1986. ~ 198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1986. ~ 1993. 남북적십자본회의 자문위원
1987.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1991. ~ 1993. 외무부 자문위원
1993. 2. ~ 1994. 12. 제20대 국가안전기획부장
1994. 12. ~ 1995. 2. 제21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1995. 전경련 남북경협특별위원회 고문
1995. ~ 1996.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
1996. 5. ~ 2000. 5. 제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전국)
1996. 9. ~ 1998. 9. 한중포럼 회장
2001. 1. ~ 2006. 1.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남북한관계론 강의)
2008. 3. ~ 2013. 2. 국민원로회의 위원, 통일고문회의 고문

# 이흥구

## 간략 프로필

1934. 5. 9.	서울특별시 출생
195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1959. 6.	미국 에모리대학교 철학과 졸업(B.A)
1968. 5.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1988. 2. ~ 1990. 3.	제14대 국토통일원 장관
1991. 2. ~ 1993. 3.	제15대 주영국 대한민국 전권대사
1994. 4. ~ 1994. 12.	제20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1994. 12. ~ 1995. 12.	제28대 국무총리
1996. 5. ~ 1997. 12.	제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전국)
1998. 5. ~ 2000. 8.	제17대 주미국 대한민국 전권대사

## 인터뷰 개요



이홍구 전 총리님(제20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의 구술은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통일연구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홍구 전 총리님의 구술은 많은 통일연구원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공직을 맡게 된 동기 및 배경에서부터 재임 당시의 사회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입안과정 등 구체적인 사건 및 상황의 상세하고 생생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구술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처음 통일원에 부임했던 시간으로부터 그다지 긴 세월이 흐른 것 같지가 않군요. 정확히는 1988년 2월 25일에 취임했으니 내년 2월이면 30년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애쓰신 통일원 식구들 덕분에 통일부가 지금과 같이 커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최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연구원에서 과거의 기록을 구술로 수집하는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하니 그 당시 다소 미비했었거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 등 기억나는 대로 적극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통일부는 아마 90년대의 정부조직개편(1990.12.-통일원, 1998.2.28.-통일부)에 의해 이름이 바뀐 것으로 1988년 당시는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국토통일원 장관(1988.2.25.-1990.3.18.)과 통일부총리(1993.4.30.-1994.12.17.)로 지금의 통일부에서 두 번의 같은 직책을 역임한 셈입니다. 우선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있었던 동안의 이야기를 하기로 하지요. 그 당시의 가장 큰 프로젝트의 하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확정짓는 일이었습니다.

## 1. 협치의 모범사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성안을 위한 노력

그때까지만 해도 북진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북한 역시 같은 식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취임 후 새로운 통일정책 수립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시며, 이제는 냉전의 시대도 끝났으니 이 시대에 맞는 통일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행정부만의 일이 아닌 국회의와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작업인 만큼 이 장관이 야당의 3김 총재와 상의해서 4당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국회나 정부의 상황을 회고해 보면,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두 달 후인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크게 여당의 의석을 잃으며 압도적인 여소야대의 13대 국회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4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힘이 강해진 야당은 5공 청산을 강력히 밀고 나가서 제1야당인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이 주도한 ‘5공특별위원회’, 즉 5공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문회를 통한 대단한 활약으로 5공특위의 위상은 높아졌으며 특히 초선의원으

로 크게 활약하여 유명해진 분이 노무현 의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 등장한 것은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여망이 가장 컸던 시기였거든요. 국회에서도 당세에 따라 제2야당인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이 이끄는 ‘통일특별위원회’, 즉 통일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통일특위 위원장으로는 박관용 의원이 임명되었어요. 그때까지 저와 박 의원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였으나 만나보니 여야를 불문하고 매우 합리적인 판단력을 지닌 분임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간사로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에서는 이한동 의원이, 평화민주당에서는 김대중 총재와 아주 가까운 김봉호 의원이, 신민주공화당에서는 매사에 정확한 문구까지도 지적하시며 깐깐히 따지시던 김용환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렇듯 4당의 강력한 간사들이 모여서 통일특위의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물론 통일방안에 관한 것도 있었지요. 통일에 대한 열기가 높던 그때 생긴 많은 통일단체들에게는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우리 통일원이 내놓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함께 통일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러 달에 걸쳐 열었습니다. 이렇게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모으려 애쓴 후 3당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총재의 합의에 의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3대 국회가 보여준 협치의 대표적 결과라 하겠습니다. 비록 여소야대의 국회였지만 행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청와대와 내각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대통령직선제와 단임제로 특징 지워졌던 87년체제는 지난 30년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퇴보과정을 밟아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의 통일원 프로젝트로 추진한 일은 역시 통일연구원을 만든 일입니다. 제가 장관이 되었을 당시에 통일원 산하에는 연구원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토통일원은 연구를 많이 해야한다고 하시며 신태환 선생, 신도성 선생, 이용희 선생 등 당대의 석학들을 장관에 기용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특별히 연구기관을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어 노 대통령께 건의 드리니 주저 없이 ‘연구원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고, 그 결과 통일연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 2.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일원 장관 직책을 원만한 수행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제가 정부조직 안에 들어와서 수월하게 잘 적응하고 장관직책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핵심에서 다소 벗어난 뒷이야기라고 해도 좋을 여담입니다.

국토통일원은 1969년 3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우연히도 통일원과의 인연은 이때부터였던 거 같습니다. 제가 1968년 여름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1학년 때 경제원론을 배웠던 신태환 선생님께 귀국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신 선생께서 부르시더니 본인이 초대 국토통일원 장관이 된다고 하시며 ‘통일이 라는 것이 국제정세와 같이 가는 것이니 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대학 교수보다 통일원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우선은 대학에 자리를 잡고 가르치다가 나중에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돕겠다.’고 했던 때를 기억하기에 통일원의 시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태환 장관 후에도 문리과 대학에서 같이 모셨던 이용희 선생과 신도성 선생께서 장관을 하시며 통일원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지요. 그러나 높은 담론수준에 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큰 역할

을 못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87년 민주화와 동시에 터져 나온 이슈가 바로 ‘통일’입니다. 그리고 1988년 6공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통일원은 갑자기 각광을 받았다고 할까,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통일원 장관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988년 1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노태우 당선자께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자리에서 제가 통일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1시간 정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쯤 후, 다시 한 번 더 만나 얘기를 하였으면 한다는 당선자의 요청으로 안가로 찾아뵈더니 ‘이 교수가 생각한 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과도 맞으니 그것을 실행했으면 하는데, 그냥 이 교수가 장관을 맡아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제일 간단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후 우리 정치학과와 선배교수이신 김영국 교수께 상의를 드렸어요. ‘글쎄, 이제는 권위주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 민주화가 된 정부가 들어온다니 들어가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며 오히려 격려해 주셔서 장관직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6공 정부의 시작과 함께 정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공직생활에 입문한 제가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 통일원의 직원들이 열심히 도와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밖에도 여러 모로 큰 힘이 돼 주셨던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우선은 6공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이셨던 홍성철 장관입니다. 홍 장관은 서울대 상과대학 출신으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은 저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배구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배구부 감독이셨던 오광섭 선생께서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서울대 상과대학에 배구부가 신설되자 코치를 하시면서 우리 고등학교팀과 연습시합을 시키시곤 하셨지요. 당시에 서울대 상과대학 배구부 주장이 홍성철 선배였습니다. 6·25전쟁 중인 부산 피난시절에도 해병대에 계셨던 홍 장관을

우연하게 만나고 기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학생회 간부로 같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다른 한 분이 김재순 전 국회의장으로 상과 대학 학생회장 격이었습니다. 그때도 김재순 의장의 리더십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1988년 4월 선거에서 압도적인 여소야대를 기록했던 13대 국회의 초대 국회의장이 바로 김재순 의원이셨습니다. 장관이 되고 보니 특별하게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우연하게도 두 분께서 청와대와 국회에 계시니까 정부 일에 첫 입문이었던 저로서는 일하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해 외교부 장관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인 최광수 장관이 있었고, 또 고등학교 1년 후배로 미국에서부터 잘 알고 지내던 국방대학원 정치학 교수 김종휘 박사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습니다. 이렇듯 비교적 일하기 좋은 여건에서 장관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활용하고 또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에 협조도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해 준 사람도 있었지요. 당시 외국어대 학생으로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려 북한에 갔던 임수경 양, 역시 자의로 방북한 문익환 목사, 소설가 황석영 씨 등입니다. 이는 과거 같으면 반공법을 어겼으니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일이었으나 당시로서는 정치문제가 되어 각 캠퍼스에서는 임수경 학생 지지집회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신문에 날 수밖에 없었던 통일문제는 그와 같은 상황적 배경이 통일업무의 성격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부서가 통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3. 처음 정부에 들어와 모셨던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미국에서 대사직무를 끝내고 돌아온 후, 2001년부터 저는 중앙일보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지난 15년 동안은 3주에 한번씩,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맡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의 정부를 5공화국, 6공화국 즉 5공, 6공이라 일컫습니다. 과거정부가 이렇게 이름 지어진 연유에는 프랑스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의 ‘불란서 Fifth Republic’, 즉 불란서 정치를 안정시켰던 드골의 5공화국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골 대통령이 불란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 불란서가 독일에 완전히 점령된 상황에서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피난 온 몇 안 되는 불란서 시민들을 군인으로 모아 자유불란서군을 조직하고 사령관이 되어 연합군과 같이 싸우며 불란서를 승전국의 위치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전후에 그는 국가적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5공화국의 새 헌법을 만들고 불란서를 민주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니, 대통령제가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제도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80년도에 개정된 헌법에 의한 5공 7년이 지나고, 87년 민주화를 선언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6공시대가 왔습니다. 노 대통령은 권위주의체제를 없애겠다며 민주화를 내세웠으나 36퍼센트 밖에 안 되는 득표율로 당선됐고 이어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소야대의 국회라는 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 문제는 통일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의 복잡했던 한국정치문제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는 스스로의 위치를 잘 알고 ‘몰태우’라며 자세를 낮췄던 노태우 대통령의

협치전략 덕분에 통일문제 역시 잘 풀려나갈 수 있었지요. 노태우 대통령은 본인의 주장이 강하다기 보다는 주변참모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일 줄 아는 리더십을 갖고 계셨기에 6공 정부에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정부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였는지 이후 여섯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에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는 큰 논란 없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포용력을 보여준 분입니다. 이에 더해 YS, DJ, JP라는 세 분의 강력하고, 일을 성취시키려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복잡하고 힘들던 일들이 잘 풀려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드골과 같은 상징성이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6·29선언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 청산을, YS, DJ 두 분은 민주화투쟁의 기수였다는 상징성이 있었기에 한국에서의 민주화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 4. 행정부 내 통일·대북정책의 분업 및 협업

1988년 내가 처음 통일원 장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통일원과 외무부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부서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초대 통일원 장관이신 신태환 장관께서는 ‘통일업무란 국제정세와 같이 가는 것’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되느라고 그랬는지 마침 외무부 장관이 저와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동기동창으로 절친인 최광수 장관이었습니다. 종합청사에 같이 근무하며 1~2주에 한 번씩 최 장관이, 아니면 내가 서로의 장관실에 들러 당시의 복잡했던 국내, 국제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곤 하였지요. 그러면서 외교와 통일문제에서 서로 맥이 통하는 길을 찾게 되었고 상의하다보니 일이 쉽게 풀려 나갔습니다. 여담이지만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외교부 장관과 통일원 장관이 같이 수행한 전례가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외교영역에 통일원이 나설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중국, 러시아, 동유럽국가 등과 국교를 여는 데에 외무부가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외무부의 역할이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통일의 주무부서인 통일원이었지만 남북 간의 접촉이나 대화에 직접 나설 수 없었던 것이 정보기관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안에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나 북한과의 연락은 일찍부터 정보부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 입장에서는 잘못 나서면 일만 복잡하게 되고 통일방안을 만드는 데 오히려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외면당하던 통일원의 위상 덕분에 외교부, 정보부 뒤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게 통일방안을 만드는 데만 열중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른 한편 다행한 일은 정보부장 보좌관에 대통령의 친인척인 박철언 씨가 있어서 일을 더 편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하여 정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하고, 나는 통일방안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겠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분업체제가 되면서 2년 2, 3개월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통일방안이 아주 스무스(smooth)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협업체계보다는 분업체계에 더 익숙해 있던 때입니다.

## 5. 국회에서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통과 당시 분위기

1989년 9월 정기국회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였지만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움직였고 4당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지요. 얼마간의 예상은 했어도 아주 수월하게 통과된 데는 당시 국회의장이셨던 김재순 의장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출하던 날 오후 2시에 열리는데, 1시 반에 의장실로 4당 대표를 호출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재순 국회의장, 부의장인 윤길중 민정당 대표, 김재광 부의장, YS, DJ, JP, 이렇게 여섯 분이 원탁에 둘러앉은 후 의장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통일방안의 요점을 추려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요점정리를 끝내고 나니 김 의장께서는 각 당 총재께 한 분씩 돌아가며 동의 여부를 물었고 또 모두로부터 좋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둘러앉아서 다 좋다고 동의했던 통일방안이 결국 30년 끌고 가는 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통일정책이었기에 어떻게든지 행정부와 국회, 각 당 간에 합의를 거쳐야 했고, 그 결과를 그대로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데에 통일원 식구였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 6. 1990년 통일원을 떠나고

1990년 3월 17일 통일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홍성철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통일원 장관으로 오시고 저는 대통령정치특보라는 직책을 맡아 청와대에 가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YS와 JP가 3당 합당에 합의하셔서 3당(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된것입니다. 합당 후에는 정계개편이 따랐고 이때 노 대통령께서 장관도 2년여 했으니 청와대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셔서 정치특보로 1년여 있었지만 큰일은 별로 없었던 기억입니다. 그해 연말 대통령 임기를 2년 정도 남기고, 노 대통령께서는 제가 짐이 되셨던 듯 대사로 나가보면 어떤지 물으시며 제네바 대사를 제의하셨어요. 올림픽 유치 하면서 본인이 제네바에 여러 차례 갔었는데, 레만호수가 아름다운 살기가 좋은 도시 같더라고 하시며 가서 연구도 하고 쉬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네바라는 곳은 경치는 좋을지 모르지만 유럽유엔본부가 있어 챙겨야할 실무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후에 들으니 제네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외교부의 이상옥 장관과 청와대 의전수석이던 이병기 비서관의 의견을 들으신 대통령께서 상의 끝에 영국이 좋다고 보내주셨고 가서 2년여 정도 있었습니다. 1991년 4월 영국에 부임해서 1992년 12월 20일 YS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신 날 사표를 보냈지요. 그렇지만 92년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김대중 씨께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객원교수로 와서 1년 동안 책도 읽고, 또 쓰시겠다고 하신다며 영국에 도착하여 자리도 잡고 안정되는걸 보고 오라고 하셔서 이듬해 5월이 되셔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옛날 정치인들은 의견 차로 싸우고 빠치는 것 같아도 서로 봐주며, 걱정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요새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돌아온 후에는 1993년 7월부터 홍성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뒤를 이어 통일관계된 일을 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뜻을 따라 민주평통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3월쯤 1차 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통일부에 들어와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일원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으니 한번 더 하라고 하셔서 1994년 4월 30일, 두 번째 통일업무를 맡아 통일부총리로 복귀했습니다. 제가 다시 통일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미 1차 핵 위기의 가운데에 들어

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William James Perry) 국방장관은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핵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나섰고, 반면 YS계서는 전쟁은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하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나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YS 대통령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차 핵 위기 이후 청와대가 주관해서 관계장관(통일부총리, 국방장관, 외교장관, 안기부장, 외교안보수석)들이 모여 상의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그 해 6월 즈음해서 NSC(National Security Council)회의가 정례화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대학교, 예일대학교 대학원 후배인 정종욱 교수가 외교안보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어서 일에 대한 협의가 수월한 입장이었으나 아무래도 통일원에 다시 돌아가기까지 2년간의 공백기에 일어난 몇 가지 일은 짚어봐야 했습니다.

## 7. 2년여 통일원을 떠나 있을 동안의 일들

정원식 총리 때 남북총리회담이 여섯 차례 열렸어요. 일이 잘될 때였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만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식 2국가해결책(Two State Solution)’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통일방안으로 두 국가체제를 앞세웠다면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한 민족에게는 하나의 민족공동체가 있고, 그 안에 두 개의 정부체제가 있다는 논리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식 총리가 여섯 번씩 총리회담도 하고 남북대화가 잘 이어진 이유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한국은 올림픽도 하고 우위에 서는 입장

이었는데도 남북을 1대 1의 동격으로 같이 하겠다고 하니 좋은 이야기였고, 또 국제정세의 흐름에서 보아도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압도적인 유일초강대국으로 부상된 반면 소련은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제정세에 적응하려 총리회담도 잘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 1991년 남북관계는 최고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까지는 협조해서 공동운영이 가능하게 된 기본합의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한국식 2국가해결책(Two State Solution)은 UN 동시가입으로 사실상 실현이 된 거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1991년 12월에 이미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합의를 봤습니다. 그게 1992년으로 기록이 되는 이유는 양측 합의서 교환이 1992년 1월에 평양에 건네주면서 발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남북기본합의서, UN 동시가입, 비핵화 공동선언)가 모두 1991년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실현이 되어가는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때 미국에게 이 세 가지를 국제협약으로 보장해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왜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저는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이 유일초강대국이었던 시기로 소련, 중국은 같은 격의 강대국이 아니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3가지 기본합의서, 특히 비핵화 공동선언을 완전히 보장하는 국제보장체제를 미국이 확실히 추진하여 조약으로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도 협조하였겠지요.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정상화로 이른바 교차승인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외교와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실기였다는 생각을 하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해결책은 기본합의서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N 회원국으로서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모든 주변국이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 8. 1차 핵 위기상황

1994년에는 이미 김일성이 상당한 정도의 권력을 아들 김정일에게 넘긴 후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핵 위기의 상황은 김정일이 주도해서 일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기본합의서, UN 가입,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지만, 김정일의 생각에는 남북교류가 더 진전되면 북한 체제는 계속 버텨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를 김일성의 말이라는데, 본인이 미국의 감시를 피해가며 핵을 개발하라고 독려했던 건 아니지만, 아랫사람들이 핵개발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서 지하에 숨어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는군요. 후일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했을 당시 제기한 일본인납치문제도 김정일은 밑에 있는 애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저질렀다는 등 북한은 늘 상투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니까, 일이 수그러들기 보다는 점점 더 커져버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80세를 넘어 고령이 된 김일성에게 굉장한 위기감을 준 것은 소련보다도 중국의 등소평이었다고 봅니다. 1994년의 국제정세로 보면 소련은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의 소련이 아니죠. 중국의 등소평은 이미 1992년에 본격적으로 남순강화라며 경제개방으로 국제경쟁체제의 일부가 되는 것만이 중국이 살 길이라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소평은 경제개방정책을 중국의 공식노선으로 확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승리하여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일성과 이야기를 하여 북미관계 발전의 가능성을 진척시킬 수 있는 인물로 민주당의 전임 대통령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을 뽑았고, 늘 미국하고 대등하게 만나서 이야기하길 원하는 북한의 김일성은 다급해져서 전임 카터 대통령이라도 평양으로 오라고 합니다. 김일성으로서는 세계의 유일초강대국이 미국

인데, 미국과 잘 지내지 않으면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미 소련은 힘이 없고, 중국은 막강한 미국하고 경제교류를 해서 살아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래도 여기에 맞는 생존법으로 카터 대통령이 오겠다고 하니 김일성에게는 체면이 서는 이야기였겠지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온다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전임 대통령이 찾아오겠다는 것만으로도 김일성에게는 자기를 예우하는 체면도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1994년 6월 15일,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의 전임 대통령이며 동양식 사고에 의하면 선배대통령인 카터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3박 4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강력한 외교력에 더해 주한 미국대사였던 제임스 레이니(James T. Laney) 대사의 역할도 적지 않았 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대사는 전문적인 외교관 출신은 아니고 교육정책가로서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의 총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던 분입니다. 6·25전쟁 직후에 연세대학교에 와서 가르친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도 특별한 연고를 유지해 왔어요. 특히 카터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는 에모리대학교 내에 카터센터를 마련해주고 국제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 추천한 그를 1993년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는 카터 대통령과 제임스 레이니 대사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긴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법과대 재학 시에 휴전이 되었는데, 1948년 미 군정시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사촌누이에게서 에모리대학교에서 네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니 유학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에모리대학교는 한국인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학교입니다. 독립협회에서 활동하셨던 윤치호 선생이 에모리대학교의 1893년 졸업생입니다. 일찍부터 기독교에 귀의하셨던 윤치호 선생은 미국 감리교회의 연고로 에모리대학교에 유학

하셨으며, 에모리대학 도서관에는 지금도 영어로 쓰신 윤치호 선생의 일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1954년에 미국에 가서 에모리대학교를 졸업했고, 예일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에모리대학교는 역사가 오랜 학교로 1986년에 창립 15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에모리대학교 15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했던 총장이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레이니였어요. 그리고 행사의 가장 큰 프로그램 중 하나는 에모리대학교 졸업생 중에서 10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는 거였습니다. 10명의 명단에 외국인 유학생대표로 내가 포함되었습니다. 기념식에 제일 중요한 축하손님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었어요. 조지아(Georgia)주지사를 하고나서 대통령이 되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후 자신의 기념관을 조지아주의 수도인 애틀랜타에 두고 싶어 했는데 이미 얘기 했듯이 그때 에모리대학교 레이니 총장이 학교 내에 카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카터센터는 에모리대학 안에 있습니다. 레이니 총장은 그때 처음 만났지만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인지 그 이후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지요. 레이니 대사는 젊은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연세대에서 목회활동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투쟁 중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적극 구명운동에 앞장서서 카터 대통령도 서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어진 레이니 대사와의 연고로 카터 대통령과도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맺어진 카터 대통령과 레이니 대사, 그리고 나, 세 사람은 1994년 6월 중순 1차 핵 위기 때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카터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편하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15일 카터 대통령 내외는 평양으로 가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평양에 가서 사흘 있다가 돌아온 카터 대통령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얘기가 아주 잘 되었다며 안심하는 표정이었지요. 김일성

은 미국과 부딪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카터는 “핵, 그건 안 되는 일이다, 핵만 안하는 걸로 하면 미국도 돕겠다, 전쟁에서 파괴된 나라치고 재건하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은 나라가 없다, 이미 UN에도 가입됐으니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도 시간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정상의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더니 김일성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카터가 6월 18일에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북한하고 빨리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연락하면서 북한도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월 25일에 판문점에서 첫 예비회담을 가졌지요. 그게 사진에도 나왔지만 북한에서는 김용순 대남비서가 나왔고 우리 쪽에서는 제가 수석대표였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였던 김용순 비서와는 처음부터 어려움 없이 일을 쉽게 풀어가려는 작전으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서로가 각자 주장할 것을 준비해 가서 읽었을 뿐 크게 보고할 일이 비밀스럽게 따로 없었습니다. 얘기하기에 쉬운 첫 이슈로,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나는데 그래도 분단 이전의 수도였던 서울에서 만나는 것이 상징성으로도 좋지 않은가? 하고 제기했더니 그건 곤란하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어요. 첫 번 우리의 주장은 반반의 결정이 아닌 한쪽의 양보가 있으면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결국 우리 쪽의 양보로 첫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갖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김용순 비서와 단들이 만나 이야기 하다 보니 일은 일사천리로 풀렸습니다. 우리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빨리하고 싶어서서 가급적이면 첫 회담에서 성공시키라는 지시를 주셨는데, 김용순 비서 쪽은 더 급한 마음인 듯 보였어요. 정상회담을 여는데 이쪽저쪽 모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니 크게 싸울 일이 없고 화기애애하게 끝났

습니다. 얘기가 잘 돼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공식합의하고 예비회담을 끝냈지요.

갑작스런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이루지 못한 남북정상회담을 나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었지만, 만약 그때 그 정상회담을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이 했었다면 남북관계에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두 분 다 권력을 쥐고 있던 지도자들이란 것입니다. 이에 더해 두 지도자는 이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으로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같은 나이이신 아버님이 계셔서 연로한 분의 성품에 대해 잘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세세한 것에 얽매어 우물쭈물하지 않으시는 직설적인 품성으로 걱정될 정도의 낙관론과 자신감도 갖고 계셨습니다. 저한테도 “너무 걱정할 것 없고 만나서 직접 김 주석하고 이야기 하면 된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합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만만 하셨습니다. 반면 김일성은 팔십 노인이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북 간에 그리고 미국과의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심경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련은 이미 해체 돼버렸고, 등소평은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어느 정도 이 흐름에 발맞춰 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어쨌든 남쪽 대통령하고 합의하고 나면, 미국이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겠다고 하니 그러다 보면 앞으로 좋은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 여겼겠지요. 이렇듯 기대했던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한국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70년 분단사에서 평화통일로 향한 마지막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민족의 불운이라고도 하겠습니다.

## 9. 통일원 장관으로 시작하여 주미대사로 끝맺은 공직생활

저는 1968년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부터 1988년 정부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후 5년 동안 정부(통일원 장관, 청와대 특보, 주 영국대사)에서 일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시절 역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통일부총리, 국무총리 등 공직생활을 이어갔으며 총리직을 마친 후에는 국회에 가서 신한국당대표 및 국회의원 생활도 했습니다. 국회의 분위기는 정부와 사뭇 달랐기 때문인지 정부 일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적응이 힘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97년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되었습니다. 나는 물론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대학도 동기동창이며 우리 당의 후보인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지요. 그러나 1997년 12월은 이미 우리 경제가 파탄직전으로 IMF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실기였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에 경제위기에 대한 고민을 안고가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해결책을 찾고자 발 빠르게 움직였고, 그때 세계 주미대사로 가서 사태해결에 힘을 보태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망설임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일단 우리 당에서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 규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선거에 진 것만도 힘든 실정인데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주러 간다고 하니 이해하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부터도 규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반면 생각을 돌려 뒤집어보면 경제위기의 책임은 지난 정부의 몫이 아닙니까? 그나마 미국을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이기에 발 빠른 대처가 가능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우리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는데, 기댈 곳은 미국밖에 없다. IMF도 미국 대통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한국의 여야합의에 의한 사안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도와주지 않겠는가.'라는 설득에 복잡한 주변 여건을 책임과 애국이라는 포장 속에 밀어 넣고 미국대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모두의 열성적인 공헌에 더해 운까지 보태져 예상 외로 1년여 만에 IMF 위기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IMF 위기해결을 위해 부임했던 저의 소기목적 달성이 빨리 온 셈입니다. 장관계 사의표명을 했고 200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6·25전쟁 50주년 행사를 거대하게 가진 후 8월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전쟁 50주년 행사는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6·25전쟁에 참전했던 상하원 의원 스물여섯 명이 단상에 자리 잡고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제게는 더욱 특별했던 행사였던 것이, 미국 주재 대사로서 신임장 제정, 김대중 대통령 국민방문 등 공식행사에서나 만났던 클린턴 대통령과 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념식을 끝내고 꽤 먼 거리에 있는 한국전쟁참전기념공원(Korean War Memorial Park)까지 같이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클린턴 대통령과 같이 걸으면서 주재국 대사로서 직접 대통령께 이임인사를 겸한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10. 미국의 중요성을 알아야!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걱정스런 이야기는 역시 미국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모셨던 세분 대통령들은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미국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마주한 자리였지만 복잡함이란 없는 간단하

고 직선적인 매우 솔직한 분이더군요. 만나자마자 직설적으로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결국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했더니 본인은 그때까지 미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초대 주미대사로 미국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렇듯 역대 대통령들께서는 청와대에 들어가시게 되면 국가의 기본틀, 즉 대외교정책이나 통일안보정책 등 생각하시는 틀이 상당히 비슷했다고 생각됩니다.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반대의견이 당내에서 주류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하고 나왔을 때 그런 믿음 때문이었는지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서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내다본 것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더 증명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전에서 ‘미국이 손해 본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 FTA’라며 매우 부정적인 생각으로 당선이면 파기하겠다고 올려대는 것을 볼 때, 우리로서는 다소 걱정스러운 이야기였지만, 한국의 이익이 더 커서 바꿔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대해 칭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 무작정 여론에 몰려 반대했던 사람들 이라 노 대통령의 큰 업적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미국은 중요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김석우(석좌연구위원):**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생생한 구술을 직접 듣게 되어 커다란 감동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와 남북 간 비핵화 선언, UN 동시 가입

을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동의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거에 통일정책을 통일부와 시작할 때 보다는 당시 안기부가 주로 되어있었고, 기초가 되어야하는 북한정보가 허술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기본합의서 할 때 정원식 총리 이하 한국의 대표적인 교섭대표들이 교섭을 해서 이상적인 것을 기본합의서로 해놓았는데, 이동복 선생 증언에 의하면 완전히 코너에 몰린 김일성이 연형묵한테 훈령을 주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사시키라고 해서 1991년 12월 13일에 서명을 했는데 황장엽 선생 증언에 의하면 서명 후 그날 저녁에 목란관에서 대대적인 환영연을 했는데 김일성이 기뻐하면서 당신네들 북한 교섭대표 때문에 조국이 살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더 끝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도록 더 흔들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순진하게 약속을 하면 지킬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김일성은 연형묵이 서명한 후에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외교는 잘해서 성공했지만, 북한을 다루는 데에는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도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이 북한이 어떤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와대에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정보 보고 받는 것은 김정일은 곧 죽는다는 것과 같은 형편없는 정보에 기초해서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과거의 중요한 시기를 흘려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진욱(원장):** 제가 첨언하면 1990년대 초반의 분위기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방외교도 있었고, 김일성

사망 후 어려움을 겪던 북한을 도와준 것이 아쉬움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구술자: 김 차관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남북문제를 돌아보기로 하지요.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김정남 피살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 통일정책의 전개과정에서도 과거와 비교해 훨씬 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부딪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간에 회담을 하고 합의를 하려면 아무리 소통이 불가능한 공산체제라 해도 김일성 같은 지도자에 김용순 같은 책임자라고 할까, 서로의 뜻을 이해하여 전달할 수 있는 길이 필수적인 요건인데 오늘의 북한상황은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변화해 오면서 극도로 경직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북관계의 성패는 체제의 성격에 따라 좌우될 뿐 특정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2차적이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길게는 반세기 동안의 남북관계를 돌이켜볼 때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세계화에 동참한 나라요, 북한은 지구촌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소외된 예외체제로 모든 면에서 남북의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우리는 1차, 2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모르고 지나쳐버렸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에서는 석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등장하면서 공업발전의 기동력이 되었고 이어 증기기관차라는 교통수단의 발명으로 세상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종 산업발전을 가져왔지요. 그러나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컴퓨터의 출현으로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들어

오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빠른 속도로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디지털세대들입니다. 나아가서는 최첨단의 광케이블로 인터넷 망을 깔면서 눈부시게 빠른 속도를 자랑하게 됐고 지구촌의 인터넷선도국 대열에 서게 된 한국 아닙니까? 한 달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나온 도표를 보면 세계에서 디지털 부분이 국가 GDP에 공헌하는 비중이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고 놀랍게도 한국이 둘째더군요. 세계에서 우리 나라같이 모든 것을 디지털에 의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에는 후진국이었던 우리지만 3차 산업혁명에 뛰어들어 선두에서 뛰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우리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벤치마킹하는 나라를 추격할 줄 아는 나라가 센 나라인거지요.

반면 북한은 우리가 3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진국을 모방하고 따르면서도 나름으로 뛰어나가 성공한 데에 비해 우리와는 정반대로 세계 속에서 가장 예외적인 국가로 뒷걸음 쳤습니다. 핵 발전이나 미사일에서는 놀랄만한 실적을 발휘하고 있어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전술적인 면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세계 속의 예외국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함께 가는 나라임을 세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혈사태 없이 1987년 민주화를 일궈낸 것을 보며 세계 각국에서는 놀람과 동시에 모방사례로까지 꼽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주미대사로 있던 시절 인도네시아의 정치인들이 찾아 온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알고는 어떻게 체포가 가능했고 감옥에 보낼 수 있었는지를 묻더군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Suharto) 전임 대통령의 비리는 우리에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감옥에 넣어야 한단가요? 하지만 굳이

무서워 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알려 달라는 거였어요. 그만큼 우리의 민주화 과정은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초점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는 김일성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 김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면 일제강점기에 게릴라세력을 만들어 일본과 싸웠다는 사실 정도이겠지요. 하지만 김일성은 일본의 천황제와 군국주의체제를 가장 충실하게 모방하여 일본천황제의 부활이라 할 김씨왕조를 세웠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선군정치를 헌법에 명기하고 일본의 극단적 군국주의체제를 답습하며 20세기에서 거의 마지막인 강력한 전체주의체제로 남았습니다. 전체주의란 유일사상, 유일정당으로 유일지도자 1인이 선군정치를 앞세워 모든 것을 잡고 전 국민을 완전통제 하는 사회를 일컫지요. 우파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히틀러의 나치독일입니다. 또 하나, 2차 대전의 도화선을 자초했던 일본 역시 1930년대 민주정치를 시험한 적은 있지만 군이 내각을 접수하고 군국주의체제로 이어지면서 독일과 쌍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된 동서냉전체제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전체주의체제는 끝났습니다. 특히 소련의 경우는 1950년대 초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가 집권하면서 20차 공산당대회에서 스탈린을 전체주의 지도자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탈스탈린주의를 표방하면서 스스로 변화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체제의 종주국이라 할 소련도 변하고 있었는데, 교과서적인 전체주의체제를 북한만이 지금껏 유지하다 보니 김일성은 비난을 넘어 아주 딱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더욱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체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모양새이니,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이야기 하려해도, 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의 차이, 다이내믹스(dynamics) 때문에 과연 이를

뛰어넘는 민족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쟁에 대한 공포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핵무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만약 전면전이라도 일어난다면 이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면 해답일 겁니다. 사방에 깔린 위험요소를 피하면서, 길게 끌더라도 북한체제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같은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과 베트남이 체제의 성격을 바꾸고 개방한 이후에 훨씬 더 잘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오는ダイ나믹스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죠. 초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멀리 내다보셨던 신태환 선생의 말씀과 같이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을 한 묶음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원한 대답을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끈기를 가지고 끌고 가야하는 것이 한국이 안고 있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최진욱(원장):**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이 2년 전에 청사를 이전할 때 총리님께서 축사에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외교와 통일 정책, 대북정책을 같이 종합 연구해야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국제정세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연구를 해왔고 석좌포럼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구술자 상세 프로필

1934. 5. 9.	서울특별시 출생
195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1959. 6.	미국 에모리대학교 철학과 졸업(B.A)
1968. 5.	미국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1963. 9. ~ 1969.	미국 에모리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1964. ~ 1967.	미국 웨스턴리저브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1969. 3. ~ 1988. 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73. 1. ~ 1974. 1.	미국 윌슨국제연구소 연구위원
1974. 1. ~ 1975. 1.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연구위원
1978. ~ 198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983. ~ 1984.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회장
1984. ~ 1988.	세계정치학회(IPSA) 집행위원
1985. ~ 1986.	한국정치학회 제16대 회장
1986. ~ 1988.	서울국제포럼 초대 회장
1988. 2. ~ 1990. 3.	제14대 국토통일원 장관
1990. 3. ~ 1990. 12.	대통령 정치특보
1991. 2. ~ 1993. 3.	제15대 주영국 대한민국 전권대사
1993. 6. ~ 1994. 4.	제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993. 9. ~ 1994.	서울21세기위원회 위원장
1994. 1. ~ 1996.	2002년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 명예위원장
1994. 4. ~ 1994. 12.	제20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1994. 12. ~ 1995. 12.	제28대 국무총리
1996. 5. ~ 1997. 12.	제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전국)
1996. 5. ~ 1997. 3.	제2대 신한국당 대표위원
1997. 11. ~ 1998. 4.	한나라당 상임고문
1998. 5. ~ 2000. 8.	제17대 주미국 대한민국 전권대사
2005. 7. ~ 2015.	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
2009. ~ 2012.	세계자연보존총회(WCC, 제주) 조직위원장
2009. ~ 2013.	한국전쟁 60주년사업위원회 민간위원장
2000. ~ 현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2001. 1. ~ 현재	중앙일보 고문
2008. 4. ~ 현재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센터 명예회장

# 이동복

## 간략 프로필

1937. 9. 26. 강원도 원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정치학과 2년 중퇴
1990.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이수
1980. ~ 1982.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장
1991. ~ 1993.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대변인/정치분과위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 제1특별보좌관
1996. ~ 2000. 제15대 국회의원(자유민주연합 · 전국구)



이동복 전 특보의 구술은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통일연  
구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제1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의 진행은  
홍민 박사가 맡았으며, 구술은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구술은 3시간 13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남북 대화와 대북정책 분야에 일  
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과 전반적인 남북 대화업무 및 재임 당시의 소회  
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및 상황의 상세하고 생생한 서술로 이루어졌다.

## 1. 남북회담 분야 종사 계기와 남북회담사무국의 구성

연구자: 남북관계 및 남북 대화 역사에서 선생님의 활동상에 대해서  
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어떻게 남북  
 대화, 대북정책 관련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  
 고 대학졸업 후에 언론사에서 종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회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를 시작한 게 1971년입니

다.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한적 총재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1958년에 한국일보 견습 8기로 들어가서 정치부 기자 13년차였습니다. 국회출입을 주로 했고, 1969년에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을 하다가 1970년에 잠시 외신부 차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총재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가 있는 후 9월 초였던 것 같은데, 언론계에서 정부에 들어가 있던 분 중 정성관 씨라고 당시 내무부 차관하던 분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장으로 내가 모셨던 분입니다. 점심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식집에 나갔더니 정성관 차관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김성진 청와대 공보수석, 유혁인 청와대 정무 비서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혁인 씨는 동아일보 출신이고 김성진 씨는 동양통신 출신인데, 세 분이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점심 식사하는 도중 동아일보에 있었던 그 양반이 이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산가족문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결국 통일문제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근데 남북대화를 지금 중앙정보부를 맡고 있는 이후락 부장이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후락 부장이 언론계에서 누구 한 사람을 참여시키고 싶어 한다. 우리 세 사람한테 한 사람을 추천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의한 끝에 당신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환상적이더라고요. 남북한이 경색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대화 초기단계부터 참여를 한다고 하니, 두 말 안하고 오케이를 했어요. 사실 집사람한테도 상의를 안 하고 수락을 해서 나중에 집사람한테 상당히 언짢은 얘기도 들었고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신문사 생활을 청산하고 남북대화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남북대화사무국이 지금 삼청동 월남대사관 자리에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 간판이 걸려 있고 안에 남북회담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듣기로 이후락 부장이 중심이 돼서 주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정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라고해서 갔더니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이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이 뭐냐고 물어보니 대한적십자사의 외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고 시작했는데 알맹이는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사무총장으로 장우주라고 하는 예비역 육군 소장을 모셔다 놓았고, 적십자회담을 시작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석대표 할 분으로 이법석 외무부 대사를 모셔다놓았는데, 이분의 대외 타이틀은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전혀 아무런 신분 부여가 없이 남북회담을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후락 부장이 앞으로 있을 정치적 대화에 대비해서 쓰려고 데려다 놓았습니다. 남북회담 초기 대외적으로 삼청동에 있는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이 여러 가지 회담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 회담운영부장, 무슨 부장, 대변인, 공보실장이 있었는데, 공보실장은 외무부에 근무하는 내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정주년이 와서 공보실장으로 있다가 적십자회담 대변인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좀 어정쩡하게 회담운영부장으로 있었어요.

## 2. 남북한 막후 접촉과 이후락 평양 방문의 성사

1971년 예비회담이 시작됩니다. 예비회담이 시작됐는데 잘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안 되는 게 처음엔 본회담 장소로 좀 난항을 하다

가 '서울-평양' 교차 개최로 합의가 되었고 그 다음 제일 핵심 사항인 본회담 의제 협상으로 들어갔는데 한 걸음도 나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산가족문제를 다루려 했고, 저쪽은 이산가족, 친척, 친우를 구실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반공 또는 안보정책을 다루려고 하니 까 서로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전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총재의 회담 제안이 나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1960년대 말에 와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악화됩니다. 1960년대 초부터 월남전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 말에 와서 월남이 월맹한테 밀려서 전세가 불리해지고 미국이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월남에서의 군사적 상황에 북한이 고무됩니다. 북한이 1960년대 중반부터 소위 '4대 군사노선'을 앞세워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하고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죠. 1968년 1월에 '1·21사태'라던가 또는 '푸에블로호 납치', 'EC-121 격추사건'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닉슨 행정부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1969년 10월 괌(Guam) 선언을 발표합니다. 괌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아로부터 미국은 철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궁지에 몰려서 한국을 팽개치고 나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한국 정부도 불안해진다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차선의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을 심각하게 정부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70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한국일보 사주인 장기영 씨라고, 원래 한국일보 사장이지만 1964년에 정부 부총리로 들어와 일하다가 나가서 회사 직접 경영은 아들인 장강재한테 맡겨 놓고 자기는 회장이라는 타이틀로 신문사를 관여할 때인데, 이분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일본을 자주 가요. 그러다가 이북의 빙상선수 신금단과 월남해 있는 아버지의 상봉으로 유명해진 1972년의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앞

두고 장기영 씨가 북한 측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1970년 10월에 평양 사람이 동경에 와서 장기영 씨를 수소문해서 마침 동경에 가 있는 장기영 씨를 만났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김일성 수령이 장기영 선생을 평양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데 와 주실 수 없느냐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영 씨가 상당히 좀 겁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확답을 못하고 이후락 씨한테 연락을 했던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찌하느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도 그 의도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했어요. 못하고 있는 차에 어떤 일이 생겼냐하면, 1971년 7월에 키신저(Henry A. Kissinger)가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미국하고는 별개의 독자적인 동선을 확보할 수가 없느냐 해서 동선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중앙정보부 안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부담이 크니까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뭐가 있을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산가족문제를 가지고 일단 적십자회담을 제안해보자, 이래서 최두선 총재의 담화가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예비회담을 하고, 3차 때부터 의제 토의를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십자 예비회담의 대표 가운데 중앙정보부를 대표해서 회담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정홍진 씨입니다. 맞은편에 김덕현이라고 하는 북한대표가 앉아있는데, 수석대표는 김태희이지만 김덕현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덕현하고 얘기를 해 보겠다 해가지고 4차 회담 끝나고 헤어질 무렵에 쪽지 하나를 김덕현한테 줬습니다. 회담 끝나고 당신 나 좀 볼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남았어요. 둘이 만나서 정홍진 씨가 나는 중앙정보부 사람인데 당신 어디서 나왔소. 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지도원이요.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남북의 권력기관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우리 둘이 별도의 대화 라인을 꾸며 회담도 도와주고 남북 간에 소통을 해봄

시다. 장소. 이래가지고 둘 사이에 비밀 대화 라인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만나도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대신 둘이 얘기하는 대화의 깊이는 있어졌단 말이에요. 만나기 시작한 게 1971년 10월 얘기고, 10월, 11월, 12월까지 몇 차례 만났는데, 정홍진 씨가 김덕현한테 물어봤어요. 작년 10월에 북쪽에서 김일성 수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그러면서 당신의 사람이 장기영 씨를 만나서 평양 초청 의사를 표명했는데 당신 아느냐 이랬더니, 그거 우리가 한 거다. 초청이 아직도 살아 있느냐. 살아있다. 그럼 장기영 씨 평양가는 거 추진하자. 우리가 가도록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장기영 씨가 가는 문제를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1972년 1월 그때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전략팀은 정보부 본부가 이문동에 있었고 부장이 직무하는 곳은 필동에 있는데, 정보부하고 상관없이 궁정동에 있는 부장 안가에서 늘 회담 업무는 논의하고 추진했어요. 거기에 강인덕 씨가 북한정보국 국장, 북한정보국 부국장으로 김달수 씨가 배석을 늘 했는데, 북한 정보에 대해 조언을 했어요. 정홍진 씨는 서울대학교 문리대 사회학과를 나와서, 정보부에 들어가서 북한 정보를 하지 않고 심리전을 쪽 했어요. 그래서 당시 직함이 심리전국 부국장이었습니다. 북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아닌데 판단이 빠르고, 부장의 신임이 두터워서 부장이 정홍진 씨한테 남북 대화 심부름을 다 시켰고, 강인덕 씨하고 김달수 씨가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북대화 업무 실무는 정홍진 씨하고 나하고 둘이서 처음부터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972년 2월이 됐는데, 궁정동에서 장기영 씨 평양 가는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있는데 이후락 부장이 오더니, 정 국장, 장기영 씨 꼭 가야되는 것인지 북쪽에 물어보라고 했어요. 어차피 일이 성사가 되어서 본격적인 단계에 가면 내가 관여 안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북쪽에서 김영주가 나오면 남쪽에서 장기영 씨 대신 내가 평양에 가겠다,

평양 의견 물어보라 그랬지요. 정홍진 씨가 직통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다는 대답이 왔어요. 그래서 5월 하순 경에 이후락 씨가 평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 3. 이후락의 평양 방문과 7·4남북공동성명이 만들어지기까지

평양에서 이후락 씨는 김영주를 두 차례 만나고 김일성하고 두 차례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후락 씨가 김영주를 그의 대화 상대방으로 선택한 것을 김일성이 어째서 받아주었느냐는 것이 그 뒤에 계속 궁금한 문제였는데,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김영주가 이미 북에서 실각을 했어요. 1960년대를 통해서 김영주하고 김정일하고 치열한 후계 다툼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1960년대 말에 와서 김영주를 김정일이 이겨서 김영주가 물먹게 생겼어요. 숙청당하는 단계에 와있는데, 우리가 김영주를 부르니까, 말하자면 죽은 말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김영주를 내뱉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후락 씨가 첫 번째 평양 갔을 때 김영주가 나타나고, 김영주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 사라지느냐 보니 김영주하고 두 번, 김일성이하고 두 번 만나고 끝 무렵에 가서 이후락 씨가 김일성한테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어렵게 왔는데,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서울방문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그건 어렵다고 했어요. 왜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김영주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갈 수가 없습니까?’ 김영주가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멀쩡하던데 몸이 어디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식물성 신경부조화증이라고 그랬나, 희귀한 병을 앓고 있어서 이번에도 활동할 수 없는 걸 아주 무리해서 활동을 시켰는데, 이런 공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김영주 못지않게 신임하는 사람을 대신 보낼테니 그렇게 알아주시오. 그래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박성철 부수상

을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성철이 1972년 6월에 서울 왔다갔고, 서울 왔다간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하면 이후락 부장이 합의문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다가 그동안 이후락 부장의 평양방문, 박성철 부수상의 서울방문 내용을 가지고 남북공동합의문을 하나 만들자 했습니다. 북에서 동의를 하면서 즉각 회신이 왔어요. 내용이 문제의 조국평화통일 3대 원칙이 중심이 돼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외무부, 국방부, 통일원 여러 관계 부처 주무국장들로 전략반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전략 사안을 검토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전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된다 그랬냐면 1971년에 남북회담을 시작하고 1972년에 이후락 부장이 서울·평양 갔다 왔습니다. 이러다 보면 서울·평양 왕래가 될 것 같은데, 당시 서울·평양 왕래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왕래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왕래는 어렵게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반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평양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드느냐 하는 거 가지고 정보부와 여러 군데서 법률스터디를 했는데 방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방안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를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게 참 위험합니다. 제가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땠는가 하는 사례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락 부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대만에 누구를 불러왔는지는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미국은 프레드 찰스 이클레(Fred C. Ikle) 시카고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인데 협상학의 권위자입니다. 이 분이 쓴 책으로 『How nations negotiate』, 국가협상론이랄까, 국가

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소 SALT협상(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전략무기제한협정) 1단계, 2단계 때 소위 협상 기술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미국 대표단에도 참여했던 분입니다. 솔트 협상에 참여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 『How nations negotiate』입니다. 그 분을 초청했고 또 한 사람은 서독의 내독관계성, 서독이 알다시피 전독성을 만들었다가 동독이 요구하니까 내독관계성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내독관계성 정책 1국장을 하던 한스 쉬어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스 쉬어바움은 내독관계성에서 동독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1970년에 브란트(Willy Brandt) 수상하고 슈도프(Willi Stoph) 수상이 에르하르트(Ludwig Wilhelm Erhard)와 양독 정상회담을 카셀(Kassel)에서 할 때 브란트 수상의 수석보좌관으로 바로 뒤에 배석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따로따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해보니까 대만 사람은 절대로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하고 만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국공협상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프레드 이클레 교수는 『How nations negotiate』 책에서 내가 봤지만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할 때는 원칙적인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 합의를 하게 되면 원칙의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이행단계에 가면은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의 합의가 두 개 또는 세 개의 합의가 되어서 이행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협상 해석 단계에 가서 오히려 상대방에다가 이행불능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구실이 되는 것이 십중팔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칙적인 합의를 해서는 안 되고, 합의를 할 때는 해석상의 이견의 여지를 갖지 않는 확실한 용어를 사용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참고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남북회담을 시작해보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원칙

적인 합의를 해서 협상을 활용해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상례가 돼있기 때문입니다. 쉬어바움이라는 친구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자랑거리인거처럼 얘기를 하는데, 동독이 양독 문제나 통일문제에 관해서 얘기한 모든 말의 의미,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고, 그 해석된 정치적 의미에 입각해서 서독 측에서 대응하는 발언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대응 발언문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내독관계성에 쌓아놓고 색인카드를 만들었는데, 색인표가 담겨있는 서류가방을 항상 자기가 들고 브란트 수상 뒤에 앉아 있다가 상대방이 얘기할 때마다 이슈가 나오면 즉각 색인표에서 찾아서 대응 발언문을 대령해서 브란트 수상, 에곤 바(Egon Karl-Heinz Bahr)도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안 되었습니다. 왜 작업이 안 되느냐 하면, 공산주의자들 발언 가운데서 숨은 의미와 드러난 의미, 다시 말해 드러내는 뜻하고 함축된 의미하고 구분할 수 있지만, 북한이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게 1972년에서 1973년까지의 일이고, 1973년에 무슨 사건이 생겼느냐 하면 서독에서 기욤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기욤(Günter Guillaume)이라고 하는 브란트 수상의 정치담당 비서관이 동독한테 포섭이 돼 서독 수상실의 모든 정보가 동독에 넘어 갔습니다. 1974년에 남북회담이 중단되고 내가 독일을 가게 됐어요. 독일을 가보니까 쉬어바움이 베를린 정부의 정책교육국장인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베를린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을 사면서 제가 얘기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신이 서울에 와서 한 얘기를 우리가 신기하게 듣고 열심히 모방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다.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작업이 헛것이 아니었느냐. 그게 기욤이 다 동독에

넘겨줘가지고 동독이 당신이 준비한 거 다 알고 있던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점연쩍게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면, 공산주의자들이 의심이 많아서 상대방하고 대화의 진전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은데, 우리 속마음을 저놈들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용이해졌다. 1972년의 양국 기본조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후락 부장한테도 절대로 이걸 합의하면 안 된다. 조국통일 3원칙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조국통일 3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다루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북한 측의 해석이 있단 겁니다. 우리가 문서에 합의했을 때 나중에 그들만의 일방적인 해석을 가지고 들고 나오면 다음부터는 남북대화가 한결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면 안 된다. 지금 전략반의 생각도 똑같다. 그런데도 합의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원인을 그해에 있었던 유신 개헌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신 개헌 과정에서 사실 이후락 부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북대화를 당장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유신 개헌의 명분을 여기서 찾는 거라는 겁니다. 유신 개헌이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일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소위 체제 구축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통일과 연관되어서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야 될 절대적인 정치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4남북공동성명을 무리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7·4남북공동성명이 나오게 되니까 저는 본업이 생긴 겁니다. 7·4남북공동성명에 의거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일을 당신이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회담에서 내 방이 하나 마련 된 겁니다.

#### 4. 미·중 데탕트 시기, 남북한 경제 및 안보 상황

연구자: 통일이냐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중요한 관심 주제 중 하나가 1971년에 키신저가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가 이해했던 방식, 대응전략 수립, 그리고 정책 지도부 내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게 일정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술자: 압력이 아니고 우선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하고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소통이 없었던 겁니다. 미국이 월남전을 종식시키는데 너무 쫓긴 나머지 우방들하고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키신저의 베이징 방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마 제 지금 기억으로는 CIA 계통을 통해 사실을 알려오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첫째로 월남전의 양상으로 봐서 미국의 세계적 역할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이 아시아로부터의 철수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 아시아로부터의 철수는 월남뿐만 아니라 대만을 포함해서 한반도 에치슨 라인(Acheson line)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일종의 공포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미국하고 협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원인 행위에 대해서 보안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게다가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남북 간에 체제 대결을 해왔는데, 5·16이 나던 1961년까지 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밀렸습니다.

그 다음 국방 면에서도 북한이 엄청나게 무력증강이 됐단 말이예요. 북한이 원래 6·25 휴전 당시에는 거의 알거지가 되어있었는데, 소련과 중공이 경쟁적으로 군비와 장비를 제공해서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사실은 남한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1962년에 '4대 군사노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주민 무장화, 군사화를 추진했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기본적으로 1960년에 4·19로부터 5·16까지 사이의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엄청나게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961년에 5·16이 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 지금도 귀에 쟁쟁한 정치적 슬로건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선 건설, 후 통일', '싸우면서 건설하자', '일면국방, 일면건설'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는 닫고 경제건설에 일로매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경제 각료들이 팀을 짜서 우리가 소위 선진국으로 가는 경제개발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유치원부터 올라가서는 가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으로 로열티를 내고 고등학교 정도의 기술을 사들여야 된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 그걸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일 국교정상화'라고 해서 8억 불의 투자자금을 확보했고 이것으로 불충분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승부수를 넣었습니다.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한테 우리가 보병 2개 사단을 보내겠다고 했더니 미국이 감지덕지해서 브라운 각서(The Brown Memorandum)를 만들잖아요. 브라운 각서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대들보입니다. 그래서 한·일 국교정상화, 한국군 월남전 참전을 통해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부터 남북 간에 격차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아직도 북한은 경제가 남쪽보다 우세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 11월에 이후락 부장이 평양 갔을 때 김일성이 이후락 부장한테 한 얘기가 그겁니다. ‘북쪽이 남쪽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다, 통일 지향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다, 사실은 남쪽이 미국에 매달려서 매판자본에 예속화되고 있는데 잘못된 선택이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에 흐루쇼프(Nikita Sergeevich Khrushchyov)가 코메콘(COMECON)에 들어오라는 것을 내가 거부했다, 우리는 유치원생이고 소련은 대학생인데, 대학생하고 유치원생이 한데 섞이면 우리는 밝히고, 결국 코메콘이라는 것이 우리한테서는 원자재를 가져가고 자기네들은 완성재를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면 우리한테 남는 거는 광물 파간 땅 구멍만 남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으로 살아나갈 테니 당신네들은 대학생 걸음으로 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서 코메콘에 가지 않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기술을 자주화해서 자주경제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평양 가면서 보니까 여기저기에다가 트랙터(tractor)를 띄엄띄엄 갖다놓고 전시용으로 살수기도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는 얘기를 했더니 북한 누군가 한 명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소련한테 트랙터하고 굴삭기를 국산화하려고 설계도를 달라고 했더니 소련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완제품을 주겠다, 사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캄보디아에 가서 완제품 두 대씩을 사왔다고 해요. 한 대는 분해해서 성분을 파악하고, 다른 한 대는 역설계를 했는데 설계도에 따라

서 부품을 만들고 조립을 해서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수상동지께서 보시고 어디를 고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산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우리 힘으로 한 거라고 했어요. 그거는 자립이 아닌데, 완전히 해적질 아니란 말입니다. 해적판 이죠. 역설계한 거는 오리지널 기술이 아니니까 발전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는 안했지만 이후라 씨가 약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라 씨가 뭐라고 했냐면 울산 정유공장과 포항제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산 정유공장 얘기를 하고 조선공업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무슨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김일성이 그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옆에 김일이 있었는데, ‘뭐라 그래?’라며 물으니 김일이 그걸 설명했는데 김일성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 친구들이 남한에 공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몰랐으니까요. 김일성이 북의 석탄, 철강 가져가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후라 부장이 우리는 호주의 철강 광산지를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가져온다고 했어요. 상징적으로 남북 간 경제력이 역전되는 순간이 그 무렵에 있는 거예요. 북한은 1961년에 1차 7개년 계획을 시작하잖아요. 1차 7개년 계획을 통해서 김일성이 노력했던 게, 1차 7개년 계획을 완수하면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을 준다고 해서 1962년 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 동안 네 차례인가 계획을 했지만, 하나도 끝까지 완수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훨씬 뒤에 놀란 게 1991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일성이가 29년이 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로 역전되기 전에 북한은 아직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남침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중국에 도와달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게 최종적으로 언제 좌절 되느냐하면, 1973년 월남전 파리협상이 타결되고 1975년 월남전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월남전이 끝나니까 김일성이 1975년 5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에게 “이번은 우리 차례니까 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택동, 주은래가 국무원 주최 만찬을 했는데, 거기서 김일성이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고 얻는 것은 통일이다’라고 하면서 전쟁 수단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중국이 절대 안 된다면서 아직도 아시아에서 미국이 나가지 않는데 그러면 미국이 돌아온다고 말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위기가 많았어요. 뾰족한 방안이 안 나오는데, 그나마 나온 게 북한과 미국이 배제된 별도의 라인을 구축해서 대미외교에 활용해보자라고 해서 적십자회담을 제의했던 것이죠. 북한하고 대화에서 성사가 되리라는 전망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5. 당시 대북정책 결정과정과 중앙정보부의 위상

연구자: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통일 3원칙’ 같은 경우에는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락 부장 뒷선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술자: 그 뒷선도 아닙니다. 이후락 부장입니다. 가령 박정희 대통

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랬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허용 안했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엄격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후락 씨가 1972년 5월에 평양 갈 때 출발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친필로 보낸 훈령이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죠. 절대로 결과를 보지 말고, 상대방을 정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자: 중요한 대북 관련 결정, 전략 수립, 집행 등에 중앙정보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북정책은 여러 관련기관들이 협의하기도 하고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데, 당시 대북정책의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구술자: 그때 상황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부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중앙정보부가 상위예요. 지금 북한 정권 위에 조선노동당이 존재하죠. 말하자면 북한의 경우 정권 위에 존재하는 조선노동당의 역할을 중앙정보부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국정 영역에 걸쳐 중앙정보부가 최종적으로 리뷰를 했으니깐요. 국가안보는 조금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우선 자주국방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방의 7~8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깐요. 국방의 주체성이 없는데다가 통일원이 정책부서가 아닙니다. 정책부서가 아니라 연구 내지 교육 부처니까 통일원이 우선 주도할 수가 없어요. 또 외무부는 외무부대로 보수화돼 있기 때문에 가령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요구하는 융통성이라든가 탄력성, 이런 것이 문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부 특정 부처의 장(長)하고 대통령하고의 관계입니다. 당시에는 대통령하고 중앙정보부장

은 일심동체였습니다. 일심동체인데다 1970년대 이후락 중앙 정보부장하고 박정희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역대 어떤 부장하고 대통령과의 관계하고 또 달랐습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소위 상호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후락 부장이 대통령 결단이 요구되는 정책영역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가안보, 대북관계에 관한 것은 정부 다른 부처는 일종의 장식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정보부가 정책도 입안하고 어떤 사안도 분석평가하고 집행도 중앙정보부가 해서 다른 부처는 들러리로 참가하는 형태로 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대화 체제도 큰 틀 속에서 움직이니까, 남북대화에 내가 관계하기 시작한 뒤로는 대북정책이나 남북대화의 세부내용은 궁정동에서 마련되어 정부 안에 남북대화대책위원회라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의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이 되는 장관급 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부장이 가서 보고하거나 내가 가서 보고하거나 아니면 정홍진 씨가 가서 보고하면 거기서 난상토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난상토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관계 장관들이 잘 몰라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의를 못합니다. 그저 문장의 토씨로 시간을 소비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대화대책위원회에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 적이 없습니다. 조금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대책위원회 거쳐서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부분 원상복구 돼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당초 정보부 안(案)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이 반복 됐어요. 10·26사태 이후에는 많이 달라지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이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

는 사람이예요. 독선생을 앉히다시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독단으로 내리기 보다는 관계 참모들  
 한테 의견을 물어서 자기가 결단을 내려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은 그와는 정반대예요.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보다 지  
 식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도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결정의 주체가 관계 비서관이나 또는 엉뚱한 사람이 합니다.  
 박철언이라든가, 김우중이라든가 엉뚱한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  
 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요. 그런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 6. 관련 부처 사이의 관계와 대북정책의 실행

연구자: 1969년에 통일부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보부가 전  
 사회영역, 정책에 관여를 했고 통일부가 실제 하는 기능이 상당  
 히 제한적이고 정책연구의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등 대북정책의 관련 부서들 사  
 이의 관계, 위상을 과거와 비교해본다면 당시에는 어떠했고 지  
 금은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구술자: 당시 통일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통일부의 구성, 업무영역이 정책연구, 교육, 홍보 이것뿐이거든  
 요. 근데 정책마저도 통일부는 학술적 연구지, 정책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책연구에 동원되는 인적 자원은 중앙  
 정보부가 거의 독점적으로 관리했던 말이에요. 중앙정보부 다음  
 에는 외무부가 관리했고요. 통일부는 가령 학자들을 동원해도  
 그 학자들이 다 통일부 연구는 학문적 연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는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마다 변화가 있었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좀 특이한 경우로 좌파세력 인사들이 좌우했으니까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경제인이고요. 행정가가 아니에요. 현재 통일정책을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통일부가 하는 거 같은데, 사실 대통령은 그 역할을 위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사람들로 이어져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사람들은 당연히 배척의 대상이고, 박근혜 대통령 나름으로 특유하게 사람을 발굴해서 배치한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 첫 통일부 장관하던 류길재 장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사람이고 지금 홍용표 장관은 수습과정인 양반이고, 청와대 안에서 대북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상당 기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대북정책에 관여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정원이 조금 변했습니다. 변했지만 국정원도 충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정보의 수집과 획득, 분석, 평가를 바탕으로 대통령한테 조언하는데 국정원 입김이 조금 세진 거 같고, 아직 통일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정부 안에서 하나의 체제적으로 통일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사실 그런 현상학적 관점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근본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여러 차례, 여러 해를 두고 지적을 하는데, 결국 아직 누구도 거기에 착안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하나가 아닙니

다. 통일정책은 대북정책의 일부예요. 대북정책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 첫째로, 분단관리정책이 있어요. 둘째로, 통일정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보정책이 있어요. 안보정책은 군사적 측면이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데올로기를 염려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이룩하고자 하는 통일의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 통일정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추구하는 통일의 내용이 없어요. 정부에서 정의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결과물도 없어요. 통일정책의 실체는 남과 북이 통일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통일한다는 것은 남과 북이 통일해서 첫째로, 분단 상태보다 나아진 내용의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은 체제가 다르잖아요. 남한은 지금 북한의 40배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최근 2~30년에 와서 지구적 차원의 세계질서는 경쟁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질서예요. 소위 WTO(세계무역기구)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행위 주체(국가)의 경쟁력을 중요시합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있으면 살아남는 거지요. 과거의 GATT체제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영역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보완했지만, 지금의 WTO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남북관계에 적용시켜보면 지금 남한의 경쟁력은 세계 톱이고, 북한의 경쟁력은 세계 바닥입니다. 이 둘을 통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통일을 하려면 세계 상위에 올라있는 경쟁력이 유지된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인 경쟁력 체제로 통일해서는 완전히 비극이지요. 둘을 섞어도 문제가 있어요. 섞으면 경쟁력이 50대 50으로 통일이 될는지 30대 70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만큼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

경쟁력이 없으면 전체 경쟁력을 훼손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에는 그레삼의 공리(Gresham's law,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가 작동하는 사회지요. 섞어서 통일하면 양화가 악화를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보존되고 분단 형태보다 나아지는 통일이 되려면 어떤 내용의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통일부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교육, 홍보, 연구하고, 통일이 됐을 때 일어날 문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반면, 남북대화라는 것은 가장 잘 돼봐야 합의를 통한 통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합의통일은 섞어찌개를 만든다는 건데, 남북대화라는 것은 통일하고 관계없는 분단 관리입니다. 분단이라는 것은 통일되기 전에는 우리가 다뤄야 할 현실이니까 현실을 어떻게 잘 다뤄가는가 하는 것이 분단관리입니다. 전쟁도 막고, 평화도 구축하고 상호교류도 해서 소위 상부상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그걸 통해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체제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것이 소위 통합이론이라는 겁니다. 수렴의 원리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같은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상호 부정인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통합이 나온 전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중국이 시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에서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 분단관리인데, 상황관리를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의 주체는 싫거나 좋거나 북한의 정권이거든요. 그 정권을 상대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남북대화

입니다. 통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려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 북한의 현 정권체제와 합의를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일의 상대 주체가 정권이 아닌 북한의 주민들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야 그것을 상대로 우리가 통일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7. 독일 통일의 정치적 교훈과 한국의 대북정책 수행체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양독 통일이 합의통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민당 출신인 브란트가 추구한 것이 접촉을 통한 변화입니다. 접촉을 통해서 동독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동독의 경우는 변화가 될 수 있는 에이전트(agent)가 있었어요. 가장 큰 동인은 텔레비전이었어요. 동서 양독은 같은 PAL 방식으로 텔레비전 수신을 해요. 남북한은 북은 PAL 방식인데 남은 NTSC 방식이고요. 물론 동독과 서독에서 상대편 방송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정책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막을 수 없게 됐어요. 동독 사람들은 열심히 서독 방송을 보고, 서독 사람들은 열심히 동독 방송을 보는 경향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서독 사람들이 서독 방송을 보니까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동독 방송은 채널별로 계열화가 되어있어요. 음악, 운동, 스포츠, 연극채널이 하루 방영시간에 광고 하나 없이 내용만 방영을 합니다. 서독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보죠. 동독 사람들은 서독 TV 광고를 열심히 보면서 서독 문물에 대해 상당히 알게 되는 거예요.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독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적·사회적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 변화가 1987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라이프

치히(Leipzig)에서 월요집회가 1987년부터 20~30명이 모여면서 시작되었지만 소위 사상의 자유, 왕래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1987년부터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1989년에 규모가 커집니다. 1989년 5월 라이프치히에서 10만 군중이 모이고 이렇게 되면서 7월에 소위 엑소더스(exodus)가 생기잖아요. 헝가리에 갔던 동독 청년 수백 명이 서독대사관에서 서독으로 보내달라는 외침이 커지니까 헝가리가 서독으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외침이 옆 지역인 체코슬로바키아로 번지니까 동독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동독이 7월부터 서독을 상대로 협상을 제안해요. 콜(Helmut Kohl) 수상이 '노(No)' 라며 응하지 않습니다. 동독에서 10월에 호네커(Erich Honecker)가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를 만나서 도와 달라고 했죠. 진압을 해야겠으니, 소련군이 진압을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때 고르바초프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시간은 지각하는 자를 가혹하게 징벌한다. 지각하지 말고 때맞춰 변화하라'라고 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계속 탄압을 하다가 10월에 대규모 수십만 집회가 나오니까 결국 동독 공산당에서 호네커를 내치고 에곤 크렌츠(Egon Krenz)를 공산당 서기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크렌츠가 열심히 서독에다 협상을 제안하는데, 서독에서 응하지 않니까 크렌츠가 여러 가지로 궁리하다가 11월에 결국 베를린 장벽을 허물잖아요? 사실 허무는 시기도 조금 드라마틱해진 것이 그걸 다루는 공보담당 비서가 시간을 맞춰서 질서 있게 열지 않고 무질서하게 확 열어 버렸단 말이에요. 상황이 견잡을 수 없어지니까 동독 의회가 헌법을 개정해서 공산당의 일당 독재 조항을 없애고 슈토프를 내보내고 모드로우(Hans Modrow)라는 온건한 공산주의자를 수상으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서독에서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이라고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헌법은 통일된 뒤에 나오는 것이지 통일될 때까지는 임시니까 기본법으로 한다. 기본법 가운데 23조는 '동독의

6개 주나 전체나 일부가 서독의 일부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의회의 결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흡수통일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나 146조는 '독일 민족의 어떤 운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새로 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통일할 때는 양독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서 통일했을 때 쓸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독 안에서 통일 문제 나올 때마다 논란이 끊임없었어요. 한 쪽에서는 23조로 흡수통일을 하자, 다른 쪽에서는 146조에 의거하여 나중에 양독을 다 허물고 백지 상태에서 새 헌법을 만들어서 통일하자. 사실은 당시 서독 지식인 사회는 대부분 146조의 입장이었습니다. 서독의 콜 수상이 1989년 11월 28일 '유럽과 독일의 분열 상태를 극복하는 10개 항목 방안'이라고 같은 해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유사한 내용의 통일방안을 발표했지만, 콜 수상은 이때도 이 방안에 의한 통일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동독이 먼저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동독이 할 수 없이 1990년 3월에 다당제와 자유총선거를 했습니다. 자유총선거에서 공산당이 한 자리 숫자로 주저 내려앉고 기민당이 78%의 지지를 받아 로타 디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라고 하는 반공주의자 변호사가 수상이 되어 비로소 통일 헌법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 안에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돌고 있는 겁니다.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다루는 현 정부 정책결정체제가 사실 마비되어 있는 거죠. 마비되어있으니까 정비해야 되고, 정비하려면 통일과 대화를 분리해야 합니다. 통일은 통일부가 맡아야 되고, 남북대화는 통일부가 손을 떼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통일정책은 내독관계성이 하고 양독 협상은 수상실에 전담 국무위원을 두고

국무위원이 사안에 따라서 관계부처 사람들을 모아서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어 협상을 했습니다. 동독이 통일전선전술이라든가 정치적 책략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독관계성 정책 2국장이 교섭팀에 참가해서 합의하면 결과를 내독관계성과는 상관없이 관계 부처가 상대 부처하고 직접 협의하여 이행하여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우리도 그리 가야 통일부가 살고, 대북정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통일부가 통일정책도 하고 남북대화도 하다보니까 통일정책은 죽어버렸어요. 남북대화는 동태적인데 통일정책은 정태적인 데다가 우리 정부 관리들의 사고구조상 기획재정부의 예산관리관들이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를 구분하여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려 하지 않고 다 통합해서 주려 하는데, 그러면 통일정책이 죽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지금 아주 큰 위기에 닥치는 거예요.

## 8. 국가심리전 총국장과 남북회담사무국 국장직 수행

연구자: 남북회담사무국이 중앙정보부 산하에 있었는데, 전두환 정부 들어와서 통일부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국장으로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술자: 1979년에 10·26사태가 나죠. 10·26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내 개인적으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1977년 3월에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을 하면서 중앙정보부 남북대화사무국 부국장을 하고 있었어요. 1977년 3월 28일인가 갑자기 김재규 부장이 부장실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김재규 부장은 며칠 전에 부임을 했어요. 갔더니, 나는 초면인데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이 시각부터 자신의 특별보좌관 일을 해달라

고 해요. 김재규 부장은 ‘내가 간이 몹시 나쁘는데 철도병원 원장으로 간 전문의인 동서가 하루 3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당분간 누워서 지내야 한다. 각하한테 중앙정보부장 명을 받아서 일신상의 건강을 이유로 물러날 수가 없다. 그러니 내일부터 나는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회의주재를 하고 12시부터는 궁정동에 가서 쉴 테니 나머지 시간에 부장에게 올라온 모든 보고서를 당신이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중앙정보부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라는 것을 그 녀 달 동안에 알았어요. 모든 보고서를 부장을 대신해서 내가 처리하고 만약에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다섯 시 반에 궁정동 안가로 가서 부장하고 상의하는 생활을 녀 달 했어요. 녀 달 있으니까 건강이 추슬러져서 정상 근무를 하면서 나한테 미안하니까 국가심리전 총국장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977년 9월쯤부터 1979년 1월까지 국가심리전 총국장으로 1년 반을 있었습니다. 내가 심리전 총국장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강인덕 국장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하는데, 강인덕 국장 걱정이 이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데올로기 문제가 젊은 사람들에 어필(appeal)할 텐데, 지금 정부가 소위 좌익 서적, 좌익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과거에 좌파 이데올로기를 접했다는 기록만 나오면 인사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교수가 좌파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해서 걱정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하다가 아이디어를 강인덕 씨가 냈어요. 정보부 안에다 대학원을 만들자. 그래서 정보부에서 전세계 이데올로기 원서를 구해서 대학원에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을 시켜 배출시키자. 그래서 석사과정까지 하고 가능하면 박사과정까지 하지는 안을 만들었어요. 황산덕 문교부 장관한테 갔더니 안 된다 그래요. 요새는 대학이 없는 대학원대학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대학이 없는 대학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아카데미는 대학이 없으니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석사과정 없는 2년제 자유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년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2년간 학생을 뽑았어요. 1학년생이 졸업하게 되고 2학년생이 졸업할 때 1학년생이 3차년도에 가니까 2학년으로 올라올 때가 돼서 또 뽑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강인덕 씨를 포함했어요. 이철희라고 하는 차장이 김재규 부장한테 가서 뭐라고 했는지 자유아카데미를 폐지하는 부장 결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 바로 윗방이 강인덕 국장 방인데, 국장이 큰일 났다고 하면서 내려왔어요. 자유아카데미 폐지 결재를 부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김재규 부장과 사이가 좋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강 국장이 만든 슬라이드를 가지고 궁정동으로 가서 ‘아이들이 사상도 모르고 누가 그걸 관리하느냐, 우리가 관리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부장 얘기가 ‘30분 전에 결재했는데, 지금 어떻게 번복하느냐. 내가 결제한 것은 1학년생을 뽑지 않는다는 거니까 지금 2학년으로 올라간 학생들을 1년 동안 관리하는데, 학사관리를 당신이 좀 맡아서 해라. 지금 강인덕 국장에 대한 여러 말이 있으니, 1년 뒤에 결과를 가지고 재고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철희가 부장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못할 것 같으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했다고 해요. ‘하나는 부장 특별로 돌아가던가, 하나는 국내 어디 지부장으로 가던가, 하나는 해외공관의 공사로 나가라.’ 나는 중앙정보부 직원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남북

대화니까 하는 거였으니, 남북대화가 재개될 때까지는 특별로 돌아가서 있자는 마음으로 특별보좌관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와서 1979년 1, 2월쯤부터 12월까지 특별로 있는데, 국내 정치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부장 특별보좌관이 나하고 과거에 노동청장하던 경찰출신 최두열 씨하고 국제정치학 교수 세 사람이었어요. 부장이 우리 세 사람더러 국내정치가 걱정스럽다고 국내정치에 자꾸 관계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셋이 모여서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관계할 일도 아니고, 우리는 모른 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 대통령 시해사건이 터졌지요. 사건이 나자 합수본부는 당시 정보부의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을 전원 서빙고의 보안사 시설에 13일 동안 가두어 놓고 시해사건 수사를 벌였어요. 합수본부에서 나에 대해서는 남북대화 하던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해줬어요. 열사흘 후, 나올 때 전원을 보안사령부 중앙청 옆 보안사로 데려가서 강당에다 앉혀놓고 있더니, 나를 사령관이 찾는다고 해요. 사령관실에 들어갔더니 전두환 사령관이 초면인 나에게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안하니 누가 좀 북한문제를 판단해서 나한테 조언 해주어야겠다면서 이 특별보좌관으로 돌아가서 그 역할을 맡아 달라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회담사무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sup>1)</sup>이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남북회담사무국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있는데, 전두환 사령관이 나를 신임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그랬는데, 남북관계 상당히 일이 많았죠. 1980년 8월쯤에 최규하 대통령 서리가 사임하고 전두환 사령관이 대통령 서리가 됐어요.

<sup>1)</sup>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라는 뜻.

서리가 되더니 느닷없이 통일부 장관으로 이범석 인도주재 대사를 불러들이고 그 다음 남북회담사무국의 통일부로의 기관이전을 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반대했어요. 내가 반대한 이유는 대화업무와 통일정책 업무를 뒤섞어서는 안 된다는 나의 평소 지론 때문이에요. 차라리 청와대로 가던지 그것이 아니면 현 위치에 있는 게 좋다고 내가 굉장히 저항을 했는데,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을 인솔하고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장이 돼서 온 거예요. 현판 거는 날 전두환 서리가 왔어요. 인사말을 하는데, 말씀은 ‘그동안 이동복 국장이 남북대화 업무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고 수고를 하는데 국가안기획부(중앙정보부의 바뀐 이름) 소속으로는 여러 가지 명분상 거북한 점이 있을 것 같아 이 국장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훈장을 그 자리에서 하나 받았지요. 그래서 통일부로 왔습니다.

## 9. 중앙정보부 산하 남북회담사무국의 위상과 심리전 업무

연구자: 말씀하시면서 ‘나는 중앙정보부 직원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남북회담사무국이 중앙정보부 산하에서 어떤 위상과 성격을 띠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나는 1958년부터 1971년까지 13년간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를 했어요. 가장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언론 규제, 언론 탄압을 하죠. 중앙정보부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집단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전체적인 역할을 보면 중앙정보부가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1971년에 남북대화라고 해서 가보니 속은 중앙정보부였지만, 1973년 2월까지 중앙정보부 신분이 아니고 적십자사 신분이었어요. 적십자사 본사의 신분도 아니고, 대한 적십자사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 직원 신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972년부터 평양을 가야되는데, 국가보안법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통치행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누군가 회담 참가인원을 정보부 신분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꺼냈어요. 정보부라면 공작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사람들 접촉이나 오고 가는 것이 합법화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973년 2월 1일부터 정보부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보부의 이사관이 되었어요. 나는 정보부 이사관이지만 남북회담사무국 울타리 안에서만 있었지 중앙정보부 본래 분위기에 휩쓸린 적도 없어요. 남북대화 업무를 해보니 중앙정보부가 아니면 안 되고, 중앙정보부의 외청 비슷하게 회담사무국을 가지고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연구자: 선생님께서는 심리전 총국장 역할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중앙정보부 심리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지금은 국정원이 어떻게 심리전 활동을 소화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국가심리전총국’이라고 했어요. 심리전에는 대내심리전, 대외심리전, 대북심리전 3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을 모두 다루면서 국가 정체성 관리를 정보부에서 한 거죠.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육과 홍보를 중앙정보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부의 관계부처를 배후에서 통합하고 조정 했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이 정부에 없어

서 지리멸렬해 있는데, 국정원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청와대 안에 종합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외심리전은 해외 여러 언론이라든가 여론을 수집하고 순화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심리전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하는 것이죠.

## 10. 자유아카데미 학생 모집과 활동

연구자: 강인덕 국장님 얘기하시면서 자유아카데미 이야기를 하셨는데, 2년간 배출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했고, 지금 여기 출신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술자: 말하자면 사회교육을 심화하는 대학교 졸업생들 가운데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어요. 학생 모집을 했는데 주로 각 학과의 선생님들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한 개 학년을 50명, 60명 정원으로 했어요. 당시 중앙정보부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관련 원서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습니다. 원서를 자유롭게 읽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1기 졸업 후에 보니, 대학들이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로 나간 친구들이 열 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잘 풀리지 않아서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 생겼습니다. 몇몇은 대학에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담당 교수로 갔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후에 30년 동안은 대학교에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하는 데 자유아카데미 졸업생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 11.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작성

연구자: 말씀을 들어보니 이범석 국토통일원 장관과 인식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남북회담사무국장을 하시면서 조직 운영에서 혹시 마찰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술사: 1970년대 초기 대화 때, 이범석 씨가 적십자회담 수석대표를 했습니다. 이범석 씨는 욕심이 많고 의욕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회담 대표단을 자기 맘대로 조정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안됐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이범석 씨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친해요. 내가 신문기자 할 때 그분은 외교부 의전실장을 했어요. 서로 정일권 총리하고도 가까워서 만나면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9월에 통일부 장관으로 오게 됐는데, 예감이 ‘오면 사고 일으키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중앙정보부가 이 빠진 늪은 호랑이가 됐잖아요. 더구나 10·26사태 이후인데, 이범석 씨가 전두환 사령관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남북대화 업무를 가져갔습니다. 남북대화 업무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에게 국장이 직접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중지시키더라고요. 나는 남북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공교롭게 1980년 7월쯤에 삼성그룹 이건희 부회장을 내가 누구 소개로 몇 번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고 그랬어요. 나한테 자꾸 권유를 하더라고요. 남북회담도 자꾸 담보하고 그러는데, 그만두고 삼성에 와서 기업 경영 공부 안하겠느냐고 해요. 나는 사실 기업 경영에 전혀 연고가 없잖아요. 경제학을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없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경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범석 장관하고 불필요하게 옷자락이 스치고, 자꾸 이 사람이 나를 의식해요. 내가 9월 어느 날 이견희 부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말씀 하시던 거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빨리 정리하고 나오라’고 했어요.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9월 어느 날,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자고 전화를 했어요. 갔더니 대한민국 정부에 종합적인 통일정책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1980년 10월에 북한에서 고려연방공화국창설방안이 나오고 선전을 해서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예요. ‘대통령이 외무부, 통일부, 중앙정보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잘 될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이 당신한테 개인적으로 방안 하나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잘됐다, 이거 하나 만들어놓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입니다. 이것이 내 개인 작품이에요. 개인 작품인데, 작품이 중간에 변질이 됐어요. 왜 변질이 됐느냐하면 내가 남북대화와 북한을 다루어 보니 통일문제라는 게 남북간에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양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일문제 가지고 합의가 될 수 없어요. 합의가 될 수 없으니 통일을 명분으로 하는 남북대화는 성립되도 얼마 못 갑니다. 대화로 가게 하려면 통일문제를 빗겨가는 우회도로가 나와야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이원적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일문제에 대한 토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자고 했습니다. ‘통일의 내용을 정리해서 내세우자. 그러면 북한은 북한대로 통일방안 내용을 가지고 나올 테니 충돌해서 대치상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아깝고, 남

북 간에 통일문제 합의 안 되는 것에만 매달릴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계속 논의 하더라도 우선 가능한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대화 통로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원화 시키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느냐고 해서 이렇게 이원화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문제는 '민족통일협의회'를 만들어서 통일방안은 남북의 동수에게 맡겨놓고, 당국 간에는 현안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일부가 그것으로 전두환 대통령한테 중간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외무부, 통일부, 중앙정보부 의견을 다듬어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무부 차관보, 통일부 차관, 안기부 차장하고 네 명이 모여서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원적인 방법에 대해서 외부부가 반대를 하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원적인 민주화합민족 통일방안은 해봐야 가망이 없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줄로 엮어서 1981년 12월 31일에 청와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12월 31일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장관이 '자기가 직접 보고할 테니까 그날 청와대 들어올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국장이 와서 보고해라'라고 해서 내가 가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은 대만족이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각하께, '소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일 그만두고 나가서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은 삼성그룹에서 와서 경영을 공부하라는 권유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나이도 지금 사십대 중반이니 말미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1982년

1월 10일자로 사표를 내고, 2월 1일자로 삼성에 가서 이병철 회장 고문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자: 통일원으로 남북회담사무국이 이관된 이후 당시 중정에서는 안전기획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남북회담사무국과 안기부와는 어떤 관계였는지요?

구술자: 몸은 통일부에 와있지만 안기부 사람들이 다 나를 안기부 사람으로 생각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안기부하고 협조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어요. 당시에 남북대화전략회의 의장을 내가 하고, 장소는 통일부를 이용했으니까 상황에 변화가 생겼죠.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내가 그만 둔 뒤에 원래 중앙정보부 공작 관하던 송한호 씨가 적십자회담을 위해서 정보부 옷을 벗고 적십자 와서 적십자회담 사무국장 타이틀로 있었어요. 내가 1982년 1월에 그만두면서 송한호 씨를 회담 사무국장으로 전보했어요. 그래서 송한호 씨가 회담사무국장이 됐습니다.

연구자: 당시 회담사무국장을 하실 때는 남북대화를 진행하셨는지요?

구술자: 1980년 3월부터 8월까지 남북 총리 간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열 차례 했는데, 우리 수석대표가 김영주 외교부 대사, 나, 언론인 출신인 정종식 통일부 정책실장이었어요. 그리고 북측은 현준극 로동신문 책임주필, 안병수, 그리고 통전부에서 부장을 지내던 임춘길이었습니다. 여덟 달 동안 했어요.

## 12. 국가안전기획부 특보로의 복귀

연구자: 기업 쪽으로 가서서 있으시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안기부 제1특보로 발탁이 되셔서 지내셨습니다. 다시 정부 일을 시작하게 된 사연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1982년에 삼성 이병철 회장 고문으로 가있는데, 이병철 회장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잘 활용하는 용인술을 가진 분이예요. 1년 동안 옆에다 두더니, 1982년 말부터 자꾸 일선 회사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 양반이 1982년에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반도체 쪽으로 나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내가 반도체 쪽은 겁이 나서 못가겠다고 했더니, 삼성정밀로 보냈어요. 지금은 한화 테크윈인데, 방산 업체예요. 항공기 엔진 정비하고, 부품 만들고 다연장탄이라든가 야간 투시장비, 카메라, 시계, 로봇도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나를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보냈어요. 가서 지금도 참 보람을 느끼는 거는 F-16 국산화 한 거예요. F-16을 면허 생산 방식으로 삼성정밀이 중개업체가 되어 국산화 했어요. 그 후에 1988년에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에 노태우 씨가 당선 되어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를 끌어넣었어요. 삼성에서도 가달라고 해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에 두 달 가까이 있다 나왔어요. 나오니까 총선거가 있고 국회가 구성되면서 국회의장이 김재순 씨가 됐어요. 김재순 씨는 1958년부터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던 분이데, 나보고 비서실장으로 좀 수고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2년을 있었습시다. 그리고 1990년 6월에 임기가 끝나고 나와 있었는데, 김재순 씨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1991

년 1월 1일자로 발족하는 민족통일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나를 내정해서 대통령 결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쉬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9월 달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 됐는데, 남북고위급회담에 각 부처에 대표가 나갔어요. 이 병용이라고 통일원 차관으로 오래 있었던 분이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 원장 제1특보로 6년간 근무했어요. 이 분을 국정원 대표로 보냈는데 성격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대표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서동권 부장이 답답해했어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서동권 부장이랑 이병용 씨가 경북 영천사람이고 이병용 씨 손 위 형님하고 서동권 부장하고 초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서 서동권 부장이 이병용 씨한테 6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옮길 때가 안됐느냐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이병용 씨는 통일부장관이 소원인데, 통일부가 그동안 격상되어서 장관이 부총리가 됐어요. 차관을 지내고 바로 부총리로 가는 거는 부담스럽다고 본인이 느끼니까 내년 1월 1월부터 민족통일연구원이 생기는데, 원장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동권 부장이 잘됐다면서 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일원에서 경제를 오래 담당했고, 미국 박사고 책임자니까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민족통일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병용 씨가 민족통일원 초대원장으로 오고 나는 서동권 부장 1특보가 되어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나갔어요. 1차 회담에서 홍성철 통일부 장관이 대변인을 하는데, 대변인을 영망으로 해서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차 회담 때 임동원 씨로 바꿨는데, 임동원 씨도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4차 회담부터는 나를 대표 겸 대변인으로 했고, 회담전략을 내가 좀 주관하게

됐습니다.

### 13.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이인모 송환 논란

연구자: 당시 노태우 정부가 역동적으로 '북방정책'을 펼쳤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구술자: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에 취임하고, 남북관계에 핵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변의 핵시설은 우리 중앙정보부가 1984년에 판단을 해서 미국 중앙정보국에 영변의 핵개발 연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미국이 전략정찰자산이라고 해서 U-2, SR-72, F-4와 같은 여러 가지 기종의 공중 정찰 자산을 운영해요. U-2는 전략정보자산이라고 해서 미국 본토에서 관리를 합니다. SR-72 이하는 촬영한 사진이나 감청한 보이스를 일단 경기도 오산시에서 내려요. 오산에서 내려서 초보적인 중간 처리를 한 후에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777부대 병영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정보를 빼서 국방부 정보국을 경유하여 중앙정보부로 정보가 새었습니다. 북한정보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영역이 생겼어요. 그런데 1984년 영변에 원자력발전소와 재처리 시설이 건설되는 정황이 나왔어요. 우리 정보부가 미국 정보부에 알렸어요. 나중에 미국 CIA 랭글리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구나 싶었는데요. 미국 중앙정보국은 세계 199개국을 상대로 해요. 입수된 첩보를 분석, 평가, 처리해야 비로소 정보가 되는데, 분석, 평가, 처리는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를 199개국에 다 배정할 수가 없으니 중요한 나라에만 전문 분석평가요원을 배정합니다.

나머지 나라는 첩보는 있지만 정보는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목살을 합니다. 북한도 그렇게 목살을 한 거예요. 1989년 10월에 프랑스의 상업 위성이 영변을 아주 굉장히 잘 찍었는데, 틀림없이 재처리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깜짝 놀라서 1990년 초에 북한분석팀을 만들었어요. 분석팀 팀장이 군사과학공상소설가였어요. 있는 자료를 분석했는데, 문제가 심각하니까 1991년 9월에 미국 국무성 군축국장 레먼(Ronald Lehman)이라는 사람이 방한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핵문제를 다뤄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랭글리에 가보니까 미국 CIA 분석관들의 분석 능력이 아주 유치하더라고요. 그때 제일 유명한 분석관이 헌터라는 여자예요.

연구자: 헬렌 루이스 헌터(Helen-Louis Hunter)죠.

구술자: 열심히 하는데 유치한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핵을 놓치다가 1991년부터 챙기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미국 CIA의 분석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연구자: 제1특보 하시면서는 기억에 남는 말씀이나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었나요?

구술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 옆에 김종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가 있었어요. 김종휘 수석이 굉장히 의욕이 많은 사람이고, 옆에 박철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철언 씨는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두환 때부터 부정적인 일을 많이 했습

니다.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북한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보고 하는 것을 부풀리고 각색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양에 몇 번 갔어요. 박철언 씨가 김일성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한 번 만났어요. 장세동 경호실장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는데 수행해서 배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은 물론 노태우 대통령과 친척관계예요. 그래서 관계를 이용해서 남북관계에 굉장히 장난을 많이 했고,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도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김종휘 수석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화해예요. 북방외교의 종착역은 평양인데, 북방외교의 표어는 ‘모스크바와 북경을 거쳐서 평양으로’예요. 근데 이걸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절대 모스크바와 북경을 통해서 평양으로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김종휘 수석은 그게 가능하다고 봤어요. 모스크바와 북경까지는 됐는데, 평양은 끊어져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모스크바와 북경을 거쳐서 평양으로 간다는 종착점으로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하고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90년 9월에 소련과 우리나라가 국교정상화 됐고, 이듬해에 중국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정부 대 정부보다 중국을 상대로 진출하던 몇 개 대기업 인맥이 많이 작용했어요. 중국은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예요. 그런데 1972년 미·중 수교 결과로 대만을 몰아내고 중국이 UN에 들어와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됐지만,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를 안 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놀아줄 상대가 없으니 비동맹하고 제3세계하고만 어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 이용가치를 보고, 문을 열고 우리를 상대를 하는

거죠. 나는 1990년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왜 열렸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대부분 빗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1980년대 중반부터 통일전선 외교를 벌입니다. 국방장관회담도 제안하는데, 1990년 가을에 고위급 회담으로 수용을 했지만 1989년 9월 회담이 성사된 건 그 다음해입니다. 북한은 당시 가장 급한 현안이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UN 가입 저지, 둘째는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셋째는 이인모 송환입니다. 북한이 이인모 문제를 1990년부터 1992년 2월까지도 정식으로 거론을 안 했어요. 전에 1990년 10월에 <말> 지(誌)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말>지가 이인모와 이인모 부인과 딸 사이에 오고 간 편지로 특집을 했어요. 이인모 내외는 이혼하고 이인모 부인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말>지에서 이인모가 1987년에 비전향 장기수로 있다가 출영을 했는데, 원래 동지관계였던 김해에 사과농장을 하는 친구에게 가서 있는 이인모를 인터뷰 했어요. 인터뷰한 결과 라이프스토리(life story)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북경을 통해서 북한에 보냈어요. 북한에서 그걸 보고 부인을 찾고 딸을 찾고 해서 부인은 이혼을 시키고, 편지를 주고받게 만들었어요. <말>지가 1990년 10월호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내가 <말>지를 봤는데, <말>지에 조모 기자라고 나를 잘 따르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간첩사건에 연루되어서.

#### 14. 남북기본합의서 막전막후와 훈령조작사건

1991년 12월에 3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북한 기자들이 이인모를 자꾸 얘기하고 전화도 해요. 이인모가 김해에서 올라

와서 회담장 근방에서 차량 이동 중이라고 하니까 북한 기자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이인모하고 접선을 한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가 항의하고 합의사항과 어긋난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도 북한은 가만있었어요. 1991년 12월에는 5차 회담, 1992년 2월에 6차 회담을 했는데,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키는 회담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죠. 2월에 대표회담을 하는데 이인모 문제를 들고 나오더니 이인모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이룰 수 없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자'고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북측에서는 계속 '이인모를 보내준 뒤에 남조선 대표단 성원들이 평양에 오면, 인민들이 일떠서서 환영하겠지만 이인모를 안 돌려주면 북한 인민들이 본체도 안 할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후에 2월 16일에 보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회담석상에서 이인모를 석방하는 기본 발언문을 연혁묵이 말했어요. 이인모 문제는 1992년 5월 서울에서 있었던 7차회담에서도 북측이 거론했기 때문에 이인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한 끝에 7월 7일에 정원식 총리의 서한을 연혁묵한테 보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산가족을 자의에 의한 이산가족 문제만 다뤘는데 남북 간에는 타의에 의한 이산가족이 많다. 국군 포로도 있고, 남북 여부도 있고, 비전향 장기수도 있으니 그 문제를 일괄해서 다루고 노령, 고령자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자. 그 일환으로 우리는 이인모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제기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얘기하자'는 내용으로 서한을 보냈더니 이를 뒤에 '안 된다. 이인모 보내라'는 답변이 왔어요. 2월의 6차 회담을 통해서 두 가지 합의 문건을 발효시켰는데 떠나는 날 북쪽에서 우리 대표단 개개인 앞에 선물이라면서 '세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 자서전 중에 3권이 나왔다고 가져왔어요. 읽어보니까 2권에 희한한 대목이 들어있어요.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이 왜정시대에 일본

경찰서를 습격해서 오바시(땅벌)라고 하는 일본 순경을 쏘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동네사람들한테 일장 독립 연설을 했는데 나와 있었던 동네 사람들 가운데 소학교 아이 한 명이 이인모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성 가계 우상화에 한 장을 만들어 놓고 뒷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인모를 부르는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92년 5월에 7차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느닷없이 ‘지난 2월에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시킨 기념으로 남북 고령 이산가족 및 연예단을 한 차례 교환하자, 이것은 무조건 하자’고 했어요. 그 구체적인 절차는 적십자 실무자들에게 맡기자고 해서 8월에 적십자 실무자들이 만났어요. 이 문제에 관하여 5월에 합의해서 8월에 적십자 회담에 넘겨줬더니 이인모 문제, 팀스피리트 문제, 국가보안법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9월에 있었던 8차 회의에서 우리는 이인모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부속합의서를 채택하는데, 이인모 문제가 방해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 문제로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대책회의를 했어요.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결정을 했냐하면 ‘이인모 문제로 협상을 한다. 우선, 고령 이산가족·연예단 교환 문제는 무조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북한이 들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인모 복송을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당시 고위급회담은 상대측 대표단이 서울이나 평양에 도착한 날 오후에 ‘대표회담’을 가지고 회담진행방법에 합의한 뒤 다음날 회담을 합니다. 전날 대표회담을 하면서 의제 토의를 하는데, 의제 토의하러 갔더니 이인모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쪽에서 ‘우선 이인모 문제를 우리가 안 다룬다는 것이 아니다. 북쪽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지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자. 세 가지 문제 중에서 두 가지를 들어주면 이인모 복송하겠

다.’라고 하니깐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판문점에 우편물 교환소를 만들어서 무제한으로 우편물을 교환하자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한 번 얘기해볼 수 있다고 하면서 깨졌어요. 이틀 날에는 본회담을 했는데, 본회담에 정치분야 부속합의서에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어서 회담을 계속 못하고 일단 쉬고, 저녁에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단독회담을 해서 부속합의서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내 상대는 백남준이었습니다. 교류협력분야는 거의 타결되었고 군사분야는 몇 가지 현안이 남아 있었어요. 회담이 끝나고 북쪽에서 남포갑문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남포갑문을 보고 오는 길에 청춘각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나는 갑문 갔다 와서 기자들하고 한 시간 정도 정리를 하고 청춘각에 갔더니 우리 대표들이 술을 많이 먹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내가 뻘어있는 대표 한 명을 부추겨서 차에 싣고 일단 호텔로 들어왔어요. 그날 1시부터 위원장 회의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다 쓰러져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9시에 각각 따로 분과위원장 회의를 시작했어요. 내가 백남준을 상대로 하는데, 정치분과는 진전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11시 20분이 됐는데 노크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상황실장하던 엄익준 실장, 김용환 책임연락관이 왔어요. 지금 수석대표한테 보고드리는 내용이라면서 쪽지를 줬어요. 임동원 대표가 서울로 보내라면서 전문 원고를 줬는데 이상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보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인모 문제를 약속하면 북쪽에서 이산가족 서한 교환을 판문점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 같습니다. 이인모 보내주는 것을 결심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지침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백남준한테 ‘잠깐 정회하자’하고 총리한테 가서 자고 있는 총리를 깨웠어요. 이거 보셨느냐고 물으니까 보지는 않았고, 임 대표가 아까 와서 서울에 전문 보낼 게 있는데, 보내겠다고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내용은 모르겠다고 해요. 이런 내용이라고 보여드리니까 ‘이건 아닌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이건 나중에 얘기 합시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과정에서 남북 간에 정상회담 움직임이 생겼죠. 정상회담에 여러 자천타천 중매꾼들이 나왔어요. 회담석상에서 김종휘 수석과 임동원 대표가 최우진을 자꾸 꼬드기고, 회담장 밖에서는 김우중 씨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상대로 자꾸 정상회담 얘기를 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심복인 엄삼탁 국정원 기획관리실장이 북한의 호위총사령부에 누구를 상대로 해서 꼬드겼습니다. 한번은 엄삼탁 씨가 ‘이 특보님 모시고 갈 데가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청와대 김옥숙 여사 방으로 가더라고요. 김옥숙 여사가 나오더니 우리 내외가 엄 실장한테 정상회담 관계 심부름 좀 시키고 있으니까 이 특보께서 잘 좀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1992년 1월이 되니까 신문에 여기서거 정상회담이 터지고, 1992년 3월에 개성에서 회담이 열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동권 부장한테 ‘우리가 회담을 하는데, 옆에서 정상회담 소리가 나오면 회담이 되겠습니까. 저는 평양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면서 청와대를 갔다왔어요. ‘내가 각하께 납득을 시켰으니 금요일에 이 대변인은 고위급회담 대변인 성명을 내라. 같은 시각에 국무회의에서 정원식 총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가령 말이 나와도 북쪽에서 나와야 되고, 남쪽에서 얘기나 아무런 합의가 된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발표해라.’라고 해서 그대로 발표했어요. 1991년 1월 안기부장 1특보로 갔을 때, 김종휘 수석 방에 민병석이라고 보좌관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정상회담 문제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김종휘 수석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방해를 한다면 김종휘 수석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베갯머리 송사 아시죠? 베갯머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남짓 뒤에 정상회담 문제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1992년 9월에 8차 회담이 있는 후에 김종휘 수석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냈는데, 이동복이가 훈령을 위반하고 변조, 날조했다 하는 내용으로 훈령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큰 열개는 이렇게 된겁니다. 소위 북방외교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하려는데, 중국과 소련은 그렇게 되고 북한은 돌아앉아버렸죠. 1992년 1월에 서동권 부장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정상회담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받은 연유가 있어요. 1990년 10월에 서동권 부장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나서 이들에게 잘못 붙잡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분이 철저하게 머리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격식을 갖춰서 되어야지 우물쭈물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던거죠. 그러다보니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외교는 소련과 중국하고의 수교까지는 잘나갔지만 그 이후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북방외교와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15. 대북정책 관련 부처 사이의 관계와 정책 추진

연구자: 지금까지 경험하신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 간의 체계와 관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술자: 그 문제는 대북정책의 분업화를 해야 합니다. 통일정책과 분단관리정책, 남북대화, 통일과 대화를 분업화해서 주관하는 책임자를 구별해야합니다. 그래서 통일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

는 통일정책만 해야 하고, 남북대화는 분단관리의 차원에서 별도의 관리체제를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도 작업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남과 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해요. 통일은 남북한 간 차이를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려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한 간에 통일문제로 논의할 때,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좌파 정부 때 남북한 간 이질화를 절대로 다루지 못하게 했잖아요. 소위 남북 사이를 나쁘게 한다, 북한을 자극한다고 했죠. 그런데 남북한의 이질화를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은 시끄럽게 할 것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남북이 어떻게 다른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하면, 남북이 우선 기본권과 기본 자유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게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북한 간에 이질화를 분야와 요소별로 파악해서 정리하는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통일부에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해서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거주 이전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과거에 남북대화를 할 때도 통일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 헌법공부를 안 해요. 헌법 정독을 하고, 북한과 대비표를 만들어서 대비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통일은 이런 내용의 통일이다.’, 통일과 국제관계의 가치가

이렇게 쳐져야 되는 것이죠. 통일부는 현실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이러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연구해야 하지만, 달성됐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비견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북한 내부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북한이 종반에 와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미국이 1860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을 해요.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나요. 끝나자마자 남부 10개주에 말이지, 아주 짧은 시일 안에 북부지역의 투기꾼들이 몰려가서 남부의 모든 이권을 모두 다 장악했어요.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이 다급해지니까 남부 10개주에 계엄령을 선포하지요. 그러나 곧 군이 부패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1869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그랜트(Ulysses S. Grant)가 2년도 안 돼 계엄령을 해제하죠. 북부지역 사람들이 철저히 남부를 수탈합니다. 그 후 남부사람들이 북부사람들에 대한 한을 풀고 미합중국의 국민으로서의 인식을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940년대에 와서 겨우 남부사람들이 합중국 깃발을 걸어놓고, 유니온 기를 떼는 현상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국사학자들이 이 시기를 'America in Gilded Age(도금된 미국)'라고 일컫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가령 통일이 된다고 합시다. 내가 보기에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걱정이예요. 통일되면 남쪽의 온갖 잡스러운 요소들이 북한의 이권을 다 장악할 겁니다. 또 하나는 북쪽 사람들이 통일된 사회에 참여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양독을 보면 1990년에 독일 통일이 되기 이전에 서독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때 3위가 일본인데, 2위하고 3위가 엄청난 차

이가 있었어요. 통일이 된 지금, 통일된 독일의 경제력은 아마 5위일 거예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유럽연합(Eu), 5위가 독일일 거예요. 통일된 과정에 그만한 손실이 생겼다는 것이죠. 손실이 어디서 생겼는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서독 마르크화를 등가교환을 한 데서 온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로는 서독이 소련 점령 기간 중에 이루어진 국유화는 문제를 안 삼지만 동독이 독립한 뒤에 이루어진 국유화는 원래 주인들이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소위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합니다. 소유권 확인 소송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소송 대상 물건은 담보 설정이 안되니까 경제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일 독일의 경제력이 그만큼 상처가 생겼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하지만 서독 사람들하고 부대껴보니 서독민들이 도둑놈이고 사기꾼 같거든요? 동독 사람들 3분의 1은 일을 안 하잖아요. 집에 들어앉아서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태가 남북한 간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독과 동독의 인구비는 4대 1이고, 우리는 2대 1입니다. 그 4분의 1 동독은 절반 이상이 사실상 서독화 되어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를 통일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가 요소별로 문제화하고 과제화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남북대화 업무와 분단관리 업무는 대통령의 통치권하고 관계있으니 대통령 직속으로 하거나 총리실에다가 두어 전담 테스크포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관계 부처와 통일부 정책 요원이 전략과 정책 문제를 조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통일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돼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구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구술자 상세 프로필

- 1937. 9. 26. 강원도 원주 출생
-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2년 중퇴
- 1990.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 1958. ~ 1971. 한국일보사 근무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외신부 차장]
- 1972. ~ 1982.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 1973. ~ 1980. 중앙정보부 근무
  - 남북회담사무국 공보실장/부국장(1973-1977)
  - 부장 특별보좌관(1977)
  - 국가심리전총국장(1977-1979)
  - 부장 특별보좌관(1979)
- 1980. 남북총리회담 준비회담 대표
- 1980. ~ 1982.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장
- 1982. ~ 1988. 삼성그룹 근무
  - 회장 고문
  - 삼성정밀공업(주) 대표이사 부사장
  - 삼성항공산업(주) 대표이사 부사장
- 1988. ~ 1990. 국회의장(김재순) 비서실장
- 1991. ~ 1993.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대변인/정치분과위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 제1특별보좌관
- 1994. ~ 1995.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가스턴 시거 동아문제연구소 초청연구위원
- 1994. ~ 1996. 민족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1996. ~ 2000. 제15대 국회의원(자유민주연합·전국구)
- 2000. ~ 2004.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초빙교수
- 1995. ~ 현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연구위원
- 2003. ~ 현재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2008. ~ 현재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상임고문  
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0.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diah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욱 외	22,500원

## 연구보고서

### 2014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 북한인권 ■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2호	이금순 외

###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 2015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체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 ■ Study Series ■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 연례정보고서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8,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 기 타

---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북한·통일 종합정보 구축(5/5년차)

#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